

발간사

지난 해 2000년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관대전환을 이룬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희망의 새 천년을 여는 첫 해이자 동시에 우리 민족이 분열과 대결을 마감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과 번영을 향해 나가는 첫 해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000년 6월,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토대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요 현안문제들을 협의·이행함으로써 남북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협의체로 각종 분야별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남북 당국간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교역액이 총 4억 2,515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 경협 관련 4대 합의서 타결 등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분단 반세기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례의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실현된 것을 비롯하여 생사확인, 서신교환과 상봉면회소 설치 등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개·폐회식에 남북선수단이 동시 입장함으로써 전세계인을 감동시켰는가 하면, 언론사 사장단 방북,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왕래를 통해 상호신뢰 구축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남북간 인적왕래는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7,986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남북간 화해협력의 흐름이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 속에 북·미, 북·일과의 관계 개선이 시작되고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실리를 추구하고 대외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등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 들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사고」를 강조하고 중국의 개혁·개방 현장을 방문하는 등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 국제사회의 지지, 그리고 북한 변화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1년에 남북간 평화와 협력이 본격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올해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추진하되,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경제협력 관련 4개 합의를 시행하고,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건설, 북한의 변화 노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상생(相生)의 경제공동체 건설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산가족문제는 생사 및 주소 확인, 서신교환을 확대하고 상봉면회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제도적 해결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예술,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협정 체결 추진 등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 속에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평화와 화해, 협력과 번영을 향해 나가는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분열과 대결로 지속된 55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적지 않은 난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해 폭넓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이에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과 신축성을 조화시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01 통일백서」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이룩한 작년 한해의 대북정책 성과와 통일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책 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001년 2월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제1절 대북 화해협력정책 추진

분단이후 우리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의 내용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남북간 역학관계 등 환경적 요소에 따라 변해 왔으며, 다소 시차는 있지만 크게 볼 때 국제냉전의 확산·조정·해체 등의 변화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해 왔다.

1. 「국민의 정부」 이전의 대북정책 개관

분단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국제냉전질서의 확산과 함께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가운데 치열한 대결로 일관했던 기간이라 하겠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UN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이는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북한당국을 철저히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방법론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특히 UN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정부도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는 등 약간의 변화는 보였으나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부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한편 1961년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초기 ‘반공태세의 재정비·강화’와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에 주력한다는 이른바 「선 건설, 후 통일」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월 10일 연두교서를 통해 정부의 통일방안은 UN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실지회복에 의한 국토통일임을 밝히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동·서간의 냉전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68년 7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대에 들어 미·중, 일·중의 접촉과 미·소·일·중 4국간에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1960년대 우리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남북간 역학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게 됨에 따라 대북정책도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적십자회가 수락함으로써 분단 26년만에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을 통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남북대화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이른바 대화환경의 개선, 군사문제의 우선해결 등을 요구하며 통일전선전략을 노골화함으로써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남북관계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1981년 3월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1982년 2월 1일 이의 후속 실천조치로서 20개항에 걸친 구체적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였다. 특히 1984년 9월 8일 북한의 대남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84년 11월 15일 개최된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후에도 남북간 대화는 계속되었으나, 북한이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세우며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처럼 이 시기는 국제냉전이 조정국면에 들어섬과 함께 남북관계도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기본적으로 체제경쟁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모색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때로는 대화를 통한 화해분위기가, 때로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대결과 대화가 교차되는 관계’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대 후반 국제냉전이 해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또 한번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선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국제 냉전의 해체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1988년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또한 그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11일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또한 제7차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1992년 9월에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1993년 1월 29일 모든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도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였으나,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제재조치에 ‘서울 불바다’, ‘전쟁불사’ 등 발언으로 위협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후 미·북한간에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1994.10.21)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한편,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을 직접 지원하는 등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대북 경수로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회피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는 경색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2. 대북 화해협력정책 추진 배경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한 것으로서,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입장하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과 북한 및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가.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1980년대 동구 공산권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제적 냉전질서가 종식되었다. 이후 세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화와 정보화, 개방과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오고 있으며, 과학·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바탕으로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아·환경·테러·마약 문제 등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 역내국가 내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 세계 모든 나라는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장벽을 넘

어 화해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일·중·러 주변 4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그들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 도전과 기회라는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제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반세기에 걸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민족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대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21세기 우리 민족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정부는 이 같은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 관계를 불신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체제는 이미 실패했고 변화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채, 고립과 폐쇄의 길을 고집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는가 하면, 이른바 에너지난·식량난·외화난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등 체제이완현상이 나타나면서 한때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이나 한반도 주변정세를 볼 때,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점진적인 개방·개혁 정책을 통

해 체제생존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한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동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이후 조심스럽게 변화의 조짐을 보여 왔으며, 특히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가격·수익성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가 하면, 관료들을 서방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같은 변화가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일단 북한이 변화의 방향으로 들어선 이상 앞으로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폭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하겠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에 입각하여, 정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와 우리의 주도적 노력 필요성

분단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체제경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남북간 국력격차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남북간 체제경쟁에서도 우열이 분명히 드러났다. 특히 1980년대 말 구 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에 대한 역사적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과 남북간 체제 경쟁이 더 이상 무의미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남북간에 차이가 현격해졌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비록 병력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으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남북간 국력의 차이로 볼 때 우리의 군사적 억지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긴밀한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대북 군사 억지력은 일층 확고해 질 것이다.

이 같은 남북간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21세기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간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어 우리 민족의 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실현해 나가야 하는 민족사적 소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우리의 대북 군사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주도적인 입장에서 남북간 공존공영을 실현함으로써 21세기에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민족의 번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역사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3. 대북 화해협력정책 목표, 원칙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③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을 대북정책의 3 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유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평화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때 북한도 무력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변화의 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고, 남북의 대규모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과제이다. 아울러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한반도 안보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평화를 지키는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나.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통일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단순히 체제나 영토를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여건을 꾸준히 마련해 가는 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욱이 남과 북은 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대결하고 반목하면서 살아 왔기 때문에 상호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타방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급작스런 통일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며, 실현된다 해도 그 충격과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 오랜 기간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당장 법적, 제도적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를 바탕으로 단계

적·점진적으로 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우선 남북간 평화공존의 관계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려는 것이다.

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 쌍방이 필요로 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간 화해협력은 상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간에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근원적으로 약화·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하여,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4.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표명과 베를린 선언

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표명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도 신년사(1.3)에서 대북정책 중점사항으로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남북화해협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성의껏 제공하되, 상호이익·공존공영의 틀에서 경제교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협의를 제안하였다. 정부가 제안한 「남북경제공동체」는 교역과 경험 등 다양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폭과 심도를 확대함으로써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남북관계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정부가 이와 같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표명하게 된 데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연계하지 않고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협 활성화 및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 조성에도 합의하는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었다. 정부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표명한 것은 이처럼 현재 진행·발전되고 있는 남북간 교역과 경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상호이익을 확보하고, 민족경제의 통일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특히 남과 북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효과는 훨씬 크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남북 주민간 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정부는 우선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참여하여 자본과 기술,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간에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하면서 북한의 경제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와주고, 궁극적으로는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베를린 선언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강연을 통해 대북 경제지원, 평화정착, 이산가족 문제해결 및 당국간 대화 등 한반도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해·협력 선언」(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

「베를린 선언」은 남북간 평화공존이 실현 가능한 대세가 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의 개막을 맞아 남북 화해·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독일통일의 현장인 베를린에서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이다.

「베를린 선언」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

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물론,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경협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북한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이 이루어야 할 현실적 과제는 냉전종식과 평화공존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공존공영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은 엄청난 경제·사회·문화·심리적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 남과 북이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넓혀 나가자는 것이다.

셋째,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인도적 차원에서는 물론, 이산 1세대들이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성격상 남북당국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에게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 것이다.

넷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자는 것이다.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문제를 자주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는 민족의 장전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선 남북 정상간 특사교환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처럼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실천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한 것으로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오도록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제2절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1. 비공개 특사 접촉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3.9)이 나온 직후 북측은 비공개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측에 특사 접촉을 제의하고, 이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 같은 북측의 제의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특사로 임명하고 북측 인사와 접촉케 했다.

남북간의 첫 특사 접촉은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약칭 아태) 부위원장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이후 3월 23일과 4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특사 접촉을 두 차례 더 갖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최종 합의(4.8)하였다.

다음은 남북의 두 특사가 서명한 합의서 전문이다.

< 남북합의서 >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중에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00년 4월 8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 지 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 호 경

남과 북은 2000년 4월 10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2.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

「4.8 남북합의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이 판문점에서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5차례 개최되었다. 이 접촉에는 우리측의 양영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와 북측의 김령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를 단장으로 한 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남북당국간 대화가 판문점에서 개최된 것은 199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 한 국 측 | | 북 한 측 | |
|-------|-------------|-------|-------------------|
| 수석대표 | 양영식(통일부 차관) | 단 장 | 김령성(최고인민위 상임위 참사) |
| 대 표 | 손인교(통일부 국장) | 대 표 |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
| | 서영교(통일부 국장) | | 권 민(아태 참사) |

쌍방은 제4차 준비접촉과 제5차 준비접촉 사이에는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2000년 5월 18일 제5차 준비접촉에서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4.8)한 데 따른 주요 실무절차 문제를 타결하고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준비접촉에서 남북은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가장 쟁점이 되었던 정상회담 의제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타결하였다. 이러한 의제 채택은 남북정상회담의 목적과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외에 분명히 천명하는 의미가 있었다.

준비접촉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을 최소 2~3회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정상간 논의의 기회가 최대한 마련되었다.

또한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간 위성통신망을 구성·운용하기로 하였고, 우리측 인원과 장비로 직접 촬영·제작한 TV 실황방송을 북측의 협조를 통해 위성중계 함으로써 7천만 겨레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 < 주요 실무절차 합의내용 > —

- 대표단 구성
 - 수행원 130명, 취재기자 50명
- 회담형식과 횟수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상봉과 회담을 최소한 2~3회 실시(필요시 추가)
- 회담 의제
 -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 선발대 파견
 - 방문 12일전 30명 파견, 판문점을 통해 왕래
- 왕래 절차
 - 항공로 또는 육로 이용
- 신변안전보장
 -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불가침을 원칙적으로 보장
- TV 실황중계
 - 실황중계를 위해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제작
- 위성 통신망 구성·운영
 - 기존 서울·평양 직통전화선과 함께 위성통신망 이용

쌍방은 준비접촉과 병행하여 통신·보도 실무자접촉(5.13, 5.17)과 의전·경호 실무자접촉(5.16)을 개최하여, 관련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통신·보도 실무자접촉에서는 대통령의 국가지도통신망(남북직통전화, 중국경유 광케이블, 위성통신 사용), 남북직통전화(30회선), 국제전화회선(30회선), 휴대용 위성장비 반입 보장 등에 합의하였다.

의전·경호 실무자접촉에서는 근접경호, 숙소경호 방식, 행사장 사전 점검, 경호장비(휴대품 탐지기 등) 반입, 비상구급대책(24시간 의료진 확보)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한편, 통신·보도, 의전·경호 실무문제와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측 선발대의 방북시 협의·확정되었다.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을 단장으로 30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정상회담 선발대는 5월 31일 판문점을 경유하여 평양에 도착, 남북정상회담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점검하는 한편, 통신·보도, 의전·경호 등 실무문제들을 북측 실무진과 협의·확정하였다.

북측은 정상회담 준비기간에 선발대 30명 중 일부인원이 교체되어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오가는 것을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측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였다.

3.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준비기획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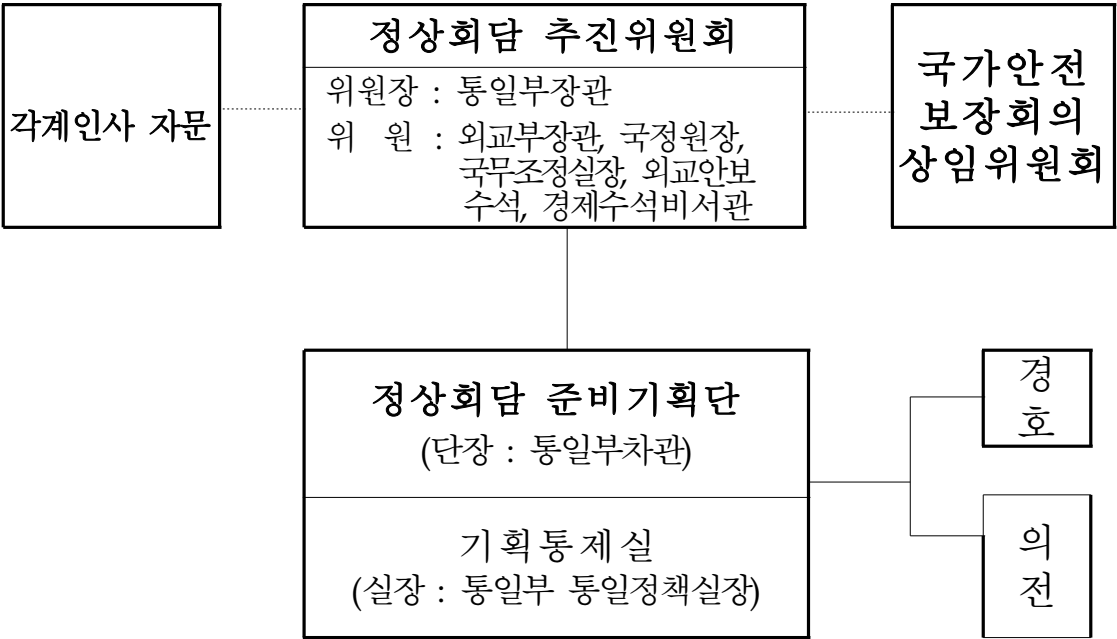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맞춰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00년 4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6명으로 구성되어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총괄·지휘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국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산하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통일부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방부 정책보좌관,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심의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청와대 경호처장, 통일비서관,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준비기획단은 정상회담 준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무적으로 기획·조정하면서 4월 22일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준비접촉 과정을 뒷받침하였으며, 회담준비상황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준비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비기획단 안에 사무처 성격의 상설기구로서 기획통제실(실장 :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두었으며, 여기에 통일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16개 부처 관계자가 참가하여 각종 점검사항들을 확인하고, 부처별 협조를 하였다.

<정상회담 추진준비 체계도>



제3절 남북정상회담 진행과 6·15 남북공동선언

1. 남북정상회담 진행

가. 진행 개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우리측 일행이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초 6월 12일부터 방문하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6월 10일 저녁 늦게 긴급 대남전통문을 통해 “기술적인 준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토록 변경해 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해 옴에 따라 하루 늦춰진 것이다.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는 수행원 130명(선발대 30명 포함), 기자단 50명이 참가하였으며, 수행원은 공식수행원 11명, 특별수행원 24명, 일반수행원 95명으로 구성되었다.

《 공식 · 특별 수행원 명단 》

| 공식수행원 | 특별수행원 | |
|-----------------------|--------------------------|--------------------------|
| 박재규 통일부 장관 |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
|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 이해찬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회장 |
|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 이완구 자유민주연합 당무위원 | 이원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
| 임동원 대통령 특별보좌역 | 장 상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 |
|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 강만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
| 안주섭 대통령 경호실장 | 차범석 예술원 회장 | 구본무 LG 그룹 회장 |
| 황원탁 대통령 외교안보수 석비서관 | 김운용 대한체육회 회장 | 손길승 SK 그룹 회장 |
| 박준영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 장치혁 남북경협위원회 위원장 |
| 김하중 대통령 의전비서관 | 박권상 한국방송협회 회장 | 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 |
| 허갑범 대통령 주치의 | 최학래 한국신문협회 회장 | 백낙환 인제학원 이사장 |
| | 박기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문정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 |
| | 고 은 민족문화추진회 상임고문 | 이종석 새종교소남북관계연구실장 |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하는 우리측 일행은 대통령 전용기와 우리 국적 민항기를 이용하여 서해항로로 남북을 왕래하였는데, 남북간 왕래에 항공기가 사용된 것은 분단 이래 최초의 일이었다.

김 대통령은 서울을 출발하기에 앞서 ‘남북정상간 만남이라는 소중한 기회가 55년간의 불신과 반목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교류협력, 그리고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첫 걸음이 되어

야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지도급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공식 환영행사 참가에 이어 의장대를 사열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며 회담을 나누었고,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 직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인사를 나누고, 정상회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월 14일 오후와 저녁에 백화원초대소에서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6월 14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면서 통일 및 남북문제 전반에 대한 상호 입장을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양측 실무진들이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인 문안을 협의하였다.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주최 만찬 후, 밤 11시 20분경 남북의 두 정상은 회담을 갖고 양측 실무진들이 작성한 남북공동선언의 문안을 최종 확인하고, 서명·교환하였으며, 6월 15일 0시 조금 넘은 시각에 내외에 발표하였다.

6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최 오찬을 끝으로 김대중 대통령 일행은 방북공식행사를 모두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대국민 보고를 통해 ‘남과 북은 공존공영으로 21세기에 세계 속의 일류 국가로 웅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남북정상회담 주요 일정 》

| 일 자 | 주 요 일 정 |
|---------|--|
| 6.13(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일행 서울공항 출발, 평양 순안공항 도착 ○ 남북정상회담(제1회, 백화원 초대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문(만수대의사당) ○ 공연 관람(만수대 예술극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 환영 만찬 참석 (인민문화궁전) |
| 6.14(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공식 면담(만수대의사당) ○ 남북정상회담(제2회, 백화원 초대소) ○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 참관 (창광유치원 · 평양수예연구소 · 평양산원 등) ○ 정당 · 사회단체, 경제계, 여성계 인사간 접촉 (인민문화궁전) ○ 공연 관람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 대통령 주최 만찬 (목란관) ○ 남북정상회담(제3회, 백화원 초대소) |
| 6.15(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수행원(답공장) 및 특별 · 일반수행원(동명왕릉) 참관 ○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최 오찬(백화원 초대소) ○ 대통령 일행 평양 순안공항 출발, 서울공항 도착 |

나. 남북정상회담시 주요 대화 내용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난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최고당국자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한다는 입장에 따라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4개 과제와 관련 김 대통령이 강조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국제적 냉전종식과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그리고 지식정보화로 인류사회가 최대의 혁명을 겪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에 한반도만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남북이 대결해서는 안되며,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화해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솔선수범하여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당장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남북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2)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과 북이 상대방을 불신하고 침략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남과 북 모두 공멸하며, 누구도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반대하며, 우리는 북한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 북한도 무력을 사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북간에 미사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이 미·일 등 관계국과 관계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북한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면서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상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3)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전력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4)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들은 고향과 가족·친척들에 대해 절절한 그리움과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문제인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

남과 북이 협력해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주고, 면회소를 설치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광복 55주년이 되는 2000년 8·15를 기해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자.

이상과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과 제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긍과 이해를 표시하였으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측

의 입장을 솔직하게 개진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힌 견해 중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남북이 대결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남북간에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남북간에 구호나 원칙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감을 표시한 것도 과거 북한의 입장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

다. 기타 접촉

6월 14일 오후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특별수행원들은 정당·사회단체, 경제계, 여성계 각 분야별로 북측 인사들과 접촉을 가졌다.

(1) 정당·사회단체 인사 접촉

우리측에서는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완구 자민련 당무위원, 강만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김운용 대한체육회 회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박기륜 한적 사무총장 등 13명이 참여하였으며, 북측에서는 김영대 민화협 회장, 한현욱 천도교 교무위원장, 최우진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장웅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참사 등 6명이 참가하였다.

우리측은 체육·문화·경제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간 신뢰와 이해를 넓힐 것을 강조하고 남북국회회담, 남북작가회담 등과 체육분야에서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교환경기 개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북측 참여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모든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방향이 결정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풀려 나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 경제계 인사 접촉

우리측의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원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10명은 북측의 정운업 민경련 회장, 백

세운 조선컴퓨터회사 총사장, 그리고 개성총회사 및 아태 관계자 등 8명과 접촉하였다.

우리측은 대북투자 확대 및 남북경협 의사를 표명하면서 대규모 투자협력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협력과 경협의 제도적 장치(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측은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주로 우리측 경제인들로부터 남북경협에 대한 구상을 듣는 데 주력하였다.

(3) 여성계 인사 접촉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장상 이화여대 총장은 북측의 여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천연옥 여맹위원장, 홍선옥 조선여성협회 회장 등과 만나 남북여성교류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2000년 7월 4일 북경에서 개최기로 한 「새천년 남북여성한마당」 행사에 직능단체별로 참가하는 방안을 제의하였고, 북측은 정신대 문제와 관련 남북 공동 제소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외 쌍방은 환경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2. 6·15 남북공동선언 주요 내용

가. 남북공동선언

< 남북공동선언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나. 조항별 의미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당연히 그 운명의 주인인 우리 겨레가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며,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통일 3원칙중의 하나로 합의한 바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재확인하고 있다.

민족문제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이중성을 감안할 때 우리 자신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자주’가 외세배격 등 배타적 의미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한 것임을 역설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북한이 자기 체제를 위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던 한·미·일간 국제적 공조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경제적 진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측의 이해를 촉구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자주적 해결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외세 배격, 미군철수 주장 등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겠으며,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2)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그 동안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면서 통일방안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해 왔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1980년대 말 국회공청회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장 통일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만큼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며, 우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연합」을 이루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가자는 방안이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과도단계가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 하에, 이러한 통일준비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연합」을 하자는 것으로, 남북 정부가 현존 그대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와 민족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닦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1980년에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안(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1국가내 2체제를 두고 연방정부가 외교권, 군사권을 갖되 2개의 지역정부가 자치를 하자는 것으로 남과 북 사이에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국가를 당장 이루자는 방안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제」안 설명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현실성을 인정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현존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상호협력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으로서 남북연합과 사실상 같음을 인정하였다.

이번에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분명히 과거의 「연방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연방제는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에 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먼저 교류·협력과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넷째, 남북 양측이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과거 북측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전제조건

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3) 인도적 문제 해결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인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산가족문제의 시급성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즉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 면회소 설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하되, 우선 8·15를 기해 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공감하면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수용하였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2000년 한해 동안, 쌍방 각기 100명씩 이산가족방문단을 2차례 교환(8.15~8.18 및 11.30~12.2, 서울·평양)하였고, 2001년 2월말에 1차례 더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3월에 300명 정도로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문제도 협의·확정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북측에 촉구하여, 제2차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시 납북자 가족이 방북하여 상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2000년 9월 2일 남쪽에 살고 있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사업추진도 합의하여 2차에 걸쳐(1차: 9.22~27, 2차: 11.17~22) 남한에 고향을 둔 조총련 동포들이 고향을 방문하였다.

(4)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제반 분야의 교류 활성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상호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며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견인차이다.

특히 남북경협은 상호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 민족의 복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경협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상호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업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되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남한 내부에 머물렀던 경제 규모는 한반도 전체 차원의 경제 권역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 철도와 개성-문산간 도로를 연결하고 있으며,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개성공단 건설, 북측 어장 사용, 전력협력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등 남북간에 여러 가지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남북간의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는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경제협력에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남북은 예술단 교환 및 예술행사 공동 개최, 체육인 교환 및 공동 체육행사 개최, 언론인 방북, 관광단 방북 등을 실현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한 것처럼, 남북간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단합과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국제경기대회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남북 주민들의 심리적 결속을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민족의 화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의 보건·환경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또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화에 따른 공해와 환경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피해가 우리측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과 환경분야에서의 남

북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남과 북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를 비롯한 제반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5) 남북 당국자간 회담 개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남북 정상이 아무리 좋은 선언이나 합의를 하여도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이에 남과 북은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로써 정상회담 개최 후 약 한 달 뒤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접촉,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등을 통해 남북간 협력사업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협의, 실천되고 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남북관계 개선이 한 순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본인 스스로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남북간 합의에 대해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에 폭넓은 신뢰를 심어주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가 또 다시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3.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 분단 55년만에 첫 정상 만남 및 실천사항 합의 도출

남북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다. 두 정상은 2박 3일 동안 단독회담을 비롯한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상호 입장을 격의 없이 전달하고 공감대를 넓혔다. 그 결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5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원칙적 합의를 양산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합의·서명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또한 두 정상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앞장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남북 당사자간 해결 의지 구현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문제를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커다란 의의라 하겠다.

동서독의 예에서 보듯이, 분단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분단 현실의 인정, 즉 상호 체제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남과 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상대방을 동등한 대화 상대자로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그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변4국의 이해와 협조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당국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의 구축은 매우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특히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가 무산되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제3국(인)의 개입이나 중재 없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교섭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이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기술자·근로자의 접촉은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북간의 효율적인 산업재편은 민족경제의 통합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개성-문산간 도로 연결 사업을 시작했으며, 경협 관련 4개 합의서도 타결하였다.

한편,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남북간 신뢰의 회복이자 화해협력의 징표라 하겠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사이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되고 수 많은 이산가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인식하에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다. 8·15 이산가족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이어 남북은 흩어진 가족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및 재결합 등 단계적, 제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켰으며, 또 이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다양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상호 체제 존중과 긴장 완화를 통해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공존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사실상의 통일이다.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보다 많은 협력을 통해 남북이 서로 오가고 주고받고 돕고 나누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 동북아 평화에 기여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이끌어 냄으로써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두 정상은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변화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긴장요인이었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안보환경에 중대한 위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주변국들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도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라 하겠다.

마.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속적 추진의 결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북측이 초기의 의구심을 버리고 당사자간 대화에 응했기 때문이다. 즉 남과 북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것도 의미가 큰 것이었다.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제4절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 상황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 말까지 짧은 기간동안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1. 남북간 회담의 다양화 · 정례화

남북장관급회담이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되고 남북 당국간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첫 회담이 개최된 이후 정례화되어 정치·군사·경제·인도 등 남북관계 전반을 이끌어갈 중심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남북간 현안을 협의·해결하는 것은 물론, 국방장관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국간 대화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남북연락사무소의 업무도 재개시켰다.

또한,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개최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등을 협의함으로써 안보와 화해협력이 병행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어 남북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된 군사 분야의 협조사항을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협의하였다.

남북경협실무접촉이 두 차례 개최되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절차 등 4개 합의서가 타결되었으며, 「식량차관제공 합의서」도 체결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김용순 특사가 우리측을 방문하여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김용순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실천 의지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각종 문화·산업 시설도 둘러보았다.

남북적십자회담도 두 차례 개최되어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시범적으로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을 실시하는 문제에 합의하였으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각종 회담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 차례의 특사접촉(3.17~4.8, 중국)과 다섯 차례의 남북준비접촉(4.22~5.18, 판문점), 통신·보도 실무접촉, 의전·경호 실무접촉,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포함

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남북사이에는 총 25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한 해동안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이 단 두 차례 개최된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이며, 회담도 다양화·정례화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회담 개최 현황>

| 1998 | 1999 | 2000 |
|--|--|--|
| 총 2회 | 총 2회 | 총 25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당국대표회담(1회) ○ 대북 구호물자 제공관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1회) ※ 4자 회담(2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차관급당국회담(2회) ※ 4자 회담(3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특사접촉(3회) -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5회) - 통신·보도 실무접촉(2회) - 의전·경호 실무접촉(1회) ○ 남북장관급회담(4회) ○ 남북국방장관회담(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군사실무회담(3회) ○ 남북경협실무접촉(2회) ○ 남북적십자회담(2회)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1회) |

2.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실현시켰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남북 각 100명)이 교환되어 총 1,170명이 상봉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차 방문단이 교환되어 총 1,020명이 상봉하였다.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지난 1985년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이후 15년만에 재개된 것으로써, 남북이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신뢰를 쌓

아 가는 단계로서 의미가 매우 깊다. 특히, 남북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면회소 설치·운영 등을 본격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도 이산가족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우리측은 그 동안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들의 송환을 끊임없이 북한측에 촉구하여 왔으며, 다른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그 결과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한 노모는 1987년 납북된 아들을 상봉하였다. 이는 납북자 가족으로는 처음 상봉한 사례로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남북교류협력의 획기적 진전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남북은 투자보장·청산결제 등 경협 4개 합의를 채택하여 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개발 뿐 아니라,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개성공단 조성 등 대규모경제협력의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의 추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민족경제의 동맥을 잇는 민족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간 직교역로를 확보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절감 등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의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길을 열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부상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미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착공식을 가졌으며, 200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간 경제교류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 올해 남북교역은 4억2천5백만 달러로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남북간 인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2000년 한해 8천명 가까운 인원이 남북을 왕래하였다.

한편, 사회·문화분야에서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남북교향악단 서울합동연주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하여 남북언론교류에 관한 합의를 채택하였고, KBS의 백두산 현지 생방송, SBS의 평양 현지 생방송, 한겨레신문 등의 방북취재가 성사되었다. 또한 우리측 관광단 109명

이 백두산을 관광하였으며, 2001년 3월에는 북측 관광단이 한라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강산에서의 자동차질주경주대회 및 전국체전 성화 채화, 평양에서의 통일탁구 경기대회 등 체육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었으며, 종교분야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행사가 개최되는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되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4. 북한의 변화 가속화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의 폭은 넓어지고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개혁이 확대되고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한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에 협조해 오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중국을 방문, 중국의 지도자들과 중국식 개혁·개방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가 하면, 간부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연수케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하겠다.

대외적으로도 ‘철천지 원수’라고 하던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유럽연합(EU)의 국가들과도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서방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시찰과 학습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00년 7월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2001년 새해에 들어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 새로운 사고와 방식을 강조하는가 하면, 중국의 대표적 특구인 상해시를 방문하는 등 개방과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와는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해방문 내용 등을 북한 보도매체가 대내적으로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5.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협력 증대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Korea” 이름으로 공동 입장하였는 바, 이는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 한반도에 넘치는 화해의 분위기를 전세계에 알려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남북한은 2000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를 계기로 남북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대외관계와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ADB·APEC 등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재외공관간에 협의채널을 구축할 것과 외무장관회담의 정례화를 제기하였다. 이에 북한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로 나가자고 하면서 UN총회에서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재외공관의 남북한 인사들간 교류도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 주재 우리 대사가 이·취임 인사차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였고,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는 우리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민방문시 공식환영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러한 남북의 우호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10월 제55차 UN 총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환영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및 통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UN 총회에서 한반도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197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유럽회의(ASEM)에서도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이행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하는 ‘서울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으로 비롯된 남북화해 분위기는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6.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 진입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이 본격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0년 9월 남과 북은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

는 데 합의하였다.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러한 남북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관계정상화 협의를 본격화하고, 미사일협상, 경제제재 완화,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협상 등을 추진하였다.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록 특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공동선언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 의지를 공식 선언하였다. 또한, 미 대통령의 방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양자관계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앞으로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북·미간 현안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북간에도 2000년 들어 대북지원, 수교협상 개최 등 관계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EU 등 서방국가와 북한간의 관계정상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던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기 시작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어감에 따라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1절 남북장관급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5항을 통해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0년 7월 19일 이한동 국무총리 명의의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7월 21일 우리측의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제의를 수용하면서 회담 개최 일자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을 오고가면서 2000년 한 해동안 모두 4차례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간 현안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실천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등 여러 분야에서 개최된 회담들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대표단 명단 >

| 한 국 측 | | 북 한 측 | |
|-------|---------------|-------|---------------------------------------|
| 수석대표 | 박재규(통일부 장관) | 단 장 | 전금진(내각 책임참사) |
| 대 표 | 이정재(재정경제부 차관) | 대 표 | 허수림(민족경제협력연합회 총사장 겸 무역성 광명성지도국 차장) |
| | 김순규(문화관광부 차관) | | 유영선(교육성 국장) |
| | 김형기(통일부 실장) | |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
| | 서영교(통일부 국장) | | 량태현(내각 사무국 과장) |
| | | | |

* 우리측 김형기 대표와 북측 허수림 대표는 제3차 회담부터 참가 (1, 2차 회담에는 우리측 김종환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북측 김영신 무대작품국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참

가)

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과 북은 전체회의 3회, 수석대표접촉, 대표접촉 등을 가졌으며,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우선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제반 남북간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장관급회담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기본자세로 ‘공동이익 추구’, ‘실천중시’, ‘쉬운 문제부터 해결’ 등을 제시하였고, 북측도 ‘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에 충실’, ‘신의와 협력으로 문제 타결’, ‘실천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합의·이행’해 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해 ▲공동선언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대화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양 정상의 뜻과 민족적 요구,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조치로 우리측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경의선 철도연결 공사 연내 착공, 8·15 광복절 주간의 남북공동경축 등을 제의하였고, 북측은 판문점 연락사무소 기능 재개, 남북공동선언 지지·환영 및 그 실천을 결의하는 통일행사 개최, 재일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실행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남북공동선언의 분야별 이행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경제위원회」 등 실천기구 구성을 제의하였다. 북측도 실천기구의 설치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쌍방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2000년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행사 개최,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문산-개성간 24km) 연결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

-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
 -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존중과 공동이익 추구 방향의 대화
 -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
 -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대화
- 2000년 8·15를 계기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 2000년 8·15에 즈음,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개최
- 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협력 및 적절한 관련 조치
-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 연결 및 빠른 시일내 관련문제 협의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2.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례 전체회의와 수시 수석대표 단독접촉 및 실무대표접촉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쌍방은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등 7개항에 합의하여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당초 우리측 대표단은 8월 31일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프라피룬」의 영향 등으로 하루 늦어진 9월 1일 서해항로를 통해 귀환하였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위원회 구성·운영, 남북경협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군사직통전화 설치 및 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신규도로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 협력 등 5개항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북측에 요구하고, 전 해외동포들의 고향방문 실현, 남북간 직항로 개설, 말라리아 공동방제, 2000년 시드니올림픽 공동입장 및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북측은 이산가족방문단 2회 추가 교환, 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실무협의 개최,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교환 등 4개항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공동추진,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이 회담에서는 남과 북이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키로 함으로써 평화와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

-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 실무문제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
 - 이산가족 서신교환 등도 협의
- 남과 북은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노력
 - 조속한 시일내에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문제 협의
- 남북경협 확대 발전을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9월중 실무접촉 개최
 - * 차관형태의 식량 제공문제 검토 추진
-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을 위한 실무접촉
 - 9월중 개최하여 착공식 문제 등 협의
-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 추진
- 한라산-백두산 관광단 교환
 - 관광단 규모는 각기 100명 정도로 하며 9월중~10월초 실시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0. 9.27~30, 한라산
 - 대표단 규모 : 각기 편리한 대로 구성

한편, 북측의 김용순 특사일행은 우리측을 방문(2000.9.11~1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에 대한 실천 의지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각종 문화·산업시설도 둘러 보았다.

김용순 특사의 방문을 통해 남북은 현안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루었다.

< 특사 방문시 합의사항(요지) >

- 가까운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서울 방문
-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가 논의되는 데 대해 환영
-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교환을 우선 추진하고 9.20 적십자회담 개최
- 남북경협실무접촉을 9.25 서울 개최, 제도적 장치 타결
- 빠른 시일내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개최
- 북측의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파견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남북공동조사 실시 등 추진

3.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2차례의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 단독접촉과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등 6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합의사항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 평가하였다.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석달반 동안 이루어진 일들은 크게 보아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한 협의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남북장관급회담의 적극적 역할, 남북공동선언을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 운영의 틀 정립, 남북간 제반교류와 협력과정의 제도화를 제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간 당면한 현안문제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협력과제들을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모든 해외동포들의 고향방문, 남북간 교수·대학생 및 문화계 인사들의 교류, 서

울·평양 정기친선축구대회 등을 추진하는 문제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협력사업 이외에 북측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매 회담시마다 많은 합의를 내기보다는 기 합의한 협력사업들의 이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남북 양측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남북간 합의사항들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이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관계 전반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중심적인 협의체임을 재확인하였고, 남북관계 개선의 제도적 틀을 체계화함으로써 남북장관급회담이 생산적인 결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쌍방은 각종 분야별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 생사교환·서신교환·면회소 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의 조속한 타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의 교류·협력 문제를 차기 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하였다.

— <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

- 여러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사업들을 계속 협의·추진
-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2000년말부터 생사교환,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적극 협력
-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 절차와 청산결제 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 서울·평양 정기 친선축구대회,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방문단의 시범적 상호 교환 문제 등 교류·협력 문제를 제4차 회담에서 협의·결정
- 제4차 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
 - 장소는 추후 협의

4.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제3차 회담에서 합의한 일정에서 다소 늦춰진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기간 중 남북 쌍방은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등을 가졌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 8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하였다.

우리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결산하고 2001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일부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협력사업들의 추진일정을 조정,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3차 장관급회담시 양해가 이루어진 사업 등을 협의·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특정인사에 대한 비방, 취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미준수, 이산가족상봉시 정치선전 등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북측은 남북간 전력협력문제, 남북어업분야 협력문제, 남북태권도 통합문제 등을 제기하였으며, 우리측 「2000 국방백서」의 주적(主敵) 개념 등을 비난하면서 전력지원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토의가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다.

북측이 요구한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포괄적 경협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등 경협관련 현안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북측 한라산 관광단 및 경제시찰단 파견 등의 추진일정을 재조정하고, 어업부문 상호 협력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등 4개 경협합의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남북경협

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차관급 수석대표 포함 5~7명의 위원으로 구성, 12.26경 평양에서 1차 회의 개최
 - 전력협력, 철도·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 협의
- 어업부문 상호협력 : 북측이 동해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쌍방 당국관계자 접촉(빠른 시일 내, 금강산)
- 태권도 시범단 교환문제 협의를 위한 단체간 접촉 권고
- 이산가족 생사확인(2001년 1·2월, 각 100명), 서신교환(2001년 3월, 300명)
-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2001년 2월말, 100명)
- 북측 한라산 관광단(2001년 3월), 경제 시찰단(2001년 상반기) 파견
- 이중과세,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를 각기 발효절차를 거쳐 상대측에 통보
-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2001년 3월중 개최(장소 추후 협의)

제2절 남북적십자회담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측은 6월 17일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대남전화통지문을 보내와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갖자고 제의하였다.

북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6월중 판문점에서 개최하여 남북공동선언에 천명된 인도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자고 제의하면서 대표단은 쌍방 적십자 단체 부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대표 3명, 수행원 2~3명으로 구성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수락의사를 표명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일자와 장소를 6월 23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6월 21일 대남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장소를 금강산 호텔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면서, 아울러 장소를 옮기는 조건에서 회담 날짜를 연기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리측은 6월 22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장소 수정 제의에 대해 동의하면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개최하되, 금강산 지역에서 회담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직통전화와 취재기자단의 취재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측이 6월 23일 우리측의 제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우리측은 박기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 3명의 명단을 통보하고 이와 함께 수행원 3명, 지원인원 4명, 취재기자 6명 등 총 16명이 참가하게 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 한 국 측 | | 북 한 측 | |
|-------|--|-------|--|
| 수석대표 | 박기륜(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 단 장 | 최승철(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
| 대 표 | 고경빈(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최기성(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 | 대 표 | 리금철(북한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창훈(북한적십자회 부서기장) |

* 우리측 최기성 대표는 제2차 회담부터 참가(제1차 회담에는 김장균 이산가족대책본부 실행위원이 참가)

1.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은 200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북한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되어 전체 회의 4회, 실무대표접촉 2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8·15를 전후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우선적으로 교환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의하면서 9월중에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과 관련하여, 방문단은 인솔단장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30명 등 총 161명으로 구성하며, 교환 방법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북측 방문단이 서울을 방문한 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남측 방문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순차방문 형식을 제시하였다.

「남북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면회소를 8월중에 판문점 「자유의 집」 또는 「통일각」에 설치하여 월별 4회, 매회당 100명씩 면회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서신교환도 매월 2회 이상, 생사가 확인된 숫자 내에서 실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비전향장기수 송환 및 납북자·국군포로 귀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원하는 사람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후 송환하며,

구체적인 송환방법 등은 9월중 협의하자고 하였다. 아울러 북측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남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일괄 협의하되, 비전향장기수 송환사업을 우선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측은 우선 8·15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관련하여 8월 15일부터 3박 4일간 동시에 교환방문하며, 방문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기자 20명 등 총 151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나머지 교환 절차에 관한 사항은 1985년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북측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하면, 북측은 송환을 희망하는 인원들을 송환 10일전에 우리측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와 같이 쌍방은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한다는 기본입장은 같았으나, 우리측은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합의후 9월중 비전향장기수 교환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시한 데 대해 북측은 ‘선 비전향장기수 송환, 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였다.

제2일차 전체회의에서 북측은 기존입장을 바꿔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한 후 9월초에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고 이어 적십자회담을 계속하여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문제를 협의·타결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측이 수용함으로써 곧 문안조정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을 가졌다.

그 결과 방북 제3일째 열린 전체회의에서 쌍방은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에 채택·서명하였다.

쌍방은 이 합의서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동시 교환하고,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하였으며, 북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하기로 하였다.

<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요지) >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산가족 100명씩 서울과 평양 동시 방문
-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 전원 송환 즉시 적십자회담을 통해 협의·확정
- 북측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 송환

2.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제1차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 2000년 8월 26일 대북전화통지문을 통해 제2차 적십자회담을 9월 5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북측은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측의 김용순 특사가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우리측과 여러 차례 접촉을 갖고 남북간에 제기되고 있는 주요 현안문제들에 대해 협의하는 가운데 제2차 적십자회담 개최 일자도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적십자회담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을 9월중에 시작하여 빠른 시일내 마칠 것과, 10월 중순부터 매월 2회 통보하고, 서신교환은 10월부터 매월 2회씩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사업에 대해서는 판문점 자기측 지역에 설치하여 매주 쌍방 각기 100명씩 면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산가족방문단 추가교환 사업과 관련해서는 2차 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차 방문단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1차 적십자회담에 이어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해결 차원에서 풀어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이산가족방문단 추가교환은 연내 2차례 추진하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등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생사·주소확인 사업은 경험부족 등을 내세우며 시범적인 단계를 거쳐 점차 확대하자고 주장하였고, 서신교환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는 12월 중순경 제3차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확정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북측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문제와 관련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하되,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12월 중순에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이산가족방문단 추가교환은 2차를 11월 2일부터 5일까지, 3차를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여러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상호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절충을 계속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해 합의하였다.

그 결과 쌍방은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을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교환기로 하였다.

생사 및 주소확인사업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고 서신교환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데 따라 진행하며 11월중에 시범적으로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사업은 제3차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 <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요지) > —

- 이산가족방문단 추가교환(100명씩)
 - 제2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동시 교환
-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교환하여 생사·주소확인하여 통보
 - 9·10월에 시범적으로 100명씩, 그 후 교환 규모 확대
-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후 서신교환
 - 11월중에 시범적으로 생사·주소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규모 확대하며, 구체적 문제는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
-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문제를 협의·확정
-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

* 2000년 12월 개최하기로 한 제3차 적십자회담은 북측의 사정으로 2001년 1월말(29 ~ 31일, 금강산)로 연기

제3절 남북국방장관회담과 남북군사실무회담

1.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등 군사분야에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견지에서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 개최 필요성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그 결과 남과 북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9월 11일 김용순 특사 방문시 동행하여 서울에 온 북측 박재경 대장을 통해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북측은 9월 13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해 왔다.

남북 쌍방은 9월 13일부터 18일 사이 4차례의 전화통지문 교환을 통해 회담일정 등을 협의한 결과, 마침내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9월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개최한다는데 합의하였다.

한편 북측은 9월 20일 남북국방장관회담 북측 대표단 명단을 우리측에 통보하면서 북측 대표단이 회담개최 예정일 하루 전에 우리측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이 이같은 북측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북측 대표단은 9월 24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였다. 북측 대표단은 서울과 제주도 사이를 우리 군용기편으로 이동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 우 리 측 | | 북 측 | |
|-------|---|-----|---|
| 수석대표 | 조성태 국방부 장관 | 단 장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차수) |
| 차석대표 | 김희상 국방부장관 특보 (중장) | 부단장 | 박승원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중장) |
| 대 표 | 김국현 국방부 국장 (준장) 송민순 외교통상부 국장 이인영 합동참모본부 과장 (대령) | 단 원 | 김현준 인민무력부 보좌관 (소장) 로승일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유영철 관문점대표부 부장 (대좌) |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공동 노력,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남북군사 위원회 및 군사실무위원회 설치를 제의하였다. 또한 상호 부대이동 통보, 군 인사 교류, 군사정보 교환, 남북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당면과제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군사적 협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방해를 주는 군사행동 금지, 민간인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하여 남과 북의 인원, 차량, 기재의 비무장지대 내 출입을 보장하는 문제는 실무급에서 토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남북 쌍방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여러 차례의 실무접촉을 통해 쌍방의견을 조율, 5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북측 대표단은 제주도에서 한라산 영실과 향몽유적지, 분재예술원을 방문하고, 9월 26일 서울로 이동, 청와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한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였다.

—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요지) > —

-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
- 쌍방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 노력
-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공사와 관련, 비무장지대 안에 각 측의 인원과 차량, 기재들의 왕래 허가과 안전 보장
 - 구체적 세부사항은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추진
-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

*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은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00년에는 개최되지 못하고 2001년으로 넘어가게 됨

2. 남북군사실무회담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우리측은 10월 7일 조성태 국방장관이 김일철 북측 인민무력부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10월 1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10월 11일 답신에서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어 10월 16일에는 이찬복 판문점대표부 대표가 마이클 던 유엔사 부참모장측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관할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비서장급회의’를 제의하였다.

이후 10월 18일에서 11월 16일 사이에 열린 유엔사-북측간 4차례의 비서장급 회의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11월 16일 유엔사측과 북측은 남북관리구역을 설정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11월 17일 열린 제11차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합의서」를 비준하여 발효시켰다.

이어 남과 북은 전화통지문과 연락장교접촉을 통해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하여, 11월 28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 우 리 측 | | 북 측 | |
|-------|--|-----|---|
| 수석대표 | 김경덕 국방부 차장 (준장) | 단 장 | 유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대좌) |
| 대 표 | 정승조 합동참모본부 (대령) 이명훈 작전부대 (대령) 이명훈 육군건설단 (중령) 정덕모 건설교통부 | 단 원 | 배경삼 인민무력부 상급참모 (상좌) 정창욱 인민무력부 (상좌) 리병우 인민무력부 과장 (대좌) 김기복 인민무력부 상급참모 (상좌) |

* 우리측 정진양 국토관리청 도로건설과장은 제1차 회담에만 참석

* 이명훈 대령과 이명훈 중령은 동명 이인

남북 쌍방은 제1차 회담(11.28, 통일각), 제2차 회담(12. 5, 평화의 집), 제3차 회담(12.21, 통일각)을 통해 남북관리구역의 범위와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관한 입장을 서로 교환하였다.

우리측이 먼저 제1차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공사간에 적용될 「공동규칙에 관한 합의서(안)」을 북측에 전달하였으며, 제2차 회담에서 북측도 우리측 안을 반영한 ‘북남관리구역 설정과 철도·도로작업 보장을 위한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합의서의 명칭, 지뢰제거의 시기, 공사책임자간 접촉 및 통신연결, 공사인원과 경비병력간 식별문제 등에 대해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남북관리구역의 폭, 지뢰제거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상당히 좁혔다.

제3차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측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한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측이 「200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명기한 데 대해 비난하면서 실질적인 토의를 회피함으로써 타결짓지 못하고 제4차 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4절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북한 김용순 특사 방문(9.11~14)시 합의에 따라 경험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와 대북식량차관 제공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실무접촉이 두 차례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 구 분 | 우 리 측 | 북 측 |
|------|----------------|---------------|
| 수석대표 | 이근경(재정경제부 차관보) | 정운업(무역성 지도국장) |
| 대 표 | 조명균(통일부 심의관) | 리영남(재정성 부국장) |
| | 김상열(산업자원부 심의관) | 서정찬(무역성 과장) |
| | 안창호(법무부 과장) | 최정식(재정성 과장) |

* 우리측 안창호 대표와 북측의 최정식 대표는 제2차 접촉부터 참가(제2차 접촉부터 회담대표가 쌍방 각기 3명에서 4명씩으로 증가)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은 2000년 9월 25일~26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투자보장, 분쟁해결절차,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등 4개의 제도적 장치는 모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전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합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전문적·효율적 논의를 위해 대표 및 수행원간의 개별 접촉·협의를 제의하

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제2차 장관급회담(8.29~9.1)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을 적시한 만큼 이에 국한하여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 개별 실무접촉 보다는 전체회의를 통한 합의서안 검토를 제의하였다. 또한 공동보도문안 발표는 기본원칙과 필요성을 공동인식하고 있다는 선에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측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2개안에 대해서는 향후 장관급회담에서 확인한 후 차기 접촉시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쌍방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한 각기의 입장과 조문별 공통점·차이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민족내부거래의 특수성과 국제관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북측은 이 부분이 미흡하였고, 송금·수용보상, 이중과세방지방법 등 일부 핵심적인 부분에서 우리측안과 상당부분 차이점을 드러냈다.

쌍방은 합의서별 구체적 조문내용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한 입장 교환방식으로 조율하여 제2차 접촉(평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하는 데 따라 향후 실무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공동보도문(요지) > —

- 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 타결키로 합의
- 투자보장 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 차이점들을 제2차 접촉에서 합의하기로 함
-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필요에 이해를 같이 하고 절차에 따라 앞으로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함
- 제2차 접촉은 10월 18일 평양에서 갖기로 함

2.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우리측은 제2차 실무접촉을 10월 18일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한 데 따라 10월 13일 대북전화통지문을 통해 실무절차 문제 협의를 위한 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10월 17일 남북연락사무소 연락관 접촉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10월 18일에 실무접촉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북측은 10월 27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2차 실무접촉을 11월 8일부터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측 수정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하면서 특히 4개 합의서의 전문에 남북사이의 경제교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할 것과 내국민 대우, 중재인의 수 및 자격,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4개 합의서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와 관련하여 내국민 대우는 어렵다고 하면서 수송소득에 대한 소득 원천지 과세, 양측의 재결집행제도 이용, 무이자 청산계좌 개설 등을 제의하

고 쟁점 부문은 부문별 실무접촉에서 협의하자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투자보장, 분쟁해결절차 문제와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문제로 분리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식량분배 투명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식량차관 계약서상 '투명성 보장' 규정에 따라 식량분배 과정과 분배실적의 설명 및 현장방문과 사진촬영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쌍방은 수석대표접촉, 실무대표접촉, 전체회의를 통해 상호 입장을 조정, 11월 11일 투자보장 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등 4개 합의를 타결하고 가서명하였다.

한편 쌍방은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규모, 시기, 조건, 투명성 보장을 포함한 절차 문제 등을 담은 합의를 작성하였다.

< 4개 합의서 (요지)>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前文 및 12조

- 상호 투자의 허용 및 보호, 수용·국유화 제한 및 보상, 투자수익 등의 자유로운 송금보장, 상호 정보제공, 분쟁해결방법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 前文 및 28조

- 남한과 북한의 세법체계를 고려하여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조세를 중심으로 양측 과세권의 所在와 범위를 정하고, 거주자·고정사업장 판정기준, 이중과세 방지방법(사업소득 면제방식, 투자소득 세액 공제방식), 상호협의절차, 정보교환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前文 및 19조

- 남북공동 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 해결절차, 중재인의 자격 및 활동, 중재판정의 효력 및 승인·집행보장 등 규정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前文 및 10조

- 남북한이 합의하여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결제방식으로 거래하기로 합의
-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미달러화) 등 규정

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우리측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부터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별로 구체적 문제를 협의·이행해 나가도록 할 것을 북측에 꾸준히 제의해 왔다.

특히 경제분야는 전문적인 분야가 많으므로, 남북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북측이 호응해 옴으로써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본 데 이어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

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첫 회의를 2000년 12월 26일경에 평양에서 갖기로 하였다.

또한 이 위원회에서는 전력협력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12월 2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사명과 임무를 규정, 운영 방식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해 협의한 다음, 전력협력문제를 비롯한 철도 및 도로연결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12월 22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표단은 차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자문단 4명, 수행원, 기자 등 총 35명이 참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어 남과 북은 두 차례의 전화통지문과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1차 회의에 참가하는 위원장을 포함 위원을 총 5명으로 하고 제1차 회의를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쌍방대표단 명단 >

| 구 분 | 한 국 측 | 북 한 측 |
|-----|---|--|
| 위원장 | 이정재(재정경제부 차관) | 박창련(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
| 위 원 | 조명균(통일부 심의관) 유창무(산업자원부 심의관) 최재덕(건설교통부 국장) 김해중(국무총리실 심의관) | 오광홍(전기석탄공업성 부상) 함기석(철도성 국장) 박호영(국토환경보호성 국장) 최현구(삼천리총회사 총사장) |

회의에서 우리측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시한 바 있는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를 타결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전력협력문제와 관련, 양측의 전력사정과 운영상황·기술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

안할 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우선 전력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현지 실태조사단을 2001년 1월에 구성하여 전력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전력협력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관련 조사단의 구성·운동을 위한 접촉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한편,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특별법 제정 및 전력·용수공급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당국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전력협력,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 및 동해어장 제공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특히 전력협력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후 남북 쌍방은 전체회의, 위원장 접촉,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상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과 임무에 관한 합의서 및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에 대해서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계속 협의하며, 제2차 회의는 2001년 2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기로 합의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제5절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1. 업무재개 배경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쌍방은 정상들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

무소 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측은 2000년 8월 9일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전금진 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중단된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8월 14일부터 재개한다는 것과 아울러 북측 연락사무소 구성원 7명 명단을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도 8월 10일 남북장관급회담 남측대표단 박재규 수석대표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내 남북연락사무소 업무재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우리측 연락사무소 구성원 명단(8명)을 통보하였다.

이로써 1996년 11월 19일 이후 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던 남북연락사무소의 업무와 기능이 만 3년 9개월만에 재개되었다.

2. 업무 현황

남북연락사무소는 1992년 5월 7일 발효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한 합의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연락업무를 수행하며, 위임에 따라 남북사이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실무절차 등 협의하고, 남북사이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르는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로 하며, 쌍방 공휴일과 일요일, 그리고 일방이 휴무를 통보하는 날은 휴무하고 있다. 운영 날짜와 시간은 경우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하며, 운영일에는 아침 9시와 오후 4시(토요일은 정오) 쌍방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의 업무개시 및 업무종료 통화를 실시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쌍방 각기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 그리고 필요한 수의 연락관으로 구성되며 인원 교체시 이를 상대측에게 통보하고 있다.

쌍방은 필요에 따라 연락관 접촉을 가지며, 연락사무소 구성원들 사이의 연락은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남북연락사무소 연락관은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통해 전화통지문을 교환하는 것 이외에도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각종 남북회담이나 남북간 접촉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대표단의 군사분계선 통과방법과 통과시간 등 실무절차 문제를 협의하며, 자기측 지역으로 오는 상대측 회담대표단의 안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남북을 왕래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자기측 지역을 왕래하는 상대측의 연락사무소 구성원에 대해 신변안전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남측사무소는 판문점 「자유의 집」에 있으며, 북측사무소는 「판문각」에 있다.

제1절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하여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4개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임진강 공동수해 방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합의하였으며,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하여 식량을 차관으로 지원하였다.

1. 경의선 철도 및 문산-개성간 도로 연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전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경의선 철도연결은 민족경제의 대동맥을 잇는 사업이며, 남북간 경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경의선 철도연결 등 남북간 제반분야의 교류협력에 대해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남북 정상간의 공동인식에 기초하여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경제협력의 우선적 실천조치로써 경의선 철도연결을 제안하였고 북측이 이를 수용하여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어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경의선 철도연결과 병행하여 신규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를 협의하여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 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한다”고 합의하였다.

김용순 특사 방문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을 빠른 시일 내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측은 2000년 9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각계인사 1,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북 군사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쌍방은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공사를 위하여 각 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열린 세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는 도로노선 확정,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공동규칙 마련, 비무장지대내 지뢰제거작업 남북한 동시착수 등에 의견 접근을 보았다.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공사는 문산역에서 개성까지 24km의 철도구간(문산역-군사분계선 : 12km, 군사분계선-개성 : 12km)과 17km의 도로구간(통일대교북단-군사분계선 : 5km, 군사분계선-개성 : 12km)을 연결하는 것으로 남측구간은 우리가, 북측구간은 북한이 각각 담당하며 200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측 구간의 총사업비는 철도사업비 639억원과 도로사업비 873억원으로 총 1,5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간 철도·도로연결사업이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소요재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하였다.(2000.9.9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이와 함께 정부는 공사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남북철도연결사업 추진단'을 구성(2000.8.8)하여 이 기구의 총괄·조정하에 관련부서간 역할을 분담하게 하였다. 철도청은 문산역에서 임진강교 구간(7.9km)의 노반공사와 철도 전구간의 궤도, 전기, 신호공사를 담당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통일대교 북단에서 군사분계선 구간(5km)의 설계, 용지보상, 구조물·포장공사를 담당하며, 국방부는 임진강교에서 군사분계선 철도구간(4.1km)의 노반공사와 지뢰제거, 통일대교 북단에서 군사분계선 도로구간(5km)의 노반공사 및 지뢰제거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경의선 철도연결 관련 지뢰제거 작업은 우리 군이 9월 18일 기공식 이후 공사지역에 지뢰제거부대와 최신형 지뢰제거장비 및 안전을 위해 보강된 굴삭기·불도저 등 12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0년 12월 현재 민통선내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지역의 지뢰제거를 완료하는 등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환경훼손 최소화 및 생태계 보전에도 노력하고 있다. 환경 및 생태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환경생태계공동조사단이 발족되어 지형·지질, 동식물 등 6개 분야에 대한 7차례(2000.9.25-12.1)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물이동을 위한 통로, 자연경관 등을 고려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은 분단을 정신적·물리적으로 극복하고 민족의 대동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화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룬다는 효과도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남북간의 물류비를 대폭 절감하여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에서의 임가공교역 활성화, 남북한 경제교역이 간접교역에서 직교역·직접투자 국면으로 전환되는 등 새로운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특히, 중국·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2.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남북관계의 정치적·이념적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로 이러한 남북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남북한은 공통의 법·제도적 기반 없이 각각의 법제와 민간 당사자간의 개별적 합의에 의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왔다.

우리측은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북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며, 그 결과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의하였다.

남북은 두차례 경협실무접촉을 갖고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개 합의를 타결하고 이에 가서명하였다.

각 합의서와 관련하여 남북간 용어상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같은 의미를 확인하고 각기 자기측 표현으로 기술한 뒤 각 합의서마다 용어 대비표를 첨부하였다. 또한 가서명된 4개 합의서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에 의해 정식 서명되었으며 앞으로 양측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상호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송금·출입·채류 등 상대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수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용시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

다.

투자보장 합의서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북한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북한지역에 투자하고, 북한지역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보장받으며 보다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합의서」에는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과세권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남북의 상이한 조세체계를 고려하여 사업소득, 이자·배당·로열티 등의 과세대상 소득별로 과세권의 소재와 범위를 규정하고 이중과세 방지방법, 조세정보의 교환, 조세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남쪽과 북쪽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북 사업의 투자수익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게 되었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남북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분쟁해결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공동분쟁해결기구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기능,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하고 양측이 중재판정의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였다.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거래관습이 달라 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절차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일방이 손해를 감수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남북이 합의하여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남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해서는 청산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고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 및 신용한도 설정, 청산결제은행 지정 등 청산결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청산결제 대상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합의하여 남북간 직접 결제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기반

이 조성되었다.

지금까지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대금결제는 제3국 은행이나 중개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 남북간에 직접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청산결제제도 도입으로 상호보완적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제협분야 4개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공동규범이 남북한 합의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이 합의하여 만들고 운용하는 공통의 규범과 제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경제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화를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4개 합의서와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각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행·통신, 산업재산권 보호, 원산지 관련 규정 등 남북경제협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확대해 나가는 데 필요한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도 북측과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북측이 호응해 오는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3.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임진강유역은 최근 수년간 남북 모두 수재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최근 3년간 하류지역인 우리측에서만 232명이 사망 또는 실종하였으며, 1조 6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임진강유역에서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임진강 수계를 제대로 치수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치수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상

호협력하에 치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향후 개성공단 등 접경지역개발에 대비해 용수공급시설을 확충해야할 필요성도 예상됨으로써 수해방지사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남북협력사업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1999년 8월 11일 정부는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 명의의 서한을 북측에 보내 임진강유역의 홍수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한 바 있다.

남북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김용순 특사 방문시에는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도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북측도 기본적으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향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임진강과 주변지역의 강수량, 하천수위 등 수방대책을 위한 정보를 남북간에 교환하고, 강우 및 수위 관측소를 설치하여 홍수 예보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하천정비, 제방축조, 다목적댐 건설을 통한 용수공급 및 수력발전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대북식량차관 제공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심한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2000년도 곡물 수확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식량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고 내부사정을 솔직히 알리면서 약 100만 톤의 식량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식량지원문제를 공식적으로 우리측에 요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는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북측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측은 북측의 식량제공요청에 대해 검토 후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대처하며,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상부상조의 원칙에 의거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은 먼저 2000년 9월 23일 국민여론 조사를 통해 「대북식량차관제공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를 파악하였다.(응답자의 55.3%가 대북식량차관에 대해 찬성) 또한 식량차관에 대한 3당 설명회를 통한 국회와의 협의, 북한의 식량사정 평가, 재원조달 방법 검토, 북한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쳤다. 이러한 내·외부적 종합검토를 토대로 북한에 식량차관을 제공키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식량차관제공의 규모와 식량 인도·인수 절차문제에 대해 합의(9.26)하였다.

— < 남북간 식량차관제공에 관한 합의서 (요지) > —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합의하였다.

1. 남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북측에 외국산 쌀 30만톤 및 옥수수 20만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절차」에 따른다.
2. 식량의 구입 및 인도는 남측이 지정한 식량공급대행사를 통해 이행한다.
3. 차관금액은 식량구입비 및 식량의 북한 인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4. 차관의 상환기간은 식량차관 제공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1.0%로 한다.
5.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7.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북측 수석대표 정운업 무역성 지도국장이 서명한 합의서는 ①외국산 쌀 3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②식량제공 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 상환으로 이자율 연 1.0%를 조건으로 하는 차관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공하는 식량을 국내산이 아닌 외국산으로 한 것은 국내 식량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양의 식량을 제공한다는 식량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제공하는 식량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식량포대에 「Republic of Korea」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분배투명성 보장을 합의서에 명시하였다.

식량차관의 재원과 관련,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민족공동체회복지원(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항)에 의거, 1억달러 범위 내에서 협력기금을 대출한다고 의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부는 북한에 조속히 식량을 인도한다는 합의에 따라 조달청에 식량구매를 의뢰하였으며, 조달청은 식량공급 대행사와 2000년 9월 29일 식량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북측에 식량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 당국의 위임을 받은 조선무역은행이 2000년 10월 4일 차관계약을 체결하였다.

2000년 12월말 현재 쌀은 30만톤 전량이, 옥수수는 약 15만톤(20만톤 중 75%)이 수송 완료되었다. 옥수수의 잔여량 5만톤 중 약 2만 6천톤은 2001년 3월까지 북한의 남양으로 철도수송할 계획이며 나머지 약 2만 4천톤은 남포항으로 해상수송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분배투명성 보장이행을 위해 노력한 바,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 중인 11월 10일 우리측은 북측으로부터 제공식량의 분배내역을 통보받고, 우리측 대표가 분배현장을 확인하였다.

분배현장 확인은 평양 인근지역(모란봉구역 개선동 식량배급소)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제공한 옥수수를 배급받은 북한 주민들은 '지금 옥수수가 남쪽에서 지원한 것임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우리측 대표단이 최초로 분배현장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써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무상지원의 경우에 우리측 대표의 현장확인 없었던 점에 비추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2절 남북한 인적교류 증가

1. 남북한 왕래

가. 개 황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2,478건(21,101명), 승인 2,374건(20,094명), 성사 2,209건(18,601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865건(8,070명), 승인 845건(7,737명), 성사 804건(7,280명)이 이루어졌다.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 또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0년 12월 말 현재 총 371,637명(외국인 828명, 영주권자 184명 포함)이 금강산을 관광했으며 2000년도 한해에는 213,009명이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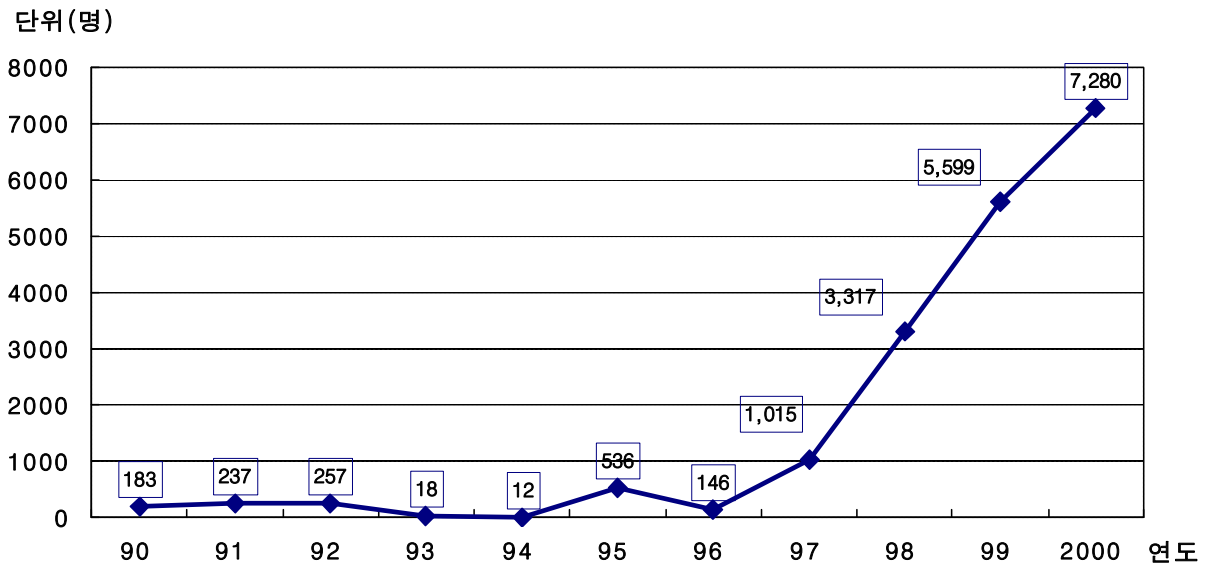
남북한 왕래는 주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18명, 12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가 1995년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인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 연도별 남북왕래 현황 >

(1989.6.12-2000.12.31, 단위:건(명))

| 연도 | 구 분 | 신 청 | 승 인 | 성 사 |
|------|--------------|----------------------------|----------------------------|----------------------------|
| 1989 | 북한방문 남한방문 | 1(1) - | 1(1) - | 1(1) - |
| 1990 | 북한방문 남한방문 | 7(199) 5(306) | 6(187) 5(306) | 3(183) 4(291) |
| 1991 | 북한방문 남한방문 | 12(244) 3(175) | 11(243) 3(175) | 10(237) 3(175) |
| 1992 | 북한방문 남한방문 | 17(303) 4(113) | 8(257) 3(103) | 8(257) 3(103) |
| 1993 | 북한방문 남한방문 | 6(21) 2(6) | 5(19) 2(6) | 4(18) 2(6) |
| 1994 | 북한방문 남한방문 | 12(78) - | 7(54) - | 1(12) - |
| 1995 | 북한방문 남한방문 | 64(563) 1(7) | 58(543) 1(7) | 52(536) - |
| 1996 | 북한방문 남한방문 | 50(249) - | 35(170) - | 28(146) - |
| 1997 | 북한방문 남한방문 | 156(1,194) - | 149(1,172) - | 136(1,015) - |
| 1998 | 북한방문 남한방문 | 402(3,980) - | 387(3,716) - | 340(3,317) - |
| 1999 | 북한방문 남한방문 | 886(6,199) 1(62) | 862(5,997) 1(62) | 822(5,599) 1(62) |
| 2000 | 북한방문 남한방문 | 865(8,070) 10(706) | 845(7,737) 10(706) | 804(7,280) 10(706) |
| 계 | 북한방문 남한방문 | 2,478(21,101) 26(1,373) | 2,374(20,096) 25(1,365) | 2,209(18,601) 23(1,343) |

<연도별 방북인원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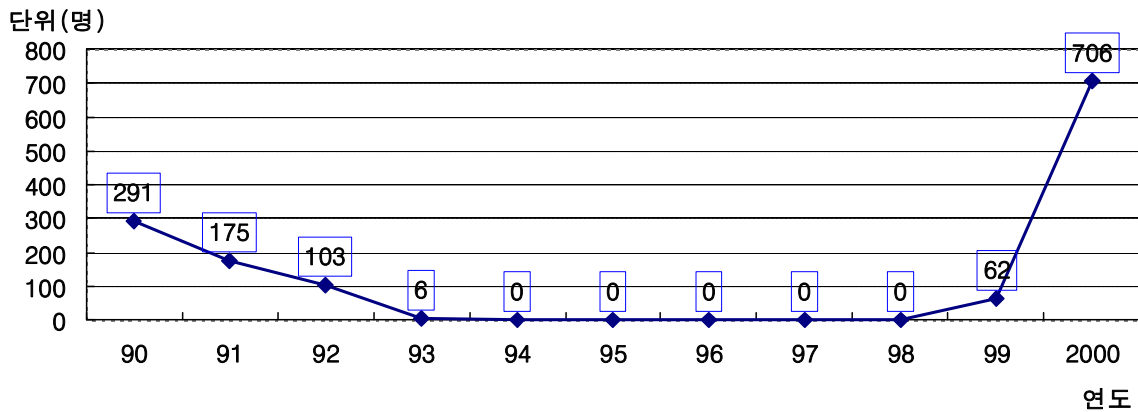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경분리원칙’ 등을 바탕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방북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북한을 방문한 남한주민은 총 16,019명으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9년간의 방북인원 2,405명의 6배를 넘는 것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인적교류가 크게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현황을 보면, 2000년 한해동안 706명이 남한을 방문하여 지난해 62명에 비해 11배 이상 늘어났다.

1990년 이후 2000년까지 남측을 방문한 인원은 총 1,343명으로, 방문 인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291명이었으나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남한방문이 없다가 1999년 62명, 2000년에는 70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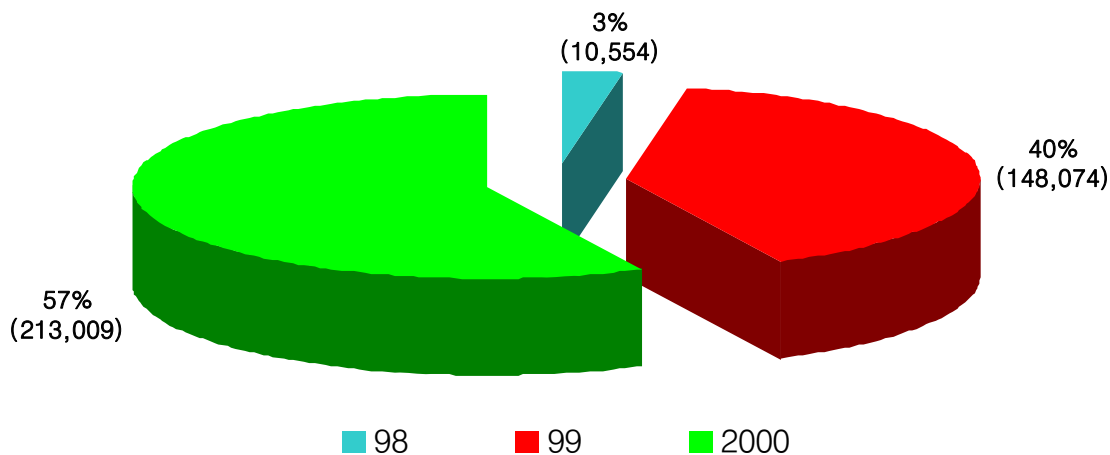
<연도별 남한방문인원 변화추이>



나.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방북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한 이래 2000년 12월말까지 관광선이 총 670회 운항되어 371,637명(외국인 828명, 영주권자 184명 포함)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연도별 관광객 비율



2000년에는 「금강」·「봉래」·「풍악」호가 차례로 매일 운항되고 「설봉」호가 추가 투입됨으로써 월 평균 15,000여명 이상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또한 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대관계자 등 실무인력의 방북이 계속되어, 2000년에는 2,148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다. 경제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경제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477건(1,904명), 승인 426건(1,702명), 성사 370건(1,376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139건(688명), 승인 130건(633명), 성사 125건(543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방북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1992년 10월 남포 경공업단지 투자실무조사단의 방북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기업인의 방북은 1994년 11월 8일 「남북경협활성화조치」 이후 재개되었으나, 북한의 무장잠수함 침투사건 등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의 추진과 1998년 제2차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대기업 총수의 방북이 허용되면서 같은 해 10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협의하였고, 1999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서해안공단 조성사업에 관해 북한의 고위층과 직접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제협력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남북경제협력의 기반구축을 위한 당국간 협의를 위하여 11월에 22명, 12월에 35명의 정부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당국간 경제협력 협의를 하였다.

이와 함께 협력사업의 추진과 협의를 위한 우리 경제인들의 북한방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현대와 한국토지공사 관계자가 공단 조성사업 협의를 위해 세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공단조성 후보지인 개성에 조사단을 파견(2000.11.11-12. 5), 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삼성전자의 임가공사업 및 전자복합단지 조성 협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임가공사업 추진,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수리개조 사업 추진, 녹십자의 의약품 개발 사업 등을 협의하였다.

라. 사회문화분야 관련 방북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사회문화분야와 관련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신청 257건(2,047명), 승인 231건(1,918명), 성사 180건(1,496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102건(949명), 승인 98건(934명), 성사 79건(674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특히 언론·출판과 체육분야에서 많은 증가가 있었다.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북한방문은 남북 국악인 서울·평양 공연, 남북통일축구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평가전 등 남북공동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1992년부터는 종교인 등의 개별적인 북한방문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6년까지는 북한이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사회문화분야 교류를 기피함에 따라 이를 위한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1997년 중앙일보의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를 위해 방북이 재개되고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사회문화계의 대북 교류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방북이 증가하였다. 특히, 제3국에서의 접촉위주로 이루어지던 사회문화교류가 평양, 서울 등 한반도 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학술·체육분야의 방북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 현재까지 신청 105건(1,114명), 승인 100건(1,091명), 성사 81건(840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67건(628명), 승인 65건(624명), 성사 53건(451명)이 이루어졌다.

2000년도 주요 방북사례로 선문대 이형구 교수, 동국대 김동현 교수가 개성 영통사지 조사 및 복원계획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하였고,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일제 강제병합자료 전시회 개최와 학술교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초청으로 북한을 다녀왔다.

또한 우인방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약칭 아태), 민족화해협의회(약칭 민화협)가 통일염원 금강산자동차질주경주대회를, 삼성이 아태와 통일탁구경기대회

평양경기를, 부산광역시 아태와 금강산 성화 채화를, 현대와 아태가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사업을 위하여 우리측 관련인사와 건설근로자들이 방북하는 등 학술·체육분야에서 북한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언론·출판분야 방북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38건(253명), 승인 32건(228명), 성사 27건(206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16건(167명), 승인 15건(160명), 성사 12건(146명)이 이루어졌다. 언론·출판분야에 있어서 방북은 취재·보도를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과 정보를 유통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보다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론사 사장단 방북이 성사되면서 향후 남북언론교류 전망을 밝게 했다. 언론사 사장단은 방북시 「남북언론기관간 합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북한 언론기관대표의 서울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도 주요 방북사례로는 KBS가 9월 추석날 백두산에서 북한측 방송인들과 생방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0월에는 SBS가 방북하여 취재내용을 생방송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한겨레신문도 10월 방북하여 취재보도하였으며 그 외 MBC, 주간동아, 월간 말 등이 방북취재하였다.

종교분야에서의 방북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57건(231명), 승인 49건(194명), 성사 36건(146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10건(49명), 승인 10건(49명), 성사 9건(47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방북인원이 20% 증가한 것으로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각 교단에서 활발히 종교교류를 추진한 결과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31건(346명), 승인 26건(314명), 성사 17건(235명)이며, 2000년에는 신청 6건(91명), 승인 5건(87명), 성사 3건(25명)이 이루어져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2000년도 주요 방북사례로 임권택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의 방북(11.11-18) 등을 들 수 있다.

마. 대북경수로 건설사업관련 방북

1995년에 부지조사단 및 의정서 협상을 위한 대표단이 방북한 이래 경수로건설사업의 진전에 따라 관련 인원의 북한방문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1997년에 부지정리 등을 위한 초기 현장공사가 착공되고 1998년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사관계자 등의 북한방문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9년 한해 동안 911명의 남한주민이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방북하였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금호사무소 인원,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건설인력 등 공사관계자들이 신포부지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2000년도 대북경수로건설사업관련 방북은 신청 194건(2401명), 승인 191건(2,280명), 성사 187건(2,231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4배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1999년 12월 15일 본공사 계약(TKC)이 체결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경수로건설사업 관계자들의 북한방문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 2000년도 분야별 방북 현황 >

(단위:명)

| 구 분 | 관 광 (실 무) | 경 제 | 사 회 문 화 | 경수로 사 업 | 대 북 지 원 | 이산가족 (교류주선) | 기 타 | 계 |
|------|--------------|-----|------------|------------|------------|----------------|-----|-------|
| 방북인원 | 2,257 | 543 | 674 | 2,231 | 751 | 348 | 476 | 7,280 |

바.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26건(1,375명), 승인 25건(1,365명), 성사 23건(1,343명)이며 2000년에는 10건(706명)이 신청되어 모두 승인·성사되었다.

지금까지 성사된 북한주민의 주요 남한 방문사례로는 남북고위급회담(1990-1992)을 위한 북한대표단 서울방문, 남북통일축구대회(1990) 및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1991) 서울경기 참석, 산업시찰을 위한 김달현 정무원 부총리 일행의 남한방문(1992) 등이 있다. 그러나 1993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서울에서 개최한 두만강개발계획 관련 통신분야 전문가회의(1.27-1.30)와 자원·산업·환경 분야 전문가회의(11.8-10)에 각 3명씩 참석한 이후로 1998년까지 북한주민들의 남한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1999년에 들어와 「제2차 통일 농구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북측 농구단 및 관계자 62명이 서울을 방문(12.22-25)함으로써 재개되었다.

2000년에는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이 현격히 증가하여 1989년 이후이루어진 전체 남한방문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방문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문화교류의 증가와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남북간 협의를 위한 회담의 회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분야별 남한방문 현황 >

(1989.6.12-2000.12.31,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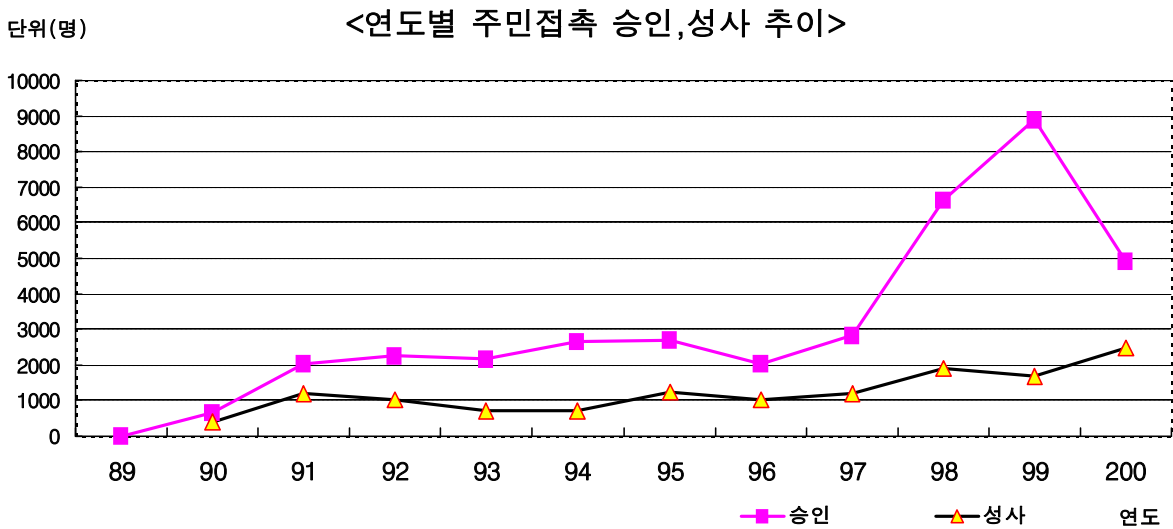
| 구 분 | 남북회담 | 체 육 | 문화예술 | 경 제 | 학 술 | 이산가족 | 기 타 | 계 |
|-------|------|-----|------|-----|-----|------|-----|-------|
| 인원(명) | 420 | 210 | 369 | 34 | 15 | 287 | 8 | 1,343 |

주요 남한방문사례로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공연 (2000. 5.24-27)에 102명, 평양교예단 공연 (2000. 5.27-6.11)에 102명,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7.29-31)에 25명,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2000. 8.15-8.18)에 151명,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2000. 8.18-24)에 132명, 김용순 특사 방문(2000. 9.11-14)에 8명, 제1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2000. 9.24-26)에 15명,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2000. 9.24-26)에 13명,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2000. 9.27-30)에 22명,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2000.11.30-12. 2)에 136명이 남한을 방문하였다.

2. 북한주민접촉

가. 개 황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 시행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22,511건(39,394명), 승인 22,099건(37,820명), 성사 6,041건(13,43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신청 2,831건(4,950명), 승인 2,812건(4,899명), 성사 1,710건(2,468명)이 이루어졌다.



북한주민접촉은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을 겪으면서 1999년에는 237건(691명)으로 일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이산가족 및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부터는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등 경제분야에서 북한주민 접촉 신청이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그 이후 사회문화 및 이산가족과 관련하여 꾸준히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접촉은 이산가족들의 재북 가족과의 서신교환, 기업인들의 교역·투자상담, 학자·종교인들의 제3국 개최 공동행사 참석 등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도 북한주민접촉의 경우 1999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국간 협력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해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3국을 통한 개별접촉 등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도 분야별 북한주민접촉은 경제분야 272건(400명), 관광분야 2건(7명), 사회문화분야 165건(668명), 대북지원 21건(115명), 이산가족 1,239건(1,239명), 기타 11건(39명) 등이다.

< 연도별 북한주민접촉 현황 >

| 연도 | 신 청 | 승 인 | 성 사 |
|------|----------------|----------------|---------------|
| 1989 | 36(70) | 21(22) | - |
| 1990 | 235(687) | 206(652) | 62(377) |
| 1991 | 753(2,195) | 685(2,047) | 266(1,173) |
| 1992 | 801(2,420) | 744(2,250) | 238(1,015) |
| 1993 | 1,172(2,220) | 1,148(2,182) | 313(707) |
| 1994 | 1,338(2,864) | 1,261(2,673) | 237(691) |
| 1995 | 1,011(2,769) | 1,007(2,703) | 494(1,222) |
| 1996 | 729(2,338) | 692(2,029) | 465(1,003) |
| 1997 | 1,387(2,969) | 1,340(2,850) | 516(1,191) |
| 1998 | 4,628(6,714) | 4,567(6,623) | 856(1,890) |
| 1999 | 7,590(9,198) | 7,616(8,890) | 884(1,698) |
| 2000 | 2,831(4,950) | 2,812(4,899) | 1710(2,468) |
| 계 | 22,511(39,394) | 22,099(37,820) | 6,041(13,435) |

(단위:건(명))

나. 관광사업 관련 접촉

관광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173건(552명), 승인 165건(524명), 성사 49건(152명)으로 집계되었다. 2000년에는 신청 7건(28명), 승인 7건(28명), 성사 2건(7명)이 이루어졌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는 1998년부터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현대와 아태 관계자간의 접촉이 이루어졌다.

관광분야의 교류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내여행사 등이 접촉 승인을 받고 접촉을 시도하였다. 우리측은 주로 북한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 개발과 남북관광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북측과의 실질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 경제분야 접촉

경제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3,960건(9,586명), 승인 3,869건(9,342명), 성사 2,045건(3,441명)에 이르고 있다. 2000년에는 신청 504건(943명), 승인 515건(951명), 성사 272건(400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물자교역 및 남북경협 협의목적의 북한주민접촉은 베이징, 홍콩 등 제3국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접촉을 시작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인의 방북 등으로 이어져 남북경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북투자 협의(4.29, 베이징), 중견기업연합회의 대북투자협의(6.13, 베이징), 중소기업인 정선개발(주)의 대북사업 협의(12.17, 베이징) 등 대북투자 상담과 교역관련 협의를 위한 북한주민접촉이 성사되었다.

라. 사회문화분야 접촉

사회문화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학술, 문화예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학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556건(3,923명), 승인 508건(3,273명), 성사 180건(2,036명)이 이루어졌다. 2000년도에는 신청 77건(300명), 승인 67건(267명), 성사 26건(60명)으로 전년도보다 접촉신청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성과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남북간의 학술교류와 관련하여 북한주민접촉은 중국지역의 동포학자·단체들의 북한과

의 교류경험을 활용하여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중국지역에서 공동학술행사를 개최하거나, 국제학술회의에 남북이 동시에 초청되는 방식으로 주로 추진되었다.

2000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세계 속의 한국어 대비연구 국제학술토론회(8.11~13, 베이징), 조선장학회창립 100주년기념 고대사 심포지움(11.24, 도쿄), 남북한 그리고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토론회(12.19~20, 연길) 등이 있었다.

문화·예술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의 신청 400건(1,694명), 승인 350건(1,597명), 성사 134건(902명)으로 집계되었다. 2000년에는 신청 62건(213명), 승인 62건(217명), 성사 36건(155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2000년도의 주요 접촉사례로는 배달문화교류회의 하바로브스크 아리랑 콘서트 참가(8.14-16, 하바로브스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코리아통일예술축전 개최 협의(11.28-12.1, 베이징) 등이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조총련」과 「민단」이 함께 주최하는 공연행사 등에 참가하는 사례도 늘어났으며(원코리아페스티벌), 조총련계 예술인(김홍재, 이철우 등)을 초청하는 경우도 잦았다.

체육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224건(1,071명), 승인 214건(1,031명), 성사 73건(585명)이다. 2000년에는 신청 32건(144명), 승인 33건(149명), 성사 15건(67명)의 북한주민접촉이 이루어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서서울청년회의소의 한·일 친선축구대회 참가(7.28-8.1, 교토), 충청대학의 국제태권도대회 참가(8.24-29, 연길), 현대노장축구회의 노장축구친선경기 및 회의 참가(9.3-6, 연길), 체육과학연구원의 아시아스포츠 과학학술세미나 참가(11.20-24, 베이징) 등이 있다.

종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374건(1,788명), 승인 318건(1,638명), 성사 135건(993명)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신청 43건(185명), 승인 41건(187명), 성사 21건(118명)이 이루어져 1999년에 비해 접촉 성사건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접촉인원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주요 접촉사례로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하얼빈세미나(10.24-26), 기독교 후꾸오까회의(12.12-15) 등을 들 수 있다.

언론·출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 말까지 신청 338건(973명), 승인 296건(871명), 성사 109건(393명)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신청 70건(273명), 승인 67건(268명), 성사 55건(246명)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하여 언론의 대북접촉이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2000년 주요 접촉사례로는 언론사들의 취재협의 및 프로그램 제작협의 등이 있었다. 또한 남북언론 교류차원에서 남북신문교환이 합의되고 일시적이거나 진행되는 것은 언론교류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겠다. 출판분야에서는 삼성당과 현암사, 규장각, 고려사, 동방미디어 등의 북한출판물 국내 출간 협의를 위한 접촉이 진행되었고, 국내 출간도 일부 이루어졌다.

과학·환경분야에서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6월 12일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신청 231건(875명), 승인 220건(857명), 성사 57건(311명)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신청 32건(80명), 승인 31건(79명), 성사 12건(22명)이 이루어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제3절 남북교역 및 교통·통신망 연결

1. 남북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남북간의 물자교역은 1988년 「7.7선언」과 그 후속조치인 「대북한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시작되었다. 남북교역이 시작된 초기에는 2천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교역규모가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정 등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서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의 NPT탈퇴선언 등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 경색되기도 하였으나 1994년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1995년부터는 남북교역규모가 2억달러수준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북한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 위탁가공 교역의 확대, 경수로건설사업의 시작에 따른 공사물자의 반출 증가 등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파하였다.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남북교역도 위축되어 교역량이 전년보다 28% 감소한 2억 2,194만달러에 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는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위탁가공교역이 확대되고 금강산관광 사업 및 경수로 건설사업 등 경협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역량이 다시 3억달러를 넘어섰다. 그 결과 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전기·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이 사상 처음으로 4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 남북교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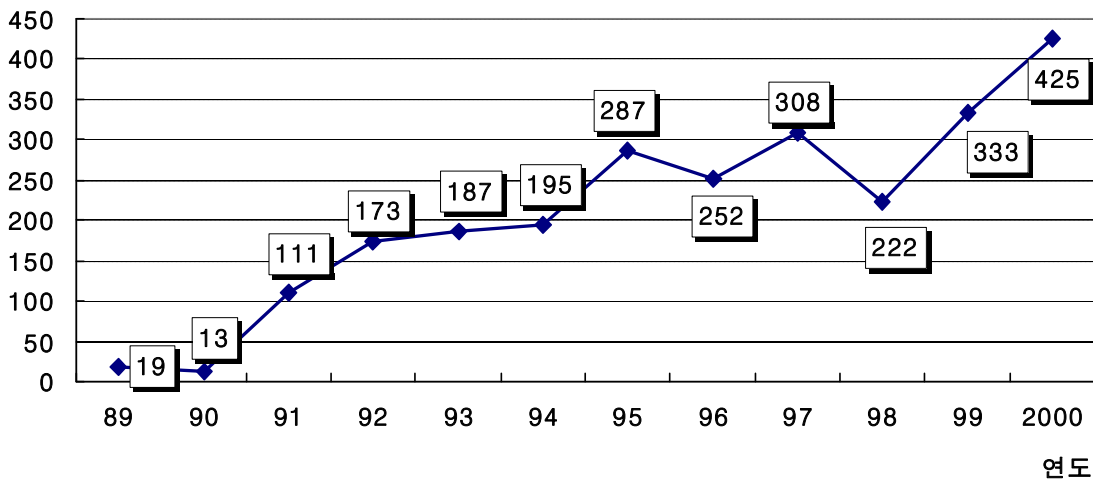
(단위 : 천달러)

| 연도 | 반 입 | | | 반 출 | | | 합 계 | | |
|------|--------|-----|-----------|--------|-----|---------|--------|-----|-----------|
| | 건수 | 품목수 | 금 액 | 건수 | 품목수 | 금 액 | 건수 | 품목수 | 금 액 |
| 1989 | 66 | 25 | 18,655 | 1 | 1 | 69 | 67 | 26 | 18,724 |
| 1990 | 79 | 23 | 12,278 | 4 | 3 | 1,188 | 83 | 26 | 13,466 |
| 1991 | 300 | 44 | 105,719 | 23 | 17 | 5,547 | 323 | 61 | 111,266 |
| 1992 | 510 | 76 | 162,863 | 62 | 24 | 10,563 | 572 | 100 | 173,426 |
| 1993 | 601 | 67 | 178,167 | 97 | 38 | 8,425 | 698 | 105 | 186,592 |
| 1994 | 708 | 73 | 176,298 | 267 | 92 | 18,249 | 975 | 165 | 194,547 |
| 1995 | 976 | 105 | 222,855 | 1,668 | 174 | 64,436 | 2,644 | 279 | 287,291 |
| 1996 | 1,475 | 122 | 182,400 | 1,908 | 171 | 69,639 | 3,383 | 293 | 252,039 |
| 1997 | 1,806 | 140 | 193,069 | 2,185 | 274 | 115,270 | 3,991 | 414 | 308,339 |
| 1998 | 1,963 | 136 | 92,264 | 2,847 | 380 | 129,679 | 4,910 | 486 | 221,943 |
| 1999 | 3,089 | 172 | 121,604 | 3,421 | 398 | 211,832 | 6,510 | 525 | 333,437 |
| 2000 | 3,952 | 203 | 152,373 | 3,442 | 505 | 272,775 | 7,394 | 647 | 425,148 |
| 계 | 15,965 | | 1,618,546 | 18,277 | | 907,671 | 34,242 | | 2,526,217 |

* '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추이>

단위(백만불)



나. 남북간 교역수지

전체 교역 규모면에서 볼 때 1989년부터 1997년까지는 남북교역이 남한의 반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1998년부터는 남한의 반출우위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1995년

부터 KEDO중유 및 인도지원물자의 반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경수로건설사업, 1998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 1999년에는 비료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이른 바 비거래성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교역규모가 1억달러를 넘어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은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인도지원, 경수로, 금강산관광사업용 물자를 제외한 실질교역수지면에서 연평균 1억 1,611만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흑자폭이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북한의 흑자 기조는 북한의 경제가 회복되고, 청산결제 등을 통해 상호 균형적인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연도별 남북간 교역수지 >

(단위 :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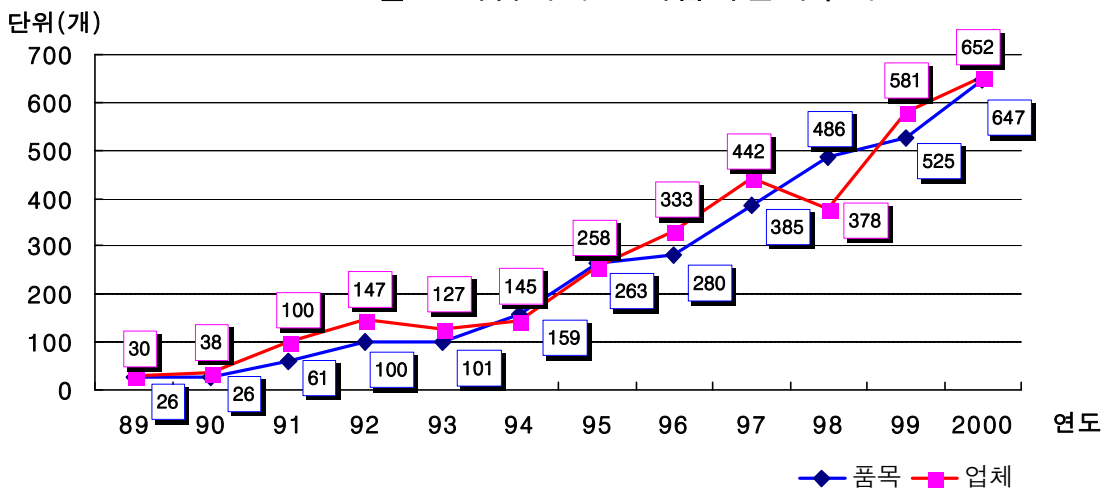
| 연도 | 반 입 | 반 출 | 계 | 교역수지 | 비 고 |
|------|-----------|---------|-----------|---------------------------|---|
| 1989 | 18,655 | 69 | 18,724 | △ 18,586 | - |
| 1990 | 12,278 | 1,188 | 13,466 | △ 11,090 | - |
| 1991 | 105,719 | 5,547 | 111,266 | △100,172 | 1991~2000연평균 △ 68,120 (△ 116,109) |
| 1992 | 162,863 | 10,563 | 173,426 | △152,300 | |
| 1993 | 178,167 | 8,425 | 186,592 | △169,742 | |
| 1994 | 176,298 | 18,249 | 194,547 | △158,049 | |
| 1995 | 222,855 | 64,436 | 287,291 | △158,419 (△169,414) | |
| 1996 | 182,400 | 69,639 | 252,039 | △112,761 (△127,016) | |
| 1997 | 193,069 | 115,270 | 308,339 | △77,799 (△133,049) | |
| 1998 | 92,264 | 129,679 | 221,943 | 37,415 (△40,629) | |
| 1999 | 121,604 | 211,832 | 333,437 | 90,228 (△53,929) | |
| 2000 | 152,373 | 272,775 | 425,148 | 120,402 (△56,794) | |
| 합계 | 1,618,545 | 907,672 | 2,526,218 | △ 710,873 (△1,190,770) | |

* ()내는 경수로 물자, 대북 무상지원, KEDO 중유, 협력사업용 물자 등 비거래성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실질교역수지임.

다. 교역형태 · 품목

남북교역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로 인해 대부분 해외중개상을 통해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한 교역당사자간에 직접 상담 및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부터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대남경협사업을 담당하고 베이징·단둥대표부를 설치하면서 직접교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연도별 교역업체와 교역품목변화추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은 교역 초기에는 금괴 등 광산물과 아연괴, 선철 등 철강금속제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34%의 반입 비중을 보이던 광산물은 1998년을 기점으로 그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교역초기부터 연평균 40%이상의 반입비중을 보이던 철강금속제품은 1999년부터 10%대로 하락하였다.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섬유제품의 비중이 1996년부터 20%이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농림수산품은 교역초기부터 반입비중이 높은 품목으로서 1999년 39.4%, 2000년에도 4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농림수산물과 섬유류

의 반입비중이 1999년 76.8% 2000년 82.4%로 높은 편중도를 보이고 있다. 2000년도의 주요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 47.2%, 석유류 35.2%, 철강금속제품 7.7%, 전기·전자 5.4% 등이다.

< 반입품목 현황 >

(단위 : 천달러)

| 연도 | 농림수산물 | 광산물 | 화학공업생산물 | 석유류 | 철강금속제품 |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 전자 및 전기 | 기타제품 | 합계 |
|------|------------------|------------------|-----------------|------------------|------------------|----------------|----------------|----------------|--------------------|
| 1989 | 2,352 (12.6) | 1,094 (5.9) | 104 (0.6) | 5 (0.0) | 15,072 (80.0) | 24 (0.1) | 0 (0.0) | 4 (0.0) | 18,656 (100.0) |
| 1990 | 5,572 (45.4) | 58 (0.5) | 1,730 (14.1) | 0 (0.0) | 4,529 (36.9) | 14 (0.1) | 0 (0.0) | 376 (3.1) | 12,278 (100.0) |
| 1991 | 10,818 (10.2) | 21,520 (20.4) | 5,732 (5.4) | 0 (0.0) | 67,303 (63.7) | 17 (0.0) | 0 (0.0) | 329 (0.3) | 105,719 (100.0) |
| 1992 | 16,906 (10.4) | 43,866 (26.9) | 13,064 (8.0) | 3,385 (2.1) | 83,514 (51.3) | 797 (0.5) | 4 (0.0) | 1,329 (0.8) | 162,864 (100.0) |
| 1993 | 12,015 (6.7) | 87,277 (49.0) | 1,528 (0.9) | 8,477 (4.8) | 64,647 (36.3) | 0 (0.0) | 80 (0.0) | 4,144 (2.3) | 178,167 (100.0) |
| 1994 | 15,250 (8.7) | 75,468 (42.8) | 1,246 (0.7) | 18,515 (10.5) | 63,069 (35.8) | 0 (0.0) | 0 (0.0) | 2,750 (1.6) | 176,298 (100.0) |
| 1995 | 22,319 (10.0) | 86,562 (38.8) | 347 (0.2) | 28,833 (12.9) | 81,629 (36.6) | 9 (0.0) | 6 (0.0) | 3,150 (1.4) | 222,855 (100.0) |
| 1996 | 23,455 (12.9) | 64,807 (35.5) | 555 (0.3) | 44,460 (24.4) | 44,260 (24.3) | 91 (0.0) | 1,697 (0.9) | 3,076 (1.7) | 182,400 (100.0) |
| 1997 | 27,326 (14.2) | 48,313 (25.0) | 15,677 (8.1) | 47,091 (24.4) | 47,946 (24.8) | 999 (0.5) | 3,140 (1.6) | 2,578 (1.3) | 193,069 (100.0) |
| 1998 | 21,798 (23.6) | 765 (0.8) | 2,427 (2.6) | 38,794 (42.0) | 20,254 (22.0) | 698 (0.8) | 3,518 (3.8) | 4,010 (4.3) | 92,264 (100.0) |
| 1999 | 47,886 (39.4) | 2,462 (2.0) | 2,494 (2.1) | 45,513 (37.4) | 16,120 (13.3) | 1,557 (0.3) | 2,838 (2.3) | 2,707 (2.2) | 121,604 (100.0) |
| 2000 | 71,934 (47.2) | 517 (0.3) | 1,538 (1.0) | 53,693 (35.2) | 11,747 (7.7) | 1,739 (1.1) | 8,254 (5.4) | 2,940 (1.9) | 152,373 (100.0) |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3년부터 위탁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출로 석유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KEDO중유, 대북식량지원 등에 따라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산품의 반출증가에 따라 석유류의 비중은 1997년부터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기계류·운반용 기계가 1997년부터 10%이상, 화학공업제품도 1999년 20.2%, 2000년에는 35.0%로 반출비중이 높아졌

다. 이는 경수로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용 물자의 반출과 대북 비료지원에 기인된 것이다. 2000년의 주요 반출품목은 화학공업제품 35.0%, 섬유류 15.9%, 기계류·운반용 기계 11.8%, 전기·전자제품 10.3%, 1차산품 9.5%, 비금속광물 7.5% 등이다.

< 반출품목 현황 >

(단위: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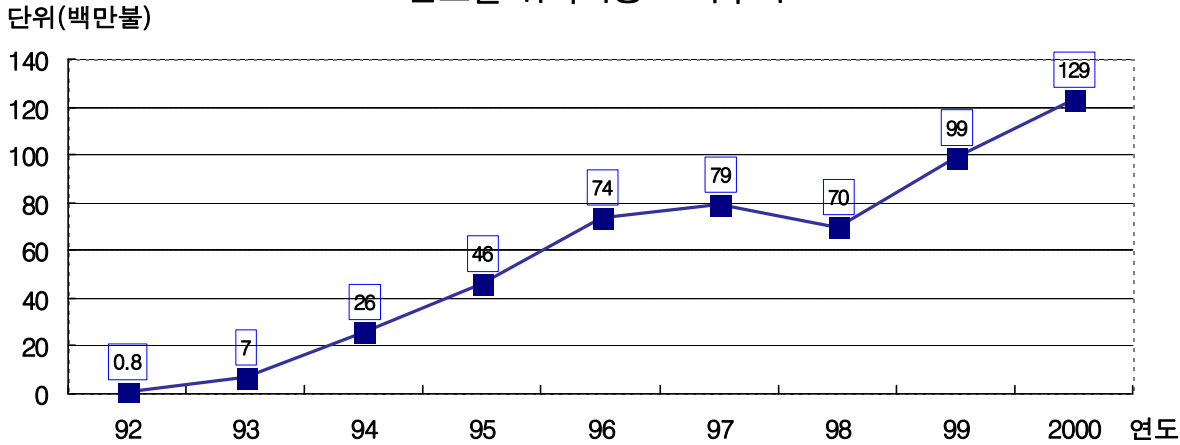
| 연도 | 일차산품 | 화학공업 제 품 | 플라스틱 고 무 | 비 금속 광물제품 | 섬 유 류 | 생활 용품 | 철강금속 제품 | 전자 및 전 기 |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 잡제품 | 합계 |
|------|------------------|------------------|-----------------|------------------|------------------|----------------|-----------------|------------------|------------------|----------------|--------------------|
| 1989 | 0 (0.0) | 0 (0.0) | 0 (0.0) | 0 (0.0) | 69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69 (100.0) |
| 1990 | 10 (0.8) | 0 (0.0) | 0 (0.0) | 0 (0.0) | 83 (7.0) | 0 (0.0) | 0 (0.0) | 0 (0.0) | 1,095 (92.2) | 0 (0.0) | 1,188 (100.0) |
| 1991 | 1,607 (29.0) | 1,819 (32.8) | 216 (3.9) | 1,392 (25.1) | 66 (1.2) | 0 (0.0) | 0 (0.0) | 447 (8.1) | 0 (0.0) | 0 (0.0) | 5,547 (100.0) |
| 1992 | 64 (0.6) | 5,214 (49.4) | 2,369 (22.4) | 135 (1.3) | 717 (6.8) | 85 (0.8) | 1,957 (18.5) | 0 (0.0) | 22 (0.2) | 0 (0.0) | 10,563 (100.0) |
| 1993 | 69 (0.8) | 920 (10.9) | 732 (8.7) | 1 (0.0) | 5,581 (66.2) | 20 (0.2) | 260 (3.1) | 463 (5.5) | 121 (1.4) | 260 (3.1) | 8,425 (100.0) |
| 1994 | 3,317 (18.2) | 1,499 (8.2) | 152 (0.8) | 79 (0.4) | 12,077 (66.2) | 255 (1.4) | 274 (1.5) | 160 (0.9) | 56 (0.3) | 379 (2.1) | 18,249 (100.0) |
| 1995 | 10,754 (16.7) | 906 (1.4) | 1,961 (3.0) | 11,363 (17.6) | 34,986 (54.3) | 1,465 (2.3) | 199 (0.3) | 262 (0.4) | 1,548 (2.4) | 991 (1.5) | 64,436 (100.0) |
| 1996 | 6,715 (9.6) | 2,506 (3.6) | 3,069 (4.4) | 13,666 (19.6) | 36,340 (52.2) | 1,907 (2.7) | 290 (0.4) | 2,172 (3.1) | 960 (1.4) | 2,013 (2.9) | 69,639 (100.0) |
| 1997 | 17,048 (14.8) | 2,877 (2.5) | 5,888 (5.1) | 30,399 (26.4) | 33,970 (29.5) | 3,565 (3.1) | 3,948 (3.4) | 3,319 (2.9) | 13,098 (11.4) | 1,160 (1.0) | 115,270 (100.0) |
| 1998 | 19,944 (15.4) | 5,054 (3.9) | 4,717 (3.6) | 21,467 (16.6) | 28,543 (22.0) | 3,707 (2.9) | 9,475 (7.3) | 5,495 (4.2) | 28,923 (22.3) | 2,355 (1.8) | 129,679 (100.0) |
| 1999 | 17,834 (8.4) | 42,691 (20.2) | 4,962 (2.3) | 50,542 (23.9) | 36,286 (17.1) | 3,832 (1.8) | 16,953 (8.0) | 7,307 (3.4) | 26,985 (12.7) | 3,484 (1.6) | 211,832 (100.0) |
| 2000 | 25,896 (9.5) | 95,528 (35.0) | 4,752 (1.7) | 20,497 (7.5) | 43,433 (15.9) | 5,414 (2.0) | 13,995 (5.1) | 28,075 (10.3) | 32,122 (11.8) | 3,042 (1.1) | 272,775 (100.0) |

라.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한 후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식의 교역이다. 1991년 코오롱상사가 학생용 가방을 위탁가공교역으로 생산한 이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년보다 40.3%, 2000년에는 29.7% 증가하였다. 2000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1억 2,919만달러

로 전체 교역액의 30.4%, 거래성 교역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위탁가공 교역추이>



위탁가공교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방, 신발, 완구 등도 일부 생산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칼라TV, TV스피커, 자동차배선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8년에는 컴퓨터모니터 부품, 음향기기, 전자부품, 철도차량, 카세트테이프 등이, 2000년에는 라디오카세트, 유선전화기, 컴퓨터모니터, 당면 등이 새로운 생산 품목으로 추가되었다. 위탁가공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방북은 1995년에 대동화학의 기술진에 의해 처음 이루어진 이래 중단되었다가 1998년에 (주)엘칸토 등 7개 기업 50명이, 1999년에 (주)성남전자공업 등 6개 기업 57명이, 2000년에는 (주)IMRI 등 10개 기업 81명이 방북, 기술지도를 하였다. 또한, 전기용품의 형식승인기관인 기술표준원 관계자 2명이 최초로 현지공장에 대한 확인검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설비반출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총 65건 1,387만 달러로 2000년도에만 31건 557만달러 상당의 설비가 반출되었다.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도 매년 증가하여 2000년에 151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설비 반출과 참여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위탁가공교역이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에 반출된 설비는 전자제품(컴퓨터모니터, TV, 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등)과 전기제품(변압기철심, 디가우징코일, 컴팩트형 전구, 통신용신호분배기 등) 및 포장재용 발포수지 등 관련설비로서 앞으로 보다 많은 품목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위탁가공교역 >

(단위 : 천달러)

| 연도 | 반 입 | | 반 출 | | 합 계 | |
|------|-----------|---------|---------|---------|-----------|---------|
| | 전 체 | 위탁가공 | 전 체 | 위탁가공 | 전 체 | 위탁가공 |
| 1989 | 18,655 | - | 69 | - | 18,724 | - |
| 1990 | 12,278 | - | 1,188 | - | 13,466 | - |
| 1991 | 105,719 | - | 5,547 | - | 111,266 | - |
| 1992 | 162,863 | 638 | 10,563 | 200 | 173,426 | 838 |
| 1993 | 178,167 | 2,985 | 8,425 | 4,023 | 186,592 | 7,008 |
| 1994 | 176,298 | 14,321 | 18,249 | 11,343 | 194,547 | 25,663 |
| 1995 | 222,855 | 21,174 | 64,436 | 24,718 | 287,291 | 45,892 |
| 1996 | 182,400 | 36,238 | 69,639 | 38,164 | 252,039 | 74,402 |
| 1997 | 193,069 | 42,894 | 115,270 | 36,175 | 308,339 | 79,069 |
| 1998 | 92,264 | 41,371 | 129,679 | 29,617 | 221,943 | 70,988 |
| 1999 | 121,604 | 53,736 | 211,832 | 45,883 | 333,437 | 99,620 |
| 2000 | 152,373 | 71,966 | 272,775 | 57,224 | 425,148 | 129,190 |
| 합계 | 1,618,545 | 285,323 | 907,672 | 247,347 | 2,526,218 | 532,670 |

< 연도별 위탁가공설비 반출 현황 >

(단위 : 천달러)

| 년 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계 |
|---------|------|------|------|-------|--------|--------|--------|
| 업체수(건수) | 2(2) | 3(6) | 4(4) | 6(6) | 13(16) | 17(31) | 45(65) |
| 금 액 | 532 | 670 | 490 | 1,380 | 5,234 | 5,565 | 13,871 |

<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현황 >

| 년 도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
| 업체수 | 4 | 7 | 9 | 18 | 38 | 48 | 72 | 132 | 151 |

2. 남북간 교통로 개설과 운영

가.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구체적 이행대책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 제5항에서는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후속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간의 공식적인 수송로가 개설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1994년 7월 남북간 수송장비운행승인제도가 시행된 이래, 승인초기에는 대부분 제3국적선에 의한 수송이었으나, 점차 우리나라 국적선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00년도에 들어서는 공로 및 육로 수송의 길도 열리게 되었다.

1) 선 박

2000년도 남북간 선박운항 회수는 편도기준으로 총 2,073회로 전년대비 20.9% 증가하였다. 이 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916회로 전년대비 25.3% 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1,157회로 전년대비 17.7% 증가하였다.

<남북간 선박운항 현황>

(단위 : 회)

| 구 분 | '94. 7~12 | '95 | '96 | '97 | '98 | '99 | 2000 | 계 |
|-------|--------------|-----|-----|-----|-----|-------|-------|-------|
| 남한→북한 | 27 | 99 | 101 | 113 | 260 | 731 | 916 | 2,247 |
| 북한→남한 | 70 | 208 | 221 | 244 | 342 | 983 | 1,157 | 3,225 |
| 계 | 97 | 307 | 322 | 357 | 602 | 1,714 | 2,073 | 5,472 |

2000년 남북간 선박에 의한 물동량은 총 703,145톤으로 전년대비 28.5%가 감소하

였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물동량은 547,262톤으로 전년대비 29.9% 감소하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물동량은 155,883톤으로 23.2%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원인은 중량 비중이 큰 KEDO반출과 광산물 등의 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남북간 물동량 현황>

(단위 : 톤)

| 구분 | '94. 7~12 | '95 | '96 | '97 | '98 | '99 | 2000. | 합계 |
|-------|--------------|---------|---------|---------|---------|---------|---------|-----------|
| 남한→북한 | 6,758 | 281,220 | 147,888 | 361,282 | 396,111 | 780,593 | 547,262 | 2,521,114 |
| 북한→남한 | 131,136 | 345,778 | 187,610 | 249,759 | 162,220 | 203,019 | 155,883 | 1,435,405 |
| 계 | 137,894 | 626,998 | 335,498 | 611,041 | 558,331 | 983,612 | 703,145 | 3,956,519 |

2) 항공기

남북정상회담시(2000.6.13) 남북 직항로를 이용하여 남북간에 항공기가 최초로 운행된 이후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남북장관급 회담 일행, 백두산 관광단 수송 등 2000년 12월 말 현재 18회 운행하였다.

3) 차 량

2000년 8월 8일 판문점을 통해 평양체육관 건설물자가 최초로 육로를 통해 운송되어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육·해·공 수송체계의 다양화를 보여 주었다.

나.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항로 개설·운영

1997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남북한은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 항공서비스 노선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하고, 「대구항로관제소와 평양항로관제소간의 관제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3월 1일부터 6일까지 대한항공 등 6개 항공사가 항공로에 대한 시험비행을 실시하였고, 4월 23일 항공로가 완전히 개설되어 월 180여편의 항공기가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1998년 9월 10일에는 대구 FIR을 통과하는 북한~일본간 직항로(B332항로)의 운영이 개시됨으로써 미주 및 러시아간 운항시간을 노선에 따라 20~50분 정도 단축시

킬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2,000만 달러 이상의 유류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3. 남북간 통신망 연결 및 운영

가. 남북간 통신망 연결현황

1971년 남북적십자 제1차 예비회담에서 쌍방연락사무소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의 가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으로서 1945년 남북 쌍방간의 전화운용이 중단된 이래 26년만에 전화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계기로 남북조절위원장간 전화가 1회선 개통되었으며, 각종 회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해 8월에는 서울과 평양간 회담지원용 전화 18회선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1975년 북측이 일방적인 직통전화 운용을 중단한 이래 일부 전화회선의 재개통과 폐쇄가 반복되다가 1984년 북한의 수해물자 인수와 관련한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직통전화 전화선이 재개통되었다.

2000년 현재 남북한간에는 직접 연결된 전화는 29회선이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21회선이 설치되어 있다.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간 합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경수로사업과 금강산 관광 및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망이다. 한편, 북한의 신포 경수로부지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중국을 경유하는 국제우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남북간 직접연결 전화현황>

(2000.12.31 현재)

| 용 도 | 구 간 | 회선수 | 연결시기 |
|----------------------|-----------------|-----|------------|
| 남북적십자간직통전화 | 서울~평양 | 2 | '71. 9.22 |
| 남북조절위원회 | 남북조절위원장간 | 1 | '72. 7. 4 |
| 남북회담지원용 | 서울~평양 | 18 | '72. 8.26 |
| 남북경제회담용 | 서울~평양 | 1 | '84. 12.21 |
| 관문점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통전화 | 남북적십자회담연락사무소간 | 2 | '71. 9.22 |
| | 남북연락사무소간 | 2 | '92. 5.18 |
| 남북한 관제통신망 | 대구-평양관제소(관문점경유) | 2 | '97. 11.19 |
| |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 1 | '98. 2.17 |
| 합 | 계 | 29 | |

<남북간 간접연결 전화현황>

(2000.12.31 현재)

| 용 도 | 구 간 | 회선수 | 연결시기 |
|-------------|------------------------------|-----|------------|
| KEDO 경수로사업용 | 한국~일본KDD~인텔셋~평양~신포 | 8 | '97. 8. 4 |
| | | 2 | 2000.7.26 |
| 금강산 관광지원용 |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 6 | '98. 11.17 |
| | | 2 | '99. 5.18 |
| 평양실내종합체육관용 | 한국~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 ~온정~장전 | 3 | 2000.11.21 |
| 합 | 계 | 21 | |

나. 남북간 관제통신망 개설 및 운영

1998년 10월 남북간에 체결된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향로관제소와 북한의 평양향로관제소간에 관제통신망이 연결되었다. 남북 관제통신망의 주회선은 1997년 11월

19일 설치된 판문점경유 남북간 직통전화로 2회선이 개설되었고, 보조회선은 1998년 2월 17일 인공위성(ASIASATⅡ)을 이용, 남북 직접연결 방식으로 1회선이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현대-아태간의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통신시설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8년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주)과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2일 현대전자산업(주),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온세통신이 공동으로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1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17일 제3국 경유 국제전화방식으로 6회선이 연결되고 1999년 5월 18일 추가로 2회선이 개통됨으로써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망은 모두 8회선으로 늘어났다.

라.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지원 통신

북한은 2000년 7월말부터 금강산관광객의 통신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현대의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관계자들이 평양(건설현장사무실과 숙소)에서 서울로 전화통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서울에서 평양으로는 전화를 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체육관건설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평양으로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신망을 구성하는 방법과 기존의 금강산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강산 통신망을 활용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23일 현대전자, 한국통신, 온세통신은 공동명의로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통신가능 지역을 금강산지역에서 금강산지역과 평양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협력사업 변경을 통일부에 신청하여 11월 20일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남북간 민간차원의 최초의 쌍방향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화 2회선 및 FAX 1회선을 포함 총 3회선이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에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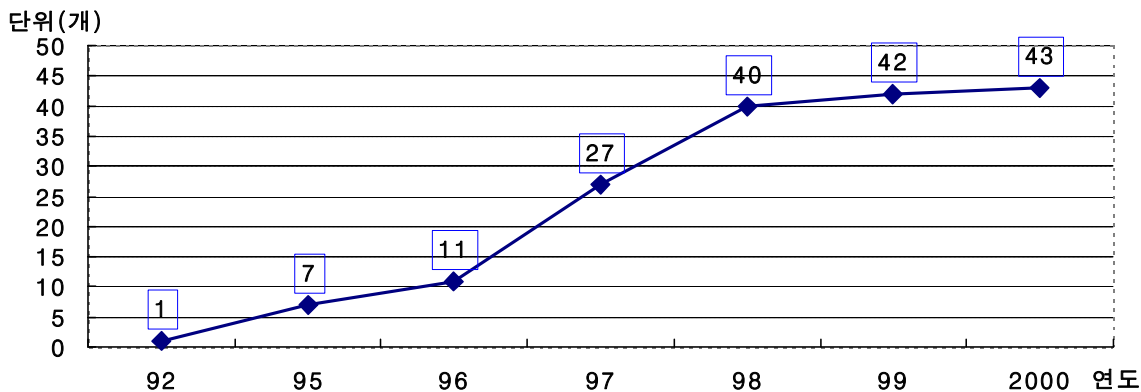
제4절 남북경제 · 사회문화협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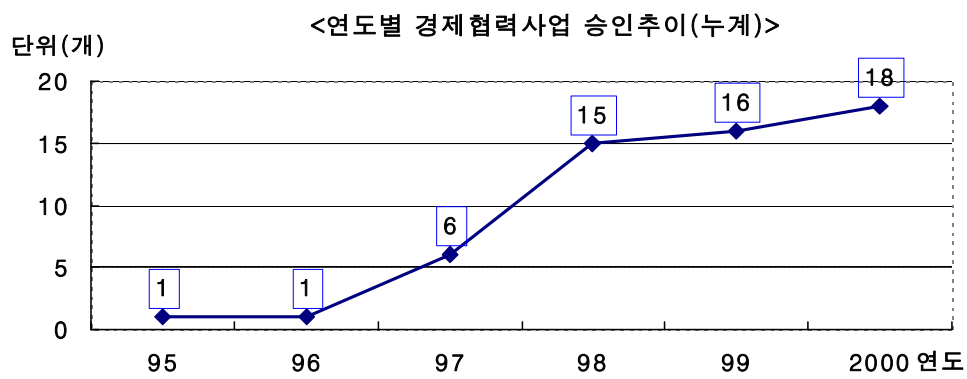
1. 남북경제교류협력

가. 협력사업(자) 승인

1992년 10월 5일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최초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0년 12월말까지 총 43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으나, 1999년 12월말에 협력사업자 승인기업 중 4개 기업이 최초승인기준 미달 및 남북경협질서저해 등을 이유로 그 승인이 취소되어 현재 39개 기업이 협력사업자로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8개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 10개 기업이 협력사업자 승인을, 11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추이(누계)>





< 남북경제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

- ※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
- ▲ 표시는 협력사업자 승인이 취소된 기업

(2000.12.31 현재)

| 기 업 | 사 업 내 용 | 지 역 | 금 액 |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
| ※ 대우 (합영) | 남포공단 셔츠, 가방, 자켓 등 3개 사업 | 남포 | 512만달러 | '92.10.5 ('95. 5.17) |
| 고합물산 (합영,합작) | 의류·봉제, 직물 등 4개 사업 | 남포,나진,선 봉,평양 | 686만달러 | '95. 5.17 |
| 한일합섬 (합영,합작) | 웨타, 봉제, 방직 등 4개 사업 | ” | 980만달러 | '95. 6.26 |
| 국제상사 (합영,합작) | 신발 | ” | 350만달러 | '95. 6.26 |
| ※ 녹십자 (합작) | 의약품(유로키나제) 제조 | 평양 통일구역 | 311만달러 | '95.9.15 ('97.11.14) |
| 동양시멘트 (단독투자) | 시멘트 싸이로 건설 | 나진,선봉 | 300만달러 | '95. 9.15 |
| 동룡해운 (단독투자) | 하역설비(크레인 등) | ” | 500만달러 | '95. 9.15 |
| 삼성전자 (합작) | 나진선봉 통신센터 | ” | 700만달러 | '96. 4.27 |
| ※ 태 창 (합영) | 금강산 샘물 개발 | 강원도 고성군 | 580만달러 | '96.4.27 ('97.5.22) |
| 대우전자 (합영) | TV 등 가전제품 생산 | 남포 | 640만달러 | '96. 4.27 |
| ※ 한국전력공사 | 경수로건설지원사업 | 신포 | 4,500만달러 →11,430.8 만달러 | '96. 7.15 ('97.8.16→ '99.8.10변경) |
| |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본공사 (TKC) | 금호지구 | 40.8억달러 (PWC금액 포함) | ('99.12.15) |
| ※ 미흥식품 (합영) | 수산물 채취·가공 | 청진,함흥,원 산,남포 | 47만달러 | '97. 5.22 ('98. 3.13) |
| ▲신일피혁 | 피혁, 의류 봉제 | 나진·선봉 | 300만달러 | '97. 5.22 ('98. 3.13) |
| 한 화 (합작) | PVC장판 제조 | 평양,남포 | 90만달러 | '97. 5.22 |
| LG전자 /LG상사 (합영) | 전자제품(컬러TV) 조립생산 | 평양 | 450만달러 | '97. 5.22 '97.10.14 (변경승인) |

| 기 업 | 사 업 내 용 | 지 역 | 금 액 |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
| ※ 한 국 통 신 | 경수로건설통신지원사업 | 신포 | . | '97.8.1 ('97.8.1) |
| 삼성전자 (합영) | 전전자교환기 등 통신설비생산 | 나진,선봉 | 500만달러 | '97. 8. 1 |
| 코오롱상사 (합작) | 섬유 및 섬유제품 가공 · 생산 | 평양,남포 | 400만달러 | '97. 8. 1 |
| 신 원 (합작) | 의류 · 봉제사업 | 평양 | 100만달러 | '97. 8. 1 |
| 파라우수산 (합영) | 수산물 생산 · 가공 | 원산,해주 | 300만달러 | '97. 8. 1 |
| 금오식품 (합작) | 냉면 · 고구마전분 제조 | 평양 | 40만달러 | '97. 8. 1 |
| 한국토지공사 (단독투자) | 나진 · 선봉지대 시범공단 조성 | 나진,선봉 (유현지구) | . | '97.10.14 |
| 대상물류 (단독투자) | 나진 · 선봉 국제물류 유통기지 개발 · 운영 | 나진,선봉 (동명지구) | 420만달러 | '97.10.14 |
| 삼천리자전거/L G상사 (합영) | 자전거 조립 · 생산 | 나진, 선봉 | 800만달러 | '97.10.14 |
| ※태영수산/LG 상사 (합영) | 가리비 양식 · 생산 | 나진, 원산 | 65만달러 | '97.10.14 ('98. 8.28) |
| ※한국외환 은행 | 경수로사업 부지내 은행점포 개설 | 금호 | . | '97. 11.6 ('97.11.6) |
| ※(주)아자커뮤니 케이션(합영) | 인쇄물 및 TV광고 제작 | 평양, 기타지 역 | 편당 25만달러 | '97.11.14 ('98. 2.18) |
| (주)에이스침대(합작) | 침대 및 가구 제조 · 판매 | 평양 락랑구 역 | 425만달러 | '98. 1. 9 |
| 롯데제과 (합영) | 과자류(초코파이) 생산 및 판매 | 평양 | 575만달러 | '98. 1. 9 |
| (주)광인 (단독투자) | 옥외광고(야립, Push Cart, 옥상 및 도시형 간판, 내부벽면 부착광고 등) | 평양, 나진,선 봉 | 250만달러 | '98. 2. 18 |
| 안성개발 (합작) |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 남포 | 50만달러 | '98. 3.13 |
| ※두레마을영 농조합법인 (합작) |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 나진,선봉 | 200만달러 | '98. 4. 8 ('98. 7.27) |

| 기 업 | 사 업 내 용 | 지 역 | 금 액 |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
| ※ 국제 옥수수재단 (조사·연구) | 새품종 생산력 검정시험 및재배 적지 확정, 신품종 슈퍼옥수수개 발을 위한 공동연구 | 평양,기타 | 30.9억원 →110억원 (‘99.3.25) | ’98. 6.18 (‘98.6.18→ ’99.3.25변경) |
| ▲세원 커뮤니케이션 | 북한올림픽 위원회 스폰서쉽 대 행 | | 미정 | ’98.8.6 |
| ※(주)현대상선, 현대건설,금강개 발산업 현대아산 (‘99.2.25) (단독및BOT) | 금강산관광사업(‘98.9.7)→금강산 관광 및 개발사업 (‘99.1.15) | 금강산 | 9,583만달러 →1억33만달 러(‘99.1.15) →1억4,867만 달러 (‘99. 4.16) | ’98. 8. 6 (‘98.9.7→ ’99.1.15변경 ’99.4.16변경) |
| ※(주)코리아랜드 (합영) | 북한부동산개발(임대·분양) 및 건설팅업 | 평양 | 60만달러 | ’98. 8.28 (‘98. 8.28) |
| ▲성화국제그룹 | 원정국제자유시장 건설·운영 및 평양지역내 백화점 운영 | 나진·선봉 평 양 | 190만달러 | ’98.9.14 |
| ▲아이엠시스템 | 방송용 광고제작 | . | 미정 | ’98.10.17 |
| ※ 백산실업 (합영) | 버섯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 급, 표고·느타리·진주 등 버섯 류 생산·수출 | 나진,선봉 (선봉군읍) | 20.8만달러 (남북한총투자액 81만달러) | ’98.10.28 (‘98.10.28) |
| ※현대전자산업, 한국통신,온세 통신 |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 (1단계: 온정리~장전간 통신선로 매설, 제3국 경유 남북간 통신망 구축 및 운영) | 금강산 관광 지역내 | 13만달러 (1단계) | ’98.11.11 (‘98.11.11) |
| (주)해주 (합작) | 북한수산물 생산 및 판매 | 서해인근 | 299만달러 | ’99. 1. 8 |
| ※(주)평화자동 차 (합영) | 자동차 수리 및 조립공장 건설 | 남포 | 3억달러 (1단계: 666만달러) | ’99. 8. 31 (’00. 1. 7) |
| ※ 삼성전자 | 남북 S/W 공동개발 | 북경 | 72.7만달러 | ’00. 3.13 (’00. 3.13) |

나. 공단조성사업

현대가 개성지역에 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북한 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99년 10월 1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대

의 서해안 공단조성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현대의 사업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로써 현대와 아태간에 의향서 수준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현대는 2000년 8월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개성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 9일에는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개성지역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합의하였으며, 현대-아태간에 관련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후 11월에는 현대와 한국토지공사가 공단개발을 공동 시행키로 합의하고, 1단계로 개성직할시의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의 100만평 사업에 대해 현지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의선과 개성-문산간 도로가 개통되어 남북이 연결될 경우 개성지역은 남한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개성시를 배후도시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전력·용수·항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등 경험분야 4개 합의를 실효적으로 이행하여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 나가는 가운데, 현대로 하여금 고용·임금·세제혜택·송금 등 우리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적합한 제도가 경제지구 지정시 반영되도록 북측과 사전 협의토록 유도하면서 사업추진체계와 자금조달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내외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여 안정성 있고 국제적으로 경제성 있는 공단으로 개발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이 이미 개방한 나진·선봉지역의 경우는 지난 1998년 10월 이후 남한기업인의 방문과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제조업분야 협력사업

2000년에 들어 제조업 분야에서는 사업의 모색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제품 생산 및 반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창의 금강산 샘물은 2000년 7월부터 국내판매가 개시되었고, 녹십자는 혈전증 치료제 생산공장을 9월에 준공하여 시험생산을 시작하였다. 또한, 평화자동차는 2000년 1월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우선 1단계로 자동차 수리·개조공장

을 완공하였으며, 2000년 10월 본공장 건설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까지는 연간 약 15,000대 규모의 자동차를 조립·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라. 농·어업분야 협력사업

농·어업분야 협력사업은 북한의 농·어업분야 구조개선을 도와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2000년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옥수수 개발사업은 1998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2000년말까지 국제옥수수재단이 16차례 방북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1년 6월로 완료예정이던 사업을 향후 7년간 사업성과에 따라 1년씩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임가공사업은 2000년 4월부터 남북한 동시판매된 '한마음' 담배 생산을 종료하고, 새로운 담배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아산의 금강산지역 영농사업은 2000년 2월 첫 농산물을 출하한 이래,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8월부터는 사업이 재개되었다.

한편, 어업분야에서는 미홍식품, 수협중앙회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성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2000년 12월의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마.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사업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TRADP는 두만강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 중심지 및 가공·제조업 중심지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거점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UNDP가 주관하고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일본, 핀란드, 캐나다 등이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다.

1991년 10월 두만강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회원국들은 '점진적 조화'를 개발방식으로 채택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5개국위원회와 접경 3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실

무작업반 회의 및 TRADP 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제3단계 TRADP 사업이 추진되며 관광, 교역 및 투자활성화, 수송, 환경 등 부문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하며, 운영조직을 개혁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북한 경제의 근간인 농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한의 외자유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서방국가 및 국제기구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며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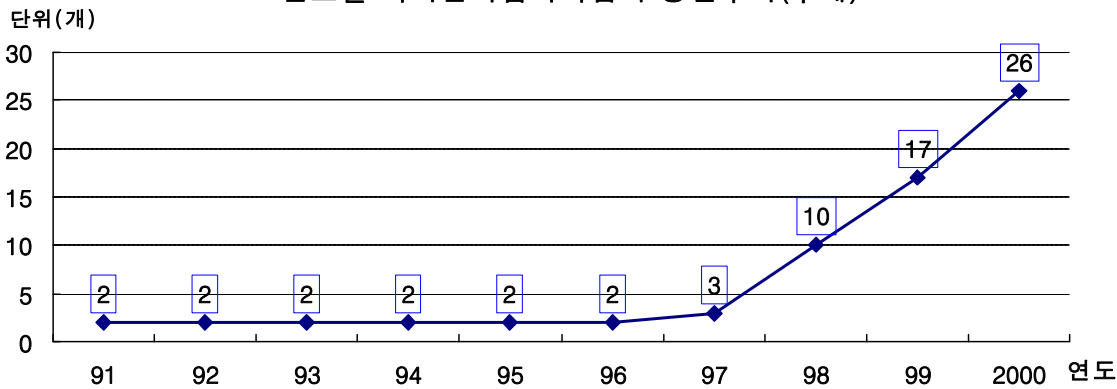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사업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가. 협력사업(자)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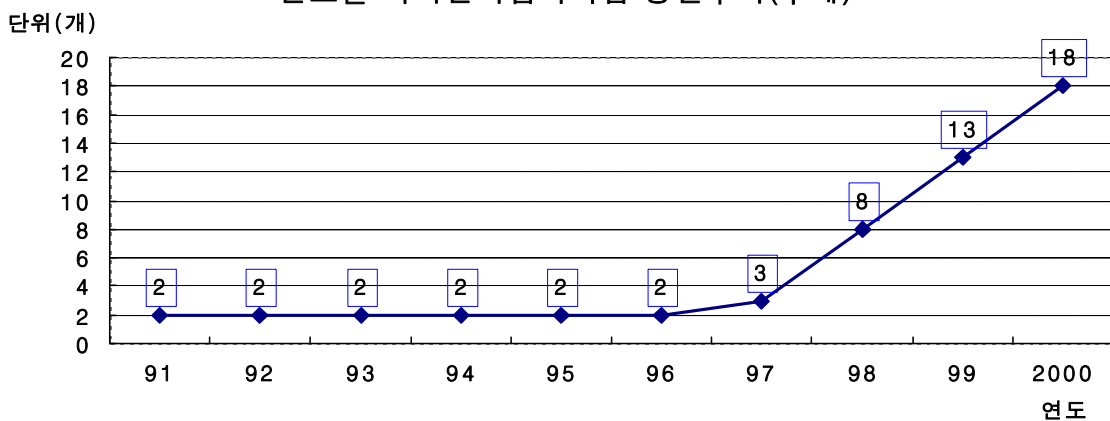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지바) 남북단일팀 참가에 대한 최초의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이후 2000년 12월말 현재까지 26개 단체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스포츠아트, 한민족복지재단 등 7개 단체에 대한 승인은 1998년에, 현대아산, SN21 엔터프라이즈 등 7개 단체에 대한 승인은 1999년에 이루어졌으며, 2000년에는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와 한국문화재단 등 9개 단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연도별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추이(누계)>



이 중 18개 사업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1998년에는 문화예술, 방송·언론,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5개 사업이, 1999년에는 체육분야에서 2개(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교류사업, 1999년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자동차랠리) 사업이, 문화예술분야에서 3개(1999년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양·서울공연,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평양교예단 한국방문공연) 사업이, 2000년에는 문화, 예술분야에서 5개(평양교예단 서울공연,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 사업, 「조선인포뱅크」의 경제·산업정보에 대한 국내 미러사이트 개설, 금강산가극단 한국 방문공연) 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다.

연도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추이(누계)



나. 관광·체육교류

남북관광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작한 역사적인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개성관광, 백

두산-한라산 교차관광 등이 남북한간에 협의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초기에 관광객 억류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지만,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일상적인 관광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사업자인 현대측은 안정적인 관광객 확보를 위해 관광선 1척을 강원도 동해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지를 변경(2000.3.9)하였고, 추가로 쾌속선 1척을 도입하여 취항(2000.10.1)하였다. 이에 따라 총 4척의 관광선이 동해항, 속초항, 부산항에서 매일 다양한 일정을 가지고 운항되고 있다.

아울러 현대는 북한의 장전항 본선부두를 건설(2000.5)한 데 이어, 「해상호텔」을 장전항에 설치·운영(2000.10)하고 있으며, 현재는 「금강산여관」을 임차했으며 보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대는 금강산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대와 북측은 개성관광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바 있다. 남북한간의 도로가 연결되면 육로를 통한 개성관광이 빠르면 2001년에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더불어 백두산과 한라산의 시범적인 교차관광이 추진되고 있다.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되었던 언론사 사장단 방북시 우리측 제의를 북측이 수용함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써, 우리측 백두산관광단 109명이 먼저 백두산, 평양 등을 방문(2000.9.22-28, 6박7일)하였다. 북측의 한라산 관광단은 당초 10월초에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다소 연기되어 2001년 3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두산-한라산의 시범교차관광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향후 남북관광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확대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분야의 교류는 1991년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99년에 와서야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다.

1999년에는 현대아산이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설하는 한편, 제1차 통일농구경기대회를 평양에서 개최(9.28-29)하였다. 이어서 서울에서 통일농구경기대회

(1999.12.23-24)를 개최함으로써 1991년 북한축구선수단의 남한방문 이후 8년만에 북한남녀농구선수단의 남한방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2000년도에는 우인방이 금강산 ‘자동차질주경기대회’(2000.7.3-4)를 개최하여 우리측 인원 228명과 차량 47대가 참가하였으며, 현대의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이 본격화되어 평양에 우리 건설근로자들이 상주하는 한편, 건설물자, 장비 등이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운송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입장을(2000.9.15) 함으로써 남북화합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다. 문화·예술 교류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합동음악회, 공동전시회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교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5월에는 한국문화재단 소속 리틀엔젤스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하였고, 10월에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에서 국내 음악인들과 함께 평양 윤이상음악회에 참가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999년 초부터 이에 따른 후속공연과 클래식,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상호교환공연이 추진되었다. 1999년 12월 5일에는 (주)코래콤과 SBS가 주관한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가 평양에서 열렸으며, 12월 20일에는 SN21엔터프라이즈와 MBC 주관하에 남북한 대중가수 합동공연인 『민족통일음악회』가 개최되었다.

2000년에는 북측 예술단의 대규모 장기간 남한방문 공연이 특기할 만하다. (주)평화자동차의 초청으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102명이 5월24일부터 5월 30일까지 남한을 방문하여 5회에 걸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남북정상회담 경축 공연을 펼쳤다. 그리고 NS21이 주관사업자로 평양교예단을 초청하였다. 이에 평양교예단 102명이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11회에 걸쳐 공연하였으며, 13만명 이상의 관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 공연들은 1990년 「송년통일전통음악회」 이후 10년만의 남한방문공연이며, 최장기간 북한주민들이 남측 지역에 와서 머물렀던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8월에는 『광복 55돌 경축·공동선언 환영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를 위하여 조선국립교향악단 132명이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남한을 방문하였다. 방문단

은 KBS홀과 예술의 전당에서 KBS교향악단, 조수미, 장한나 등과 총 4회의 협연공연을 하였다. 이어 12월에는 한국문화재단의 초청으로 「조총련」 금강산가극단 82명이 서울을 방문,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4회의 공연을 개최하였다.

라. 언론 · 출판교류

언론 · 출판분야의 협력사업은 1997년 중앙일보사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지역 문화유적 답사 · 조사」 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통일문화연구소는 1998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지역 문화유적 등을 취재하였다. 경향신문사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는 1998년 「남북통합문화데이터베이스구축 및 활용사업」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현재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활용되고 있고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는 다시 2000년 「북한 문화예술자료 정보화 사업」으로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다.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주) ※표시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단체임.

(2000.12.31 현재)

| 사업자 | 사업상대자 | 사 업 내 용(지역) | 금 액 |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
| ※ 대한탁구협회 | 북한탁구협회 | 제41회세계선수권대회(1991.4.24~5.6)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일본) | 7억 9천만원 (남북협력기금) | 1991. 3.21 (1991. 3.21) |
| ※대한올림픽위원회 | 북한올림픽위원회 | 제6회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1991.5.27~6.4)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포르투갈) | 1억 6천만원 (남북협력기금) | 1991. 5. 1 (1991. 5. 1) |
| ※통일문화연구소 |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 북한문화유적 답사·조사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 6만달러 | 1997.12.10 (1997.12.10) |
| ※연변과기대 후원회→ 동북아교육 문화협력재단 (1999.6.29)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나진 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 | 나진·선봉내 과기대 설립·운영 (나진·선봉) | 500만달러 | 1998 .1. 9 (1998. 6. 5) |
| 문화방송 | 금강산국제관광 총회사 | 북한의 자연경관 및 명승고적 TV 프로그램 촬영(평양, 개성, 백 두산, 금강산 등) | 60만달러 | 1998. 3.13 |
| ※한민족복지 재단 (합영) | 라선경제 협조회사 | 제약공장 설립 및 병원운영 (나진·선봉) | 240만달러 | 1998. 4. 8 (1998. 6. 5) |
| ※스포츠 아트 |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 련 방송영상물 제작(평양,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 60만달러 | 1998. 4. 29 (1998. 4.29) |
| ※한국사진 학회 | 조선사진가동맹 중앙위원회 | 남북사진작품전(서울,평양) 및 사 진집 출판(2,000부) | 1억8천만원 | 1998. 4.29 (1998. 4.29) |
| ※한민족문화 네트워크연구 소(합영) | 금강산국제그룹 (회장:박경운) | 남북 문화정보화사업 | 3억5천만원 | 1998. 5. 11 (1998. 6.20) |
| 우인방커뮤니 케이션 | 조선해외동포원 호위원회 | 북한 명산·역사적 명승지 탐방관 련 다큐멘터리 및 방송광고 제작 | 미 정 | 1998. 8. 6 |
| ※우인방커뮤 니케이션/한 국자동차경주 협회 |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 통일염원 금강산 국제래리 | 100만달러 | 1999. 2. 9 (1999.11.11) |

| 사업자 | 사업상대자 | 사 업 내 용(지역) | 금 액 |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
|---|--------------------------|--|------------------------------------|---|
| ※(주)CNA 코리아 | 조선아시아태평 양평화위원회 | 1999 평화를 위한 국제음악회 평 양·서울공연 | 100만달러 | 1999. 3.25 (1999. 4.16) |
| MBC 프로덕션 |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 CD 남북공동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등 | 68만달러 | 1999. 5. 12 |
| 국립공원 관리공단 | 산림과학원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 남북간 국립공원 교류협력사업 증 진사업 | 미 정 | 1999. 7. 21 |
| ※ SN 21 엔터프라이즈 |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 민족통일음악회 방북공연 | 60만달러 | 1999. 8. 5 (1999. 8. 5) |
| ※(주)현대 아산·현대건설 (2000.3.8) 현대자동차등 13개사(추가) (2000.7.4) | 조선아세아태평 양평화위원회 | 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남북 체육 교류사업 | 3,420달러 (남북한총투자 액 :5,750만달러) | 1999. 9. 2 (1999.9.20→ 2000. 3. 8 변경승인, 2000. 7. 4 변경승인) |
| ※(주)계명 프로덕션 | 조선예술 교류협회 | 평양교예단 한국방문 공연 | 50만달러 | 1999. 9. 22 (1999. 9.22) |
| ※(주)네오비전 | 조선백호7 무역회사 |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 50만달러 | 2000. 2. 3 (2000. 2. 3) |
| 평화의 숲 |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종자· 묘목·장비 지원 | 4억원 | 2000.4.12 |
| 기 독 교 대 한 감리회 서부연회 | 조선기독교도 연맹 | 평양신학원 재개원 및 운영 지원 | 60만달러 | 2000.5.20 |
| ※ NS21 |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 550만불 | 2000. 5.23 (2000. 5.23) |
| ※ 한민족문화 네트워크연 구소(단독) |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 북한 문화자료 정보화사업 | 50만불 | (2000. 7.14) |
| ※ (주)시스젠 |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 「조선인포뱅크」의 경제·산 업정보에 대한 국내 미러싸이 트 개설 운영 | 60만불 | 2000. 9. 1 (2000. 9. 1) |
| NS21 |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 남북합작영화 「아리랑」 제작 | 100만달러 | 2000. 10.14 |
| (주) 야미 | 범태평양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 남북 공동애니메이션 제작 | 미정 | 2000. 11.29 |
| ※한국문화재단 | 금강산가극단 | 금강산 가극단 한국 방문 공연 | 1천만엔 | 2000. 11.29 |

제5절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1.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이래, 남북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를 정비해 왔다. 법률 제정당시에는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을 규율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령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훈령 등 하위법령도 갖추어 왔다.

1998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등 5개의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교류협력 관련 규제의 70%를 정비(총 규제 40건 중 14건 폐지, 15건 개선)하여 민간기업·단체 등이 쉽고 편리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1999년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협력기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교역대상물품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남북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을 개정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승인신청서류 중 환경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승인대상품목을 조정하였으며, 외국인 왕래자의 휴대품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00년에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절차를 간소화하고 그간의 법 운용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북한 방문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북한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 종료 후 반납하도록 하여 수시방북자가 귀환·방북시마다 증명서를 반납·재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덜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업이나 위탁가공교역 추진과 관련한 물품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반출·반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품목, 수량, 반출·반입시기 등을 기재한 반출·반입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포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반출·반입시마다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필요한 물품을 편리하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명서 발급 제한기준, 북한방문안내교육 및 결과보고서 제출절차 등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리 국민들이 남북교류협력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험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SOC 확충지원 등으로 남북경협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기업의 경험 자금 수요도 증대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북경협 추진에 필요한 기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2000년 11월 21일 대출비율, 대출조건 등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개정하였다.

남북협력기금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을 확대하고 일정요건을 구비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일반기업과 차등화하였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제가 마련되었다. 또한 기업이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가공교역 원부자재 반출자금에 대한 한도승인제 대출방식을 신설하고 대출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정부는 「지원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대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 제공이라는 상징적 효과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해소시키는 실질적 효과도 제공함으로써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비용 사전분담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추진여건의 변화, 남북간 제도화 진전 사항 등을 보아가면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관련 법제가 교류협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

1. 대출비율 상향조정(소요자금의 50%→60~70%)
 - 일반지원대상자 : 60%, 중소기업자·유휴설비 반출자 : 70%
2. 대출기간의 확대
 -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기간 : **8년 이내**(←현행 7년이내)
 - 물품 반출입자금 대출기간 : **2년 이내**(←현행 1년이내)
 - 위탁가공용 설비반출자금 대출기간 : **5년 이내**(←현행 3년이내)
 -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기간 : 개별대출 **취급일부터 1년 이내**(한도승인방식 대출의 경우)
3. 신용대출제도 도입
 - 대출시 담보 취득이 원칙이나, 차주의 신용도와 지원대상사업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 회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실시
 - 신용대출한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관련 여신규정을 준용하여 설정
 - 신용대출 대상기업의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하여 신용대출한도 설정 및 일정요건 구비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기업신용등급 상향 조정
4.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반출자금 대출방식 변경
 - 1년 이상 위탁가공교역 시행자에 대해서는 「**한도승인제 대출방식**」으로 변경(←현행 「거래별 대출방식」)
 - 과거 위탁가공 반입실적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동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출금 집행
 - ※ 1년 미만 위탁가공교역 시행자에 대해서는 현행 거래별 대출방식 유지
5. 대출대상자 확대
 - 현행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전년도 교역 실적이 없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성 및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의 경험 참여를 지원
6. 위탁가공용 설비반출자금 대출금 상환 및 이자징수방법 변경
 - 대출금 상환을 연 **2회 이상**(6개월 단위) **정기균등 분할상환** 방법으로 변경(←현행 분할 또는 일시상환 방법)
 - 대출이자 징수방법을 6개월 단위로 조정(←현행 매월 단위)

2.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가. 현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에 따라 1991년 3월 20일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기타 민간출연금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2000년 12월말까지 정부출연금 6,350억원, 민간출연금 10억 8,700만원, 운용수익금 1,738억 4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046억 8,300만원, 기타수입금 2억 7,500만원 등 총 1조 2,148억 4,900만원이 조성되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1998~1999년)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0년에는 정부예산에서 1,000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출연되었으며, 2001년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기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출연금 규모가 대폭 확충되어 5,000억원의 정부출연이 이루어졌다.

남북협력기금은 축구·탁구 등 체육분야의 국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사업 지원이나 쌀 직교역 손실보조 등 남북 공동사업 지원에 사용되어 왔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3년과 1994년에는 집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1995년 북한에 쌀 15만톤을 무상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1996년에는 대북경수로건설사업 사전 용역비 600만달러를 지원하고, 1998년에는 초기사업비 4,474만달러를 대출하였다. 1999년에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비료 5만톤을 지원하는 데 남북협력기금 160억원을, 정부가 직접 비료 6.5만톤을 지원하는 데 179억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

(단위:백만원)

| 연도 | 정부출연 | 민간출연 | 운용수익 | 공자예수금 | 기타수입금 | 계 |
|------|---------|-------|---------|---------|-------|-----------|
| 1991 | 25,000 | - | 237 | - | - | 25,237 |
| 1992 | 40,000 | - | 5,118 | - | - | 45,118 |
| 1993 | 40,000 | 3 | 4,778 | - | - | 44,781 |
| 1994 | 40,000 | 1 | 9,387 | - | - | 49,388 |
| 1995 | 240,000 | 119 | 14,589 | - | - | 254,708 |
| 1996 | 100,000 | 132 | 18,410 | - | - | 118,542 |
| 1997 | 50,000 | 288 | 27,874 | - | - | 78,162 |
| 1998 | - | - | 40,280 | - | - | 40,280 |
| 1999 | - | 3 | 23,013 | 149,831 | - | 172,847 |
| 2000 | 100,000 | 541 | 30,118 | 254,852 | 275 | 385,786 |
| 계 | 635,000 | 1,087 | 173,804 | 404,683 | 275 | 1,214,849 |

2000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의 기금 집행이 이루어졌다. 대북비료 30만톤 지원사업에 943.6억원, 대북식량차관(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대출사업에 867.4억원, 2001년 9월 완료예정인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145.8억원, 제 1·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에 23.3억원,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33.8억원,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에 2.3억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과 평양교예단 서울공연에 대해서도 각각 3.2억원과 6.4억원을 지원하였고, 대북경협 추진기업에 대해서도 교역자금 5억원을 대출하는 등 2000년 12월말 현재 총 5,665억 9,3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이 밖의 여유자금은 국채·공채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융기관에의 단기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말 현재 3,777억 600만원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 중 1,400억원은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으며, 경수로사업대출용자금 635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2,377억 600만원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나. 분야별 기금지원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이후 정부는 1999년까지는 기금을 비료·쌀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경수로 건설사업 지원 등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용도에 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일반기업과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자율적 책임하에 대북사업 및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제한하여 왔었다.

그러나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산가족 교류가 성사됨에 따라 기금지원 분야도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기금 설치 이래 처음으로 남북한 인적왕래(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문화 협력사업(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2호)에 대해서도 1998년 이후 두 번째로 기금 지원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에 대해서도 첫 기금 대출이 이루어졌다.

이외에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용도(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로는 제1·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대북 식량차관 제공, 대북 비료지원, 대북지원 민간단체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의선 및 국도 1호선 연결을 위해 경의선 철도와 통일대교-장단간 도로 건설에도 기금을 지원하였고 경수로 건설 본공사 추진을 위해 KEDO에 대해서도 기금을 대출해 주었다.

< 2000년도 남북협력기금 경상지원 실적 >

(단위:백만원)

| 내역 | | 금액 |
|------|-----------------------|---------|
| 교류협력 | ○ 평양소년학생예술단 서울공연 지원 | 319 |
| | ○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지원 | 637 |
| | ○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지원 | 1,373 |
| | ○ 경의선 철도연결 지원 | 8,518 |
| |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건설 지원 | 6,060 |
| 인도지원 |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 | 228 |
| | ○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 | 3,378 |
| | ○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 운영지원 | 153 |
| | ○ 대북비료 20만톤 지원 | 63,572 |
| | ○ 대북비료 10만톤 지원 | 30,785 |
| | ○ 제1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지원 | 1,871 |
| | ○ 제2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 지원 | 455 |
| | ○ 조총련동포 고향방문단 지원 | 124 |
| 경수로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차입이자 | 19,023 |
| | ○ 경수로사업대출금(1998)외화환산손 | 16,622 |
| 기타 | ○ 수출입은행 위탁수수료 | 299 |
| 계 | | 153,417 |

< 2000년도 남북협력기금 대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대출액 | 비고 |
|--------------------------------|---------|---|
| 경수로 PWC공사비 대출(1998년, 2000년 회수) | 67,523 | ○ 외화(US\$) 대출 |
| 경수로 TKC공사비 대출(2000년) | 325,936 | ○ 발전소 완공후 3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 비앤씨무역 아연괴 반입자금대출 (2000년) | 500 | ○ 대출기간 : 3개월 ○ 이자율 : 6% |
| 대북 식량차관 대출 | 86,740 | ○ 상환기간 : 차관총액 최종확정일로부터 30년 ○ 이자율 : 1.0% |
| 계 | 480,699 | |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8조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장(제3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남북간의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부위원회이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위원장(통일부장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위원장이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위원 현황은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이며 재정경제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농림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기획예산처차관, 국정원 차장이 상임위원으로서 안전에 따라 4명까지의 비상임위원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협의회의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교류협력관련 허가·승인 등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이며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있어 협의회의 결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도에는 총 13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두 28건의 안전을 처리하였는데, 총12회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17건의 안전을 처리한 1999년에 비해 협의회 개최 건수는 거의 비슷하나 처리안전의 수는 11건(1999년 대비 65% 증가)이나 증가되었다. 협의회에 부의되어야 할 안전이 증가된 것은 남북교류협력이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의결한 안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남북협력기금법상 「민족공동체회복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한 것으로서 대북 비료 지원, 대북 식량차관 제공,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방문단 교환방문, 민간대북지원단체 지원사업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었다. 이외에도 대북경협기업에 대해 경협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의결하였으며,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과 같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주

기로 의결하였다.

나아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집행과 기금 조성에 대해 체계적인 조정 및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다.

또한 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심의·의결하기도 하였는 바, 남북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등 남북한 교류협력을 절차적으로 규율하는 각종 법령들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 2000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현황 >

| 일 시 | 안 건 | |
|-------|------|--|
| | 의안번호 | 의 안 |
| 2.28 | 101 | 「1999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보고」(안) |
| 2.28 | 102 | 「대북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
| 3.2 | 103 | 이산가족교류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 | 104 | 북한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 | 105 | 민간 대북지원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 4.12 | 106 | 한국 JTS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 5.9 | 107 | 대북 비료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 5.27 | 108 | 경수로건설 공사대금 금융비용(Financing Charge) 관련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승인 |
| 7.28 | 109 | 2000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
| | 110 | 대북비료 10만톤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 8.3 | 111 |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
| | 112 |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 | 113 | 평양교예단 서울공연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 | 114 | 2000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 및 2001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립(안) |
| 8.9 | 115 | 남북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안) |
| | 116 |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개정(안) |
| 8.17 | 117 | 광복55돌 경축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남북협력기금 지원 |
| 9.9 | 118 | 2000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
| | 119 |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 | 120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 | 121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절차에관한고시중 개정(안) |
| 9.28 | 122 |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대북 식량차관 제공 승인 |
| | 123 | 조총련 동포 고향방문행사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승인 |
| 11.21 | 124 | 제2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 |
| | 125 |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개정 |
| | 126 | 민간대북지원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 | 127 |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개정 |
| | 128 | 대북경협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승인 |

제1절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1971년 8월 12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하고, 같은 해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적십자사간 접촉을 시작한 이래 1992년까지 20여년간 70여회(본회담 10회, 예비·실무회담 60여회)의 남북적십자 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85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단 한 차례 각기 151명 규모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성사되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이산가족 방문단 각 50명 중 남측 35명이 북측 가족 41명, 북측 30명이 남측 가족 51명 상봉)

그 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제기하여 1991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에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명문화하였다.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1992.5)에서는 「노부모 방문단」 교환(쌍방 각 100명)에 합의하였으나 남북적십자간 실무접촉 과정에서 「이인모 송환」 등 북측의 전제조건 제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이자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주요 계기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북측에 남북 당국간 회담 또는 적십자회담 등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 결과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차관급 당국회담(1차 : 1998.4.11-17, 2차 : 1999.6.22-7.3)에서 양측은 이산가족문제를 대북 비료지원 문제 등과 함께 의제로 채택,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북측의 소극적 태도와 연평해전 등으로 인해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6·15 남북공동선언문」 제3항에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 등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실천방안들이 마련, 추진되고 있다.

1.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

「6·15 남북공동선언」 및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1차 남북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실시되었고,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차 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져, 남북 각각 200명씩의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에서 2,000여명의 가족과 재회하였다.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은 지난 1985년 이후 처음 성사된 것으로써 그 동안 막혀 있던 이산가족교류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 구분 | 제1차 방문단 | 제2차 방문단 |
|------|---|--|
| 기간 | 2000.8.15~18(3박4일) | 2000.11.30~12.2(2박3일) |
| 규모 | 남북 각 151명(단장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기자단 20명) | 남측 151명(단장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기자단 20명) 북측 136명(단장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20명, 기자단 15명) |
| 단장 | 남측 : 장충식 한적 총재 북측 :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 위원장 | 남측 : 봉두완 한적 부총재 북측 : 장재언 북적 중앙위 위원장 |
| 교환경로 | 항공로 | 항공로 |
| 방문지역 | 서울·평양 동시교환 | 서울·평양 동시교환 |

가. 이산가족방문단 선정

(1) 제1차 방문단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합의된 이후 정부와 대한적십자사(한적)는 방문단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였다. 우선 한적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이북5도위원회, 이북도민연합회,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등 이산가족 유관단체와 정부관계자, 언론계·학계·여성계·법조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인선위원회」를 구성(2000.6.22)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착수하였다.

제1차 적십자회담을 통해 방문단 교환 일정이 확정된 후 「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의 원칙 아래 연령·가족관계, 과거 신청여부 등을 기준으로 1차 후보자 400명을 컴퓨터로 공개 추첨(7.5)하였으며, 이들 중 사망한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북측에 생사·주소확인을 의뢰할 후보자 200명을 선정하였다.

생사·주소확인 후보자 200명의 명단은 남북 연락관접촉을 통해 교환(7.16)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의뢰한 200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여 단시일 내에 198명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였으며, 북측도 우리측 의뢰자 200명 중 138명의 생사·주소를 확인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으로부터 통보된 생사·주소확인 결과를 토대로 이산가족의 연령과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최종방문자 100명을 선정하였으며, 2000년 8월 8일 남북 쌍방은 최종 방문자 명단을 교환하였다.

(2) 제2차 방문단

제2차 적십자회담에서 제2차 방문단 교환 일정이 합의(2000.11.2~11.4)되어 있었던 만큼 정부는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여 「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선기준을 결정하는 등 2차 방문단 교환을 준비하였다.

2차 방문단 인원선정 기준은 1차 방문단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70세 이상의 이산가족만을 대상에 포함시켜 후보자를 선정함으로써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

우리측은 1차 방문단 때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1차 후보자 300명을 선정하고 북측에 생사·주소확인을 의뢰할 후보자 200명의 명단을 마련하였으나, 북측이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명단교환을 거부해 오다가 10월 27일야 2차 방문단을 200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교환하자고 제의해 옴에 따라 쌍방은 같은 날 생사·주소확인 의뢰자 200명의 명단을 교환하고 제반 실무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측은 북측이 의뢰한 200명 중 195명의 생사·주소를 확인하고, 북측은 우리측이 전달한 200명 중 162명의 생사·주소를 확인하였으며, 11월 18일 최종방문단 100명의 명단이 교환되었다.

나. 이산가족방문단 구성

<연령 별>

(단위 : 명)

| 구분 | | 100세 이상 | 99~ 90세 | 89~ 80세 | 79~ 70세 | 69~ 60세 | 59세 이하 | 계 |
|---------|-------|------------|------------|------------|------------|------------|-----------|-----|
| 우리 측 | 1차 방문 | - | 3 | 20 | 65 | 12 | - | 100 |
| | 2차 방문 | 1 | 3 | 28 | 67 | 1 | - | 100 |
| | 계 | 1 | 6 | 48 | 132 | 13 | - | 200 |
| | 비율(%) | 0.5 | 3.0 | 24.0 | 66.0 | 6.5 | - | 100 |
| 북 측 | 1차 방문 | - | - | 3 | 26 | 71 | - | 100 |
| | 2차 방문 | - | - | 1 | 31 | 68 | - | 100 |
| | 계 | - | - | 4 | 57 | 139 | - | 200 |
| | 비율(%) | - | - | 2.0 | 28.5 | 69.5 | - | 100 |

<가족관계 별>

(단위 : 명)

| 가족관계 | | 3촌이상 | 형제자매 | 처·자식 | 부모 | 계 |
|------|-------|------|------|------|------|-----|
| 우리측 | 1차 방문 | 1 | 61 | 38 | - | 100 |
| | 2차 방문 | 2 | 56 | 42 | - | 100 |
| | 계 | 3 | 117 | 80 | - | 200 |
| | 비율(%) | 1.5 | 58.5 | 40.0 | - | 100 |
| 북측 | 1차 방문 | - | 74 | 6 | 20 | 100 |
| | 2차 방문 | - | 93 | 4 | 3 | 100 |
| | 계 | - | 167 | 10 | 23 | 200 |
| | 비율(%) | - | 83.5 | 5.0 | 11.5 | 100 |

<출신지별>

○ 우리측

(단위 : 명)

| 구분 | 항해 | 평북 | 평남 | 함북 | 함남 | 서울 | 경기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제주 | 계 |
|-------|------|------|------|-----|------|-----|-----|-----|-----|----|-----|----|----|----|-----|-----|
| 1차 방문 | 24 | 22 | 28 | 1 | 19 | - | 5 | 1 | - | - | - | - | - | - | - | 100 |
| 2차 방문 | 27 | 11 | 20 | 2 | 17 | 2 | 9 | 8 | 1 | - | 2 | - | - | - | 1 | 100 |
| 계 | 51 | 33 | 48 | 3 | 36 | 2 | 14 | 9 | 1 | - | 2 | - | - | - | 1 | 200 |
| 비율(%) | 25.5 | 16.5 | 24.0 | 1.5 | 18.0 | 1.0 | 7.0 | 4.5 | 0.5 | - | 1.0 | - | - | - | 0.5 | 100 |

○ 북측

(단위 : 명)

| 구분 | 서울 | 인천 | 대구 | 대전 | 광주 | 경기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제주 | 계 |
|-------|------|-----|-----|-----|-----|-----|-----|------|-----|------|------|------|-----|-----|-----|
| 1차 방문 | 11 | 1 | 2 | 1 | - | 7 | 11 | 15 | 5 | 12 | 10 | 12 | 11 | 2 | 100 |
| 2차 방문 | 18 | 3 | 1 | 2 | 2 | 12 | 8 | 12 | 3 | 8 | 12 | 10 | 7 | 2 | 100 |
| 계 | 29 | 4 | 3 | 3 | 2 | 19 | 19 | 27 | 8 | 20 | 22 | 22 | 18 | 4 | 200 |
| 비율(%) | 14.5 | 2.0 | 1.5 | 1.5 | 1.0 | 9.5 | 9.5 | 13.5 | 4.0 | 10.0 | 11.0 | 11.0 | 9.0 | 2.0 | 100 |

<성 별>

(단위 : 명)

| 구분 | | 남 | 여 | 계 |
|-----|--------|------|------|-----|
| 우리측 | 1차 방문 | 72 | 28 | 100 |
| | 2차 방문 | 75 | 25 | 100 |
| | 계 | 147 | 53 | 200 |
| | 비 율(%) | 73.5 | 26.5 | 100 |
| 북측 | 1차 방문 | 93 | 7 | 100 |
| | 2차 방문 | 93 | 7 | 100 |
| | 계 | 186 | 14 | 200 |
| | 비 율(%) | 93.0 | 7.0 | 100 |

다. 이산가족방문단 행사

행사는 단체상봉, 개별상봉 그리고 참관 등으로 진행되었다. 단체상봉은 방문단 교환 첫날 약 2시간 동안 실시(1차 : 우리측 COEX, 북측 고려호텔, 2차 : 우리측 센트럴시티, 북측 고려호텔)되었으며, 개별상봉은 각자의 숙소(1차 : 우리측 쉐라톤호텔, 북측 고려호텔, 2차 : 우리측 롯데월드호텔, 북측 고려호텔)에서 가족·친척끼리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참관은 각기 편리한 곳을 선정하여 실시되었다.

| 구 분 | 1차 방문단 | 2차 방문단 |
|--------------------|---|---|
| 일정 | · 3박4일(8.15~18) | · 2박3일(11.30~12.2) |
| 상봉 횟수 | ·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2회, 송별상봉 1회, 동석 식사 2회 | ·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2회, 송별상봉 1회, 동석 식사 1회 |
| 참관 | · 롯데월드 민속관, 창덕궁(서울) · 단군릉 및 대동강 유람, 춘향전 관람(평양) | · 롯데월드 민속관(서울) · 만경대 학생소년궁전(평양) |
| 상봉 가족수 | · 평양 방문자 100명이 재북가족 218명 상봉(1인 평균 2명) · 서울 방문자 100명이 재남가족 750여명 상봉(1인 평균 7~8명) | · 평양 방문자 100명이 재북가족 254명 상봉(1인당 2~4명) · 서울 방문자 100명이 재남가족 770여명 상봉(1인당 7~8명) |
| 우리측 비용 (남북협력기금) | · 18.7억원 | · 6.3억원 |
| 기타 | · 방북단에 특별지원인원 2명(이호철, 장가용) 포함 | · 방북단에 남북자가족 등 포함 |

2. 이산가족문제 해결 기반 구축

가.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 상봉 지원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정부가 「7.7특별선언」(1988)의 후속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1989.6.12)과 1990년 8월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당국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교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교류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2000년 3월 2일에는 이를 보다 촉진해 나가기 위해 「이산가족 교류 촉진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이 시행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이산가족 1세대 전체로 확대되는 등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해 오던 교류경비 지원도 생사확인 40만원→80만원, 상봉 80만원→18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교류지속경비 4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경비지원 회수도 종전의 1회에서 최대 3회까지로 확대되었다.

<연도별 이산가족교류경비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 구 분 | 1998년 | | 1999년 | | 2000년 | | 합 계 | |
|------|-------|-------|-------|--------|-------|--------|-----|--------|
|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건 수 | 금 액 |
| 생사확인 | 41 | 1,720 | 89 | 4,030 | 119 | 7,490 | 249 | 13,240 |
| 상 봉 | 55 | 5,024 | 142 | 12,240 | 91 | 15,740 | 288 | 33,004 |
| 교류지속 | | | | | 104 | 4,695 | 104 | 4,695 |
| 합 계 | 96 | 6,744 | 231 | 16,270 | 314 | 27,925 | 641 | 50,939 |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괄목할 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시작된 이래 2000년 12월말 현재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5,725건으로 이 중 14.7%인 2,319명이 제3국을 통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606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고, 1998년부터는 개별적인 방북상봉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총 10건이 성사되었다. 2000년 한해 동안에는 생사확인 447건, 서신교환 984건, 제3국상봉 148건이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 성사 실태를 살펴보면 ①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의 협조 ② 국내 민간주선단체의 주선 ③ 언론매체 활용 ④ 국제행사 참가시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접촉방법별 성사 현황>

(1989.6.12-2000.12.31)

| 구 분 | | 해외동포 | 주선단체 | 언론매체 | 국제행사 등 | 무기재 | 계 |
|--------------|-----------|-------|------|------|--------|-----|-------|
| 생사확인 (건) | 2000년 | 241 | 105 | 16 | 34 | 51 | 447 |
| | 1989~2000 | 1,587 | 387 | 122 | 65 | 158 | 2,319 |
| 비 율(%) | 2000 | 60.9 | 26.5 | 4.0 | 8.6 | | 100 |
| | 1989~2000 | 73.4 | 17.9 | 5.7 | 3.0 | | 100 |
| 제3국상봉 (건) | 2000년 | 100 | 25 | 1 | 21 | 1 | 148 |
| | 1989~2000 | 481 | 64 | 23 | 36 | 2 | 606 |
| 비 율(%) | 2000년 | 67.6 | 16.8 | 0.7 | 14.2 | 0.7 | 100 |
| | 1989~2000 | 79.4 | 10.6 | 3.8 | 5.9 | 0.3 | 100 |

교류의 중개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이 대부분이었으나 한·중 수교 이후에는 중국을 통한 교류가 급증하고 있다.

<중개지역별 성사 현황>

(1989.6.12~2000.12.31)

| 구 분 | | 중국 | 미국 | 일본 | 캐나다 | 기타 | 무기재 | 계 |
|--------|-----------|-------|------|-----|-----|-----|-----|-------|
| 생사확인 | 2000년 | 315 | 45 | 22 | 17 | 11 | 37 | 447 |
| | 1989~2000 | 1,561 | 369 | 117 | 57 | 58 | 157 | 2,319 |
| 비 율(%) | 2000 | 70.5 | 10.0 | 4.9 | 3.8 | 2.5 | 8.3 | 100 |
| | 1989~2000 | 67.3 | 15.9 | 5.0 | 2.5 | 2.5 | 6.8 | 100 |
| 제3국상봉 | 2000년 | 143 | 0 | 2 | 0 | 3 | 0 | 148 |
| | 1989~2000 | 582 | 0 | 18 | 0 | 6 | 0 | 606 |
| 비 율(%) | 2000년 | 96.6 | 0 | 1.4 | 0 | 2.0 | 0 | 100 |
| | 1989~2000 | 96.0 | 0 | 3.0 | 0 | 1.0 | 1.2 | 100 |

교류가 성사된 재북가족의 거주지역은 함경도가 1,410건(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이산가족교류 거점인 중국 연길지방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출신지별 성사 현황>

(1989.6.12-2000.12.31)

| 구 분 | 함경 | 평안 | 황해 | 양강 | 자강 | 강원 | 평양 | 개성 | 남포 | 기타 | 계 |
|-------|-------|-----|-----|----|----|----|-----|----|----|----|-------|
| 생사확인 | 1,071 | 505 | 298 | 66 | 33 | 48 | 168 | 34 | 32 | 64 | 2,319 |
| 비율(%) | 46 | 22 | 13 | 3 | 1 | 2 | 8 | 1 | 1 | 3 | 100 |
| 상봉 | 339 | 81 | 45 | 52 | 8 | 6 | 34 | 1 | 11 | 39 | 616 |
| 비율(%) | 55 | 13 | 7 | 9 | 1 | 1 | 6 | - | 2 | 6 | 100 |

제3국을 통한 교류를 위해서는 이산가족들이 해외에 연고가 있고, 상당한 경비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교류당사자들의 신변안전 등의 문제점이 수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해외 연고자가 없는 이산가족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신교환과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93년부터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 주선사업을 승인하였으며, 2000년 12월말 현재 40개의 이산가족 교류주선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나. 이산가족 행정서비스 개선

(1) 이산가족교류 절차 간소화

정부는 이산가족에 대한 북한주민접촉승인 기간을 종전에는 2년 단위로 승인하였으나, 2000년 3월 2일부터 이를 5년으로 연장하여 이산가족이 한번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으면 5년 동안 계속 북한의 가족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북한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령 이산가족 등의 방북절차를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여 1998년 9월 1일부터 60세 이상의 이산가족에 대해 적용해 왔으나 2000년 3월 2일부터는 그 범위를 이산가족 1세대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9년 6월 1일부터 북한주민접촉승인 신청시 필요한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서와 신원진술서 제출을 면제하고 「이산가족찾기신청서」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인터넷서비스를 개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산가족찾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

이산가족 자료의 영구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단체에 산재되어 있던 이산가족 관련자료를 취합하여 1998년 12월 18일부터 종합적인 이산가족 데이터베이스인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통일부, 이북5도위원회 및 대한적십자사가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1999년 6월 18일에는 인터넷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신청접수 서비스를 개통(<http://reunion.unikorea.go.kr>) 하였다.

특히 2000년 8월과 11월 두차례의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행사 때에 우리측 대상자를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등록자료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산가족교류 대상자 선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2000년 12월말까지 113,191명에 대한 재북가족 사항, 찾는 사연 등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며, 계속적인 자료 축적을 통해 명실공히 이산가족에 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 편지도 소개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현황>

| 구 분 | 90세 이상 | 80~89세 | 70~79세 | 60~69세 | 59세 이하 | 계 |
|--------|-----------|--------|--------|--------|--------|---------|
| 인원수(명) | 3,395 | 19,102 | 46,855 | 30,418 | 13,421 | 113,191 |
| 비 율(%) | 30 | 16.9 | 41.4 | 26.9 | 11.8 | 100 |

<홈페이지 메뉴 구성>

| | | | |
|--|---|----------|--|
| 이 산 가 족 정 보 통 합 센 터 | 안 | 내 | 센터이용/유관기관/추천사이트 |
| | 새 | 소식 | 새 정책 · 제도소개/이산가족교류동향/ 행사소개 |
| | 그 | 리운가족찾기 | 신청서작성/등록사항변경/가족찾기의뢰 |
| | 교 | 류절차 | 이산가족교류절차/민원접수창구/ 편지 · 사연소개 |
| | 보 | 고 | 고향변천사/고향방문/고향정담나누기 |
| | 정 | 책 · 법률자료 | 정책추진방향/이산가족문제해결노력/ 국민의정부대북정책/남북한관련법 |
| | 열 | 린마당 | 사용자의견/정책토론/법률상담 |

(3) 이산가족 민원창구 관리 강화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총 264개 민원창구를 개설하였다. 1993년 7월 1일에는 대한적십자사 본사 및 13개 시·도지사, 1994년 8월 1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34개 시·군·구 협의회에, 그리고 1997년 4월 14일부터는 이북5도위원회 본부 및 14개 시·도 사무소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이산가족 교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민원창구에 대한 지도방문 및 이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류절차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이산가족교류 추진에 따른 제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산가족관련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산가족의 이산가족찾기 신청서 접수업무를 1999년 9월 1일부터 대한적십자사(한적)로 위탁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자료를 활용한 이산가족찾기 사업도 한적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3. 납북자 등 문제 해결 노력

납북자는 그 동안의 정황자료를 종합해 볼 때 48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6.25 참전용사 중 전쟁으로 인한 행방불명자(실종자)는 19,409명으로 추정되며, 이 인원에는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 12월말 현재 귀환한 국군포로(17명)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재북 국군포로 351명의 명단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북측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설득하며 호응을 촉구하였다. 특히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북측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측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비생산적인 논쟁만을 계속할 경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납북자 및 국군포로를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문제해결을 시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제2차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시 납북자 가족이 방문단에 포함되어 북측에 있는 가족을 상봉한 바 있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문제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북측을 계속 설득시켜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6.15 남북공동선언」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정부는 2000년 9월 2일 북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한으로 송환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정부, 민간단체인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는 공동으로 비전향장기수 본인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하여 송환대상자를 결정하였다.

송환은 국내법과 1993년 이인모 송환시 선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쳤으며, 판문점을 통하여 북한으로 송환하였다.

4. 이산가족교류 현황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12월말 현재까지 당국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생사확인 2,073건, 서신교환 2,044건, 제3국 상봉 443건, 방북·방남 상봉 416건이 성사되었다. 이것은 과거 연평균 대비 생사확인 5.8배, 제3국 상봉 8.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두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에 힘입어 남북이산가족교류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이 84,757건에 이르며, 생사확인은 1,239건, 상봉은 558건, 서신교환은 1,023건이 성사되어 교류시작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교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 1985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총 계 |
|------------------|-------|------|------|------|------|------|------|------|------|------|------|------|------|-------|
| 민 간 차 원 | 생사확인 | | 35 | 127 | 132 | 221 | 135 | 104 | 96 | 164 | 377 | 481 | 447 | 2,319 |
| | 서신교환 | | 44 | 193 | 462 | 948 | 584 | 571 | 473 | 772 | 469 | 637 | 984 | 6,137 |
| | 제3국상봉 | | 6 | 11 | 19 | 12 | 11 | 17 | 18 | 61 | 108 | 195 | 148 | 606 |
| | 방북상봉 | | | | | | | | | | 1 | 5 | 4 | 10 |
| 당 국 차 원 | 생사확인 | 65 | | | | | | | | | | | 792 | 857 |
| | 서신교환 | | | | | | | | | | | | 39 | 39 |
| | 방남상봉 | 30 | | | | | | | | | | | 201 | 231 |
| | 방북상봉 | 35 | | | | | | | | | | | 205 | 240 |

< 1999-2000년 교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이산가족 찾기신청 | 생사확인 | 서신교환 | 제3국상봉 | 방북상봉 | 방남상봉 |
|------|--------------|-------|-------|-------|-------|------|
| 2000 | 84,757 | 1,239 | 1,023 | 148 | 209 | 201 |
| 1999 | 7,344 | 481 | 637 | 195 | 5 | 0 |
| 대 비 | 11.5배 | 2.6배 | 1.6배 | 0.8배 | 42.0배 | |

제2절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와 함께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돕는 방향에서 비료지원 등 「농업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같은 대북지원은 무엇보다도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함께 남북화해협력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의 의미를 지닌다.

대북지원은 북한당국과 주민을 모두 시야에 넣고 추진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대남 적대감을 완화시켜 장기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가. 식량 및 의료 지원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 등으로 매년 100만~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소련 및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사회주의경제권의 축소와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북한의 경제와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북한은 1995년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 때부터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검토하였다.

정부는 1995년 5월 26일 통일부장관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리 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 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

월 중국 베이징에서 쌀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당국간 베이징회담」이 개최되었다.

베이징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 (1,850억원 상당)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대북정책 추진방향의 하나로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의 탄력적 제공’을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 농업개발협력 및 경험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이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IMF 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UN기구의 제4차 대북지원계획 참여 요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WFP를 통해 총 1,100만달러 상당의 옥수수 3만톤과 밀가루 1만톤을 지원하였다.

2000년에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참여하여 2000년 3월 8일 북한지역 전염병 퇴치를 위해 국제보건기구(WHO)를 통한 50만달러 상당의 방역·보건의료 지원에 참여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WHO와 현물지원 등 지원방법과 지원시기 등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9월 8일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식량차관 요청을 계기로 50만톤 식량차관 제공과는 별도로 외국산 옥수수 10만톤(1,100만달러 상당)을 WFP를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지원키로 하였다.

이는 최근 북한의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북한의 악화된 사정과 그동안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속적인 대북식량지원 참여 요청, 지원식량의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WFP의 지속적인 노력 등 효과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유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나. 비료지원

정부는 1999년 1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여 그간의 대북지원을 평가하고, 향후 대북지원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긴급구호성 식량지원과 병행하여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 차원에서 비료·종자·농약지원 등을 통한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 등 「농업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지원의 효과성·분배투명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는 또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과 함께 대북지원을 그간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999년 비료 15.5만톤을 지원하였으며 여기에는 남북협력기금 339억원과 대한적십자사의 국민모금액 123억원 등 총 462억여원이 소요되었다.

2000년에 들어 김대중 대통령은 1월 3일 「새천년 신년사」와 1월 26일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성의껏 제공하고 2000년에도 비료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월 9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이 화해·협력의 정신으로 실질협력관계를 넓혀가는 데 북한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우리측이 힘닿는 대로 북한을 도울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과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5월 6일 비료 20만톤을 북한에 지원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월 10일 제6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비료 20만톤의 구입·수송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키로 하고, 비료구매·수송·인도인수 등 그 실행은 그간의 남북간 대북지원 관례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위임키로 결정하였다.

비료 20만톤은 5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8항차의 해로수송을 통해, 우리측 여수·울산·군산항에서 북한의 남포항(11만톤)·해주항(6만톤)·원산항(1.5만톤)·홍남항(1만톤)·청진항(0.5만톤)으로 각각 전달되었으며, 비종별로는 복합비료 10만톤·요소비료 6만톤·이삭거름 3만톤·유안비료 1만톤이 각각 지원되었다. 비료 20만톤 지원에는 비료구매·수송비·기타 부대비용 등 총 635.7억여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지원한 밀거름용 비료 20만톤의 식량증산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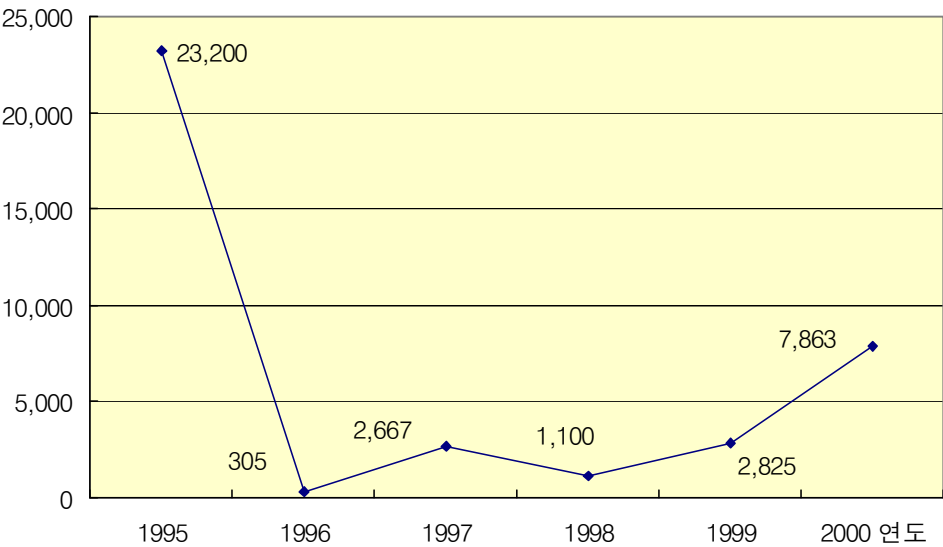
웃거름용 비료의 추가시비 필요성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국민적 기대감, 그리고 북한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웃거름용 비료 10만톤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추가지원 비료 10만톤은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4항차의 해로수송을 통해, 여수·울산·군산항에서 북한의 남포항(4.64만톤)·해주항(2.33만톤)·원산항(1만톤)·홍남항(1만톤)·청진항(1.03만톤)으로 각각 전달되었으며, 비종별로는 요소비료 4만톤·복합비료 3.6만톤·이삭거름 1.9만톤·유안비료 0.5만톤이 각각 지원되었다.

추가 비료 10만톤 지원에는 비료구매·수송비·기타 부대비용 등 총 307.9억원이 소요되었다.

<정부차원 대북지원 추이>

만달러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

(2000.12.31 현재)

| 기간 | 지원 규모 | 비 고 |
|-------|------------|---|
| 1995년 | 2억3,200만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 지원 - 1,850억원(1\$당 800원 적용) |
| 1996년 | 305만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200만달러(혼합곡물 3,409톤) - UNICEF 100만달러(분유 203톤) - WMO 5만달러(기상자재) - 24억원(1\$당 790원 적용) |
| 1997년 | 2,667만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600만달러(혼합곡물 9,852톤) - UNICEF 34만달러(ORS공장비용) - WFP 1,053만달러(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400만달러(CSB 8,389톤), UNICEF 360만달러(분유 781톤), WHO 70만달러, UNDP 120만달러, FAO 30만달러 - 240억원(1\$당 900원 적용) |
| 1998년 | 1,100만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FP 1,100만달러(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54억원(1\$당 1,400원 적용) |
| 1999년 | 2,825만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11.5만톤 직접 지원 - 339억원(1\$당 1,200원 적용) * 한적 및 당국간 비료지원(3.30-6.22) 총 15.5만톤 462억원 |
| 2000년 | 7,863만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30만톤 직접 지원(944억원) * 20만톤(635.7억원), 추가 10만톤(307.9억원) |
| 계 | 3억7,960만달러 | - 3,551억원 |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가.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기반 조성

1995년 9월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의 대북지원 허용조치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도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1997년 3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북지원 품목 확대와 경제단체를 통한 기업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기탁성금이 증대되고, 지정기탁 등을 희망하는 민간단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1997년 4월 대한적십자사는 대북지원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제의하였다. 남북적십자는 199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2차에 걸친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5월 26일 「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로써 그간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오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고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 합의서는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 수송경로 및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지정기탁 등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는 물론, 남북간 상호신뢰 조성 및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 1997년 7월 개최된 제3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는 1차 지원에 이은 2차 지원문제를 협의하고, 7월 25일에는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2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는 그간 1차분 지원과정에서 제기된 구호물자 검수방식, 분배과정 입회 및 분배결과 통보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남북간 구호물자 직접전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1998년 3월 베이징에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을 개최하여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3.27)를 채택하였다.

나.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본격화

남북적십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1995년 1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39억 7천만원(496만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제1차 합의서 채택 이후 6월부터 7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5만 3,800여톤의 식량을 북한의 신의주, 만포, 남양과 남포항, 홍남항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어 7월 남북적십자간 2차분 지원 합의에 따라 8월부터 10월 말까지 옥수수 기준 총 5만 2,800여톤의 구호물자를 제공하였다.

1998년 3월 중순에는 2차분 추가물량으로 17만달러 상당의 비료 800톤을 지원하였고, 이어 제3차 합의서 채택으로 3차분 대북지원이 4월에서 6월까지 추진되었다. 3차분 지원규모는 총 935만달러 상당으로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이 전달되었다. 아울러 9월부터는 3차분 추가 지원물량으로 1,133만달러 상당의 옥수수와 밀가루, 분유 등이 지원되었다. 특히, 3차 지원에서는 기존의 해로 및 제3국 경로 외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기탁한 한우 1,001두가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6.16, 10.27)

1999년에는 3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비료지원 국민모금계획」 발표에 따라 1,027만달러(123억원) 상당의 비료지원 모금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재원으로 1999년 3-6월에 걸쳐 비료 4만여톤을 지원하였다(정부차원의 비료지원은 전항 나. 대북 비료지원 참조). 이밖에 20여개 단체가 식량, 비료, 의약품 등 281만달러(33.7억원) 상당의 물자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에 전달하였다.

2000년에도 「3차분 추가 지원물량」이 계속 지원되었으며, 16개 단체가 참여하여 94만달러(113억) 상당의 의약품, 한우, 감귤, 농자재, 식량 등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1995년 11월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민간지원 총액 9,697만달러(1,116억원)중 6,184만달러(742억원)에 달하며, 참여한 민간단체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총 130여개(1천만원 이상 지원단체만 포함)에 이른다.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우리측 민간단체가 지정한 구호물자 분배지역(단체)은 1차 지원의 경우 북한의 9개 시·도 및 4개 단체, 2차·3차 지원시는 15개 시·도 및 13개 단체로 확대되어 북한 전지역에 우리 국민들의 동포애를 전하였다.

다. 민간의 자율적 대북지원 활성화

정부는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주민간 접촉 증대 및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본방침하에 1998년 3월 18일과 9월 18일, 1999년 2월 10일과 10월 21일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 주요내용>

- o 1998. 3.18 :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분배확인 목적의 방북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언론사/개별 기업체의 협찬·후원 및 이벤트성 모금행사 지원
 - o 1998. 9.18 :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시범적 허용
 - 민간단체가 대북협의·물품구입·운송·모니터링 등을 직접 담당
 - o 1999. 2.10 :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 준법성, 전문성, 분배투명성 등의 요건이 확보된 단체에 대하여 한적 이외의 독자적인 대북지원 창구로 허용
 - 기타 단체 및 개인은 한적창구를 통해 지원
 - o 1999.10.21 : 민간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침 발표
 - 보건의료 및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과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기준 마련
- *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한규정(통일부고시, 1999.10.27)

이에 따라, 1998년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범국민운동’ 등 민간 관계자의 구호물자 분배확인 및 대북지원 협의 등의 목적으로 방북이 성사되었으며,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1998.4.25) 행사 등에 있어 언론사의 후원 및 ARS모금이 허용되었고, 북한에 제약공장·합영농장 설립 등의 사업 추진이 승인되었다.

이어 1999년에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민간대북지원 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창구다원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민간단체 명의의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량·적기지원이 가능하여 북한 농업개발 지원 등의 대북지원 사업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절차 간소화로 준비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조치 이후 1999년 12월말까지 ‘한국이웃사랑회’ 등 10개 단체가 개별 독자창구로 지정되어 67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0년에는 민간단체 독자창구가 13개로 증가하고, 이를 통한 지원 규모도 기금지원액을 포함하여 307.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분배 투명성 확보와 단체별로 특화된 전문적 지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10월 21일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지원 등의 분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제6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10월 27일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한규정」(통일부고시)을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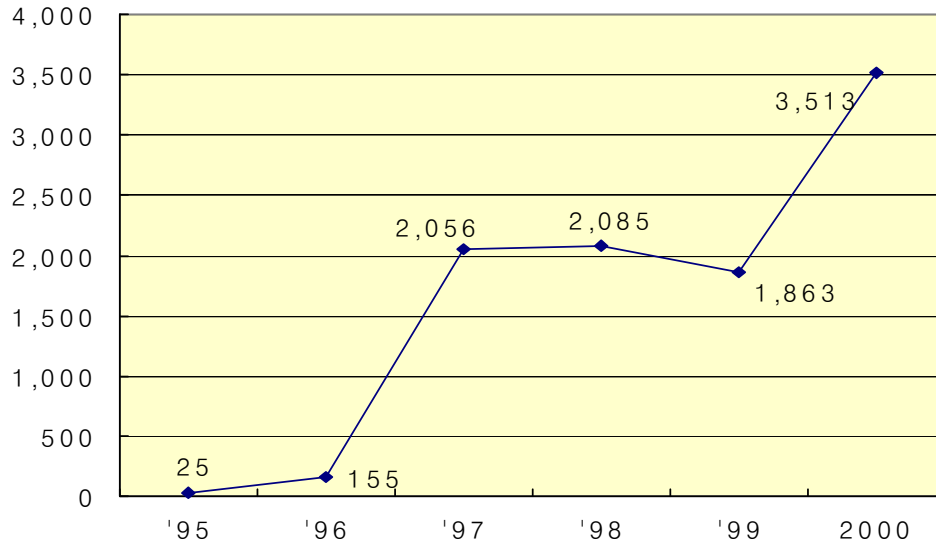
이에 따라, 2000년도 한해 동안 한국JTS 등 8개 단체 9개 사업에 대해 54.1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내용별로는 농업개발분야 5개 사업 27억원, 보건의료분야 2개 사업 16.5억원, 취약계층지원 2개 사업 10.6억원 등이다. 이 기금의 집행은 단체별로 2001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2000년 12월 현재 33.8억원을 집행하였다.

이같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이를 양적으로도 이를 크게 확대되는 등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특히, 2000년도 민간차원 지원사업은 물자지원 이외에도 북한측과의 공동생산 및 기술전수 등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생력 회복지원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단체 관계자 방북도 꾸준히 확대되어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으로 증가하였다.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

만달러



<민간차원 대북지원 내역>

(2000.12.31 현재)

| 기 간 | 규 모 | 내 역 |
|-------------------------------|------------------------|--|
| 1995.11- 1997.5 (國赤경유) | 496만달러 (39억6,915만원) | - 밀가루 3,664톤, 분유 94톤, 담요 1만개, 식용유 18.6만ℓ, 라면 10만개, 양말 35,000켤레, 감자 1,900톤, 무종자 4.8톤, 배추종자 6.4톤, 옥수수 4,980톤 * 1\$당 800원 환율 적용 |
| 1997.6- 1997.7 (韓赤1차지원) | 850만달러 (75억7,000만원) | - 옥수수 41,511톤, 밀가루 2천톤, 라면 15만상자, 비료 2천톤(옥수수기준 53,841톤) * 1\$당 890원 환율 적용 |
| 1997.8- 1997.10 (2차지원) | 890만달러 (81억원) | - 옥수수 17,100톤, 수수 14,576톤, 밀가루 5,501톤, 식용유 27만ℓ, 감자 1,300톤, 이유식 96.74톤, 분유 100톤, 어린이 영양제 3만병(옥수수기준 52,888톤) * 1\$당 1,680원 환율 적용 |

| 기 간 | 규 모 | 내 역 |
|--------------------------------|---------------------------|--|
| 1998.3 (2차추가지원) | 17만달러 (2억8,000만원) | - 비료 800톤(옥수수기준 1,261톤) * 1\$당 1,680원 환율 적용 |
| 1998.4- 1998.6 (3차지원) | 935만달러 (130억9,045만원) | - 옥수수 16,585톤(정주영 10,495톤 포함), 밀가루 13,500톤, 식 용유 26만ℓ, 분유 111톤, 비료 2,500톤, 소금 1,000톤, 쌀 57톤, 씨감자 5톤, 양말 26,000켤레, 한우 500두(정주영), 비 닐 3.4톤, 초콜렛 14톤, 의약품, 앰블란스 1대(옥수수 기준 54,544톤) * 1\$당 1,400원 환율 적용 |
| 1998.9~ 1998.12 (3차추가지원) | 1,133만달러 (141억6,200만원) | - 정주영 : 옥수수 39,509톤(95억원,톤당 24만원), 한우 501두 (사료 85톤, 물통 205개 포함 10억 9,400만원) - 민간단체 개별지원: 옥수수 4,010톤, 밀가루 2천톤, 백미 60 톤, 분유 128톤, 설탕 34톤, 식용유 356,700ℓ, 젓소 200 두, 사료 46톤, 비닐 50.8톤, 유리 984장, 의류 45,904매, X-Ray차 1대, 의약품 등(15개 단체, 35억 6,800만원) * 1\$당 1,250원 환율 적용 |
| 1999.1~ 1999.12 | 1,863만달러 (223억5,920만원) | - 한적 비료지원(3차 추가지원 3.30~6.5) : 4만톤 123억 3,300 만원 - 한적창구(3차 추가지원) : 24개 단체 33억 7,364만원 · 밀가루 3,139톤, 옥수수 4,015톤, 분유 42톤, 설탕 165톤, 씨 감자 180톤, 식용유 15,845ℓ, 라면 9,930상자, 의류 215,448 점, 의약품 등 - 독자창구(2.10~) : 10개 단체 66억 5,256만원 · 밀가루 1,051톤, 옥수수 4,000톤, 비료 1,484톤, 농기구, 젓염 소 450두, 의약품, 의료기기, 의류 등 * 1\$당 1,200원 환율 적용 |

| 기 간 | 규 모 | 내 역 |
|---------------------|---------------------------|---|
| 2000.1 ~ 2000.12 | 3,513만달러 (420억7,000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3차 추가지원 : 16개 단체 113억 2,99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떡 20톤, 감귤, 의료장비 11종, 기초의약품 59종, 밀가루, 비료, 농약, 비료생산컨테이너, 구충제, 건빵, 한우 500두, 장난감, 분무기, 옷감, 의류, 이불,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 - 독자창구 : 13개 단체 307억 3,87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사랑회, 우리민족서로돕기, 월드비전, 한국JTS, 천주교민화위, 북한동포후원연합회(남북나눔), 유진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민족복지재단,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
| 계 | 9,697만달러 (1,116억원) | |

제3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1. 국내외 체류실태

가. 국내입국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인원 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 말에 들어서는 100명을 넘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도에는 1999년의 2배가 넘는 312명이 입국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입국규 모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0년 12월말 현재 총 1,40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 국하여 이 중 1,188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입국 현황>

(2000.12.31 현재)

| 연도 | 1989 이전 | 19 90 | 19 91 | 19 92 | 19 93 | 19 94 | 19 95 | 19 96 | 19 97 | 19 98 | 19 99 | 20 00 | 총 입국 | 사망 | 이민 | 국 내 거 주 |
|----|------------|----------|----------|----------|----------|----------|----------|----------|----------|----------|----------|----------|-------|-----|----|------------|
| 인원 | 607 | 9 | 9 | 8 | 8 | 52 | 41 | 56 | 85 | 72 | 148 | 312 | 1,407 | 186 | 33 | 1,188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계속 증가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가 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과거에는 국내 입국경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 어 있고 입국방법 등도 제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입국경로가 여러 국가로 다변화되 면서 입국이 용이해짐에 따라 입국인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연고가족 등 의 도움을 받아 가족단위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전체 입국자가 증가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 2000년도 국내입국 유형별 현황 ＞

| 성 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계 |
|-----|----|----|----|----|----|----|----|----|----|-----|-----|-----|------------|
| 전체 | 11 | 7 | 29 | 25 | 15 | 29 | 20 | 34 | 18 | 60 | 25 | 39 | 312(명) |
| 남 | 3 | 3 | 17 | 21 | 10 | 19 | 11 | 18 | 11 | 32 | 16 | 25 | 186(59.6%) |
| 여 | 8 | 4 | 12 | 4 | 5 | 10 | 9 | 16 | 7 | 28 | 9 | 14 | 126(40.4%) |

| 연 령 | 10세미만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이상 | 계 |
|-----|-------|--------|--------|--------|--------|--------|-------|--------|
| 인원 | 11 | 51 | 74 | 94 | 50 | 15 | 17 | 312(명) |
| 비율 | 3.5 | 16.3 | 23.7 | 30.1 | 16 | 4.8 | 5.4 | 100(%) |

| 출신지 | 강원 | 남포 | 황해 | 평양 | 평안 | 자강 | 양강 | 함경 | 계 |
|-----|-----|-----|-----|-----|-----|-----|-----|------|--------|
| 인원 | 10 | 3 | 10 | 15 | 29 | 4 | 8 | 233 | 312(명) |
| 비율 | 3.2 | 0.9 | 3.2 | 4.8 | 9.2 | 1.2 | 2.5 | 74.6 | 100(%) |

| 직업 | 관리·지도원 | 의약계 | 교육계 | 군인 | 예술계 | 체육계 | 노동자 | 학생 | 무직 | 계 |
|----|--------|-----|-----|-----|-----|-----|------|------|------|--------|
| 인원 | 33 | 6 | 4 | 4 | 3 | 2 | 154 | 57 | 49 | 312(명) |
| 비율 | 10.5 | 1.9 | 1.2 | 1.2 | 0.9 | 0.6 | 49.3 | 18.2 | 15.7 | 100(%) |

2000년에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유형별 특징은 남·녀간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절반 이상(59.6%)이 되나, 여성도 40.4%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입국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별 분포는 20-30대가 다수(53.8%)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예년에 비해 청소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여성들과 청소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주부·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입국자(38.8%)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출신지역은 함경도(74.6%), 평안도(9.2%)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출신계층은 노동자(49.3%), 학생(18.2%), 무직자(15.7%)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나. 거주 및 정착실태

2000년 12월말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1,188명의 각 지역별 거주분포는 서울 44.9%, 경기·인천 20.8% 등 수도권 지역에 66%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 부산·경남 5.7%, 기타 지역은 시·도별로 약 20명 내외가 거주하고 있다.

직업별 분포는 연구원 등 전문직이 2.1%, 회사원 등 봉급생활자가 21.6%, 상업 등 자영업자가 9.2%, 학생이 6.9%, 경제활동이 가능한 데 직업이 없는 자가 16.8%,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유아·고령자가 28%, 정착지원시설 교육생이 14.2%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2000년도부터 취업보호제의 본격 시행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활·자립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은 점차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다. 해외체류 실태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은 그 성격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대부분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소수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체류유형은 첫째, 식량획득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수일 내지 수주 정도 체류하다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단순월경자, 둘째, 조선족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월경한 후 장기체류하는 자, 셋째, 일정한 거처 없이 장기간 은신생활을 하는 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탈북·체류유형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각 단체·기관에서 추정 발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언어상의 문제로 중국내 재중동포(조선족)가 집단 거주하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재중동포(조선족)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불안감 등으로 수시로 거처를 이동하면서 은신·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식량 등을 구할 일시적인

목적으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처리는 자국의 주권사항으로서 제3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가 국내외적인 어려운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체류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상호이해를 통해 이들의 보호·지원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 정착지원 체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여부가 우리의 통일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판단 아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든 보호·지원정책은 전반적인 통일정책 구도하에서 추진하며, ② 해외체류 탈북자는 동포애와 인도주의 시각에서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체류국 실정에 부합하는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③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일회성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④ 정부차원의 지원과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종 민간·종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활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입국조치, 초기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먼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본인의 보호신청이 있을 경우 현지 공관 등이 임시보호조치와 함께 국내입국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을 하게 되면, 보호결정을 한 후 사회적응교육, 취직,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 자립지원을 하게 된다.

사후관리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편입된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정착지원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사회·종교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교편입·공납금 지원, 자매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신변보호는 출신 신분별로 군인과 일

반인으로 구분하여 관계부처에서 분리 담당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 협의회는 긴급현안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성격별로 정책·운영·교육훈련·정착지원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3. 정착지원 추진

가. 초기 자립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초기 생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종류에 따라 2억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보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여 각 급수별 평형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우선해주고 있는데,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자에게는 일정액의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착지원기준>

| 구 분 | | 지 원 기 준 | 비 고 |
|------------------|-------------|---|--|
| 정 착 금 | 기 본 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5인 이상) :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 ○ 2급(4인) : 월최저임금액의 140배 상당액 ○ 3급(3인) : 월최저임금액의 120배 상당액 ○ 4급(2인) :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 ○ 5급(1인) : 월최저임금액의 80배 상당액 | ○ 2000년도 월최저 임 금액은 361,600원임 |
| | 가 산 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중 18세 이하 또는 55세 이상인 경우 (2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1인마다 월최저임금액의 10배 상당액 ○ 세대구성원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또는 중증신 체장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10배, 1년 이상 20배 상당액 ○ 자활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가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최저임금액의 10배 상당액 | ○ 동일인에게 지원항목 이 2개 이상 중복되 거나 세대구성원과 중복될 경우에도 40 배 이내에서 지급 |
| 주 거 지 원 | 임 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6인 이상) : 21-25평 ○ 2급(5인) : 19평 ○ 3급(4인) : 17평 ○ 4급(3인) : 15평 ○ 5급(1-2인) : 13평 | ○ “나”, “다”지역은 급 수별 “가”지역의 각각 40%, 70%를 가액 지급(지방거주 장려 금) |
| | 무 상 | ○ 25.7평 이하: 세대주가 중병으로 상당기간 장기치 료를 요하거나 중증 신체장애자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사안별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 정·지급 |
| 보 로 금 | 정 보 | ○ 2억 5천만원 이하 | ○ 보로금 지급지침에 의거 지급 |
| | 장 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함, 전투폭격기 : 1억 5천만원 이하 ○ 전차, 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 이하 ○ 포, 기관총, 소총류 등 무기류 : 1천만원 이하 | |
| | 재 화 | ○ 시가 상당액 | |
| 학 비 보 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 면제 ○ 사립대 : 정부보조 50%, 사립대 자체지원 50% ○ 국·공립대 : 면제 | ○ 학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학교교육지 원비) |

나. 시설내 보호·지원

1994년 이후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시행을 통해 정착지원시설의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97년 12월 30일 부지 18,147평, 연건평 2,214평, 수용인원 100명 규모의 시설 건립에 착공하여 약 1년반의 공사기간을 거쳐 1999년 7월 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준공·개소하게 되었다.

하나원에서는 3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중점은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정서순화에 두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교육중점을 두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교육과 진로지도, 운전·전산·요리·봉제 등 기초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여성·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사회진출 후 학교 및 가정생활에 바로 적응하여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 하나원 인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민간단체 및 퇴직교사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별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하나원」 주요 시설 현황 >

| 시설명 | 규 모 | 시 설 내 역 |
|-----|----------|---|
| 교육관 | 약 1,235평 | o 강당,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자치활동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고충상담실, 자료실 등 교육생의 사회적응 교육 공간으로 활용 |
| 생활관 | | o 1인실, 2인실, 4인실, 별실, 특실, 가족실 등 교육생 생활공간으로 활용 |
| 봉사관 | 약 241평 | o 숙소, 내무반, 정비실 등 시설관리 지원공간으로 활용 |

< 「하나원」 교육내용 >

1. 정서·심리적 불안정 상태 해소
 - o 탈북·제3국 은신·도피생활중 어려움 및 입국후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상태 불안
 - 인성·적성검사를 통한 개별심리상태 파악 및 심리안정·순화프로그램 운영
2. 문화적 이질감 해소
 - o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상존
 -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이론교육·현장학습 등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 실시
3. 진로지도 및 취업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직업훈련 강화
 - o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전기간동안 진로지도 필요
 - 전산·운전·요리·봉제 등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기능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점 편성·운영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원 운영에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연령·학력·출신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은 민간의 참여 없이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민간에서는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주말·휴일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기회를 가질 수 있는 1일 현장체험, 지방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교·시민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준공된 이후 총 252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후 사회에 진출하였으며, 2000년 12월말 현재 10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하나원 교육생 입퇴소 현황>

(단위:명)

| 구분 | 1기 | 2기 | 3기 | 4기 | 5기 | 6기 | 7기 | 8기 | 9기 | 10기 | 계 |
|----|----|----|----|----|----|----|----|----|----|-----|-----|
| 입소 | 20 | 9 | 32 | 41 | 27 | 30 | 41 | 49 | 48 | 61 | 358 |
| 퇴소 | 20 | 9 | 32 | 41 | 27 | 30 | 41 | 49 | 3 | - | 252 |

* 교육 입소생 성별: 남210(59%), 여148(41%)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10세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계 |
|--------|---------|---------|----------|---------|--------|--------|-----|
| 22(6%) | 49(14%) | 96(27%) | 106(30%) | 49(14%) | 23(6%) | 13(3%) | 358 |

다. 사회진출 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는 생업 문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함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전문 진로 상담요원의 지도로 개개인의 적성·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회에 진출한 후에는 노동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를 통해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알선받아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직업훈련의 참여율을 높이고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교통비·식비·가계보조수당 등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을 2년간 지원해주는 취업보호제를 실시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학교에 편·입학한 사람에게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사회진출 후 희망자에 대해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여 질병치료시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특례를 인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주선하여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후원회를 통해 생활이 아주 어려운 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종교단체 등을 통해 각종 생활상담·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앙·지방·민간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1999년 8월 1일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거주지 보호담당관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1999년 11월 3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협의회를 구성,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별로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 법·제도 개선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크게 증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지원이 요청됨에 따라 1997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1998년 이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초기정착금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1999년에는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자립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취업보호제의 실시이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업한 날로부터 2년간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70만원의 범위안에서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을 활성화하였다.

둘째, 노령연금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의 국민연금법은 1999년 4월 1일 기준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에 한해서만 특례노령연금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9년 4월 1일 이후에 국내 입국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북한이탈주민도 특례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업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활성화이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지원사업을 선도하는 후원회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민간차원의 각종 후원·결연단체를 네트워크화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

의회」를 창립하였는 바, 이를 활성화하여 보다 더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러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수준은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는 지방·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주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제도적·가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본인들의 확고한 자립·자활의지 및 정착 노력과 함께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해주는 국민 모두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제4절 북한인권 · 환경문제 개선 추진

1. 북한인권문제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미국의 국제적 인권단체인 「Freedom House」 등 비정부기구(NGO)의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냉전적 이념대립이 종식되고 세계적으로 인권상황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수준이 열악하고 경제난으로 인해 경제적 · 사회적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인권NGO 이외에도 UN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특히 EU국가들은 북한과의 수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북한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개념인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천부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북한당국이 제도적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도에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2월 25일, 미국 국무부는 「1999년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여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통제하의 독재국가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고 아직까지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활동 또한 국가 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1999년 9월 9일 처음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1999년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보장실태가 아랍권 국가들과 함께 열악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2000년 9월 5일 두번째로 발표된 ‘국제종교자유보고서 2000’에서는 전체주의 · 권위주의 정권은 종교적 신앙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자유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평가하고 북한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헌법상 종교적 신앙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공식기구에 의해 감독을 받는 종교활동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사실상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00년 3월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6차 UN인권위원회에서는 EU대표가 북한의 인권상황은 정보의 제약으로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나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고, 또한 미국대표는 “오도된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영양결핍, 나아가 기아에 이르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캐나다대표는 북한당국이 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AI)도 2000년 6월 14일 발표한 1999년도 세계인권상황 연례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대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접근 및 인권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통제되어 있는 상태이며 식량사태와 관련하여 UNICEF·WFP·EU가 공동으로 실시한 7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태 조사결과 16%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며, 62%는 발육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지난 4년간 사망률이 증가했고 이 기간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220,000명이 더 사망했다고 언급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 수백명의 북한주민이 식량을 찾아 중국국경을 넘고 있으며, 그 중 붙잡히거나 중국공안에 의해 북한으로 넘겨진 주민은 포로수용소로 보내지고 있고, 여성인신매매도 북·중 국경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Freedom House」는 2000년 10월 31일 인터넷을 통해 ‘1999-2000 세계자유상황 평가서’를 발표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서 각각 자유 수준이 가장 열악(Not Free)한 7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북한은 “의심의 여지없이 세계에서 가장 통제된 사회”라고 평가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0월 24일 영국 BBC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현재는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 쉬운 것부터 풀어가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고 “기아와 전쟁 위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도 큰 인권문제이다. 현 단계는 인권문제를 제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통해 우선 북한주민들의 ‘먹을 권리’를 해결해 주는 것도 인권 개선의 한 방법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개개인이 단지 전체 조직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뿐이다.

예를 들어 북한 헌법에서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제63조)고 규정하여 집단 이익을 우선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도 유추해석, 형벌조문의 추상성 등을 인정하여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 금지가 무시되고 있다.

계급성과 집단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무시하는 한편, 인권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법보다 당방침의 우위, 공개처형 관행 등으로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을 경시하여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거주·이전의 자유도 통제해 왔으나, 최근에는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의 유민화 심화 등으로 통제가 다소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열악해진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와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약칭 ‘북한인권시민연합’) 및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약칭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등 3개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들 민간단체는 UN 인권위원회에 참가하여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UNHCH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측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하거나, 국제 NGO와의 정보자료의 공유, 공동 워크숍 개최 등 교류협력의 확대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 정리 등 정보자료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제인권기구 및 관련 NGO 등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종합·정리하여 「1999년도 국제인권보고서 편람」(2000년 3월)과 「북한인권보고서 편람」(2000년 12월)을 발간하였다.

2. 북한환경문제

오늘날 북한 환경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한반도 전체, 나아가서는 동북아 공동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정부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한반도 환경공동체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남북환경협력을 통한 북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북한 환경문제가 환경의식 부재와 경제난에 따른 환경개선 투자부족 등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석탄 위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 폐광·해안간척·공장 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식량증산 목적의 땃기밭 개간과 연료확보 목적의 산림남벌 등이 북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 환경문제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낮은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스스로의 힘만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2000년 들어, 우리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산림복구 지원과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지원 등을 매개로 한 남북환경협력에 북한이 일부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대외수교 및 개성공단 등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둔 국가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복구 지원은 사단법인 「평화의 숲」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 단체를 통해 금년 들어 3회에 걸쳐 10,700만원 상당의 산림기자재가 북한에 지원되었다. 지원 품목은 잣나무 묘목, 분무기, 비료, 농약 등이다.

또한 2000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양묘장 복구 및 조성사업과 조림사업을 2001년 3월부터 추진한다는 ‘산림조성 및 보호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산림조성사업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도록 상호 협의해 나가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수목보호연구회」가 1999년부터 금강산지역의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 북한 「금강산관광총회사」와 추진해 왔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금강산 피해 실태조사, 약제주입 등 방제기술 교육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북측의 미온적 태도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남북간 환경협력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2000년 들어 강원도 관계자가 2차례 방북(11.9-12 금강산, 12.16-19 평양)하여 씨감자 원종장 시설 건립, 연어자원 보호증식 사업 등과 함께 금강산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에 합의(12.19)함으로써 솔잎혹파리 공동방제사업 등 남북환경분야 협력에 새로운 전

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남북환경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한규정」(1999.10.27, 통일부고시)에 의거, ‘자연재해 예방차원의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민간차원 지원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하나의 생태권인 한반도에서 남북이 균형된 환경보전을 실현하여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축하고,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에 대한 남북공동 생태계조사를 지속적으로 제의하는 등 환경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1절 추진경과 및 본공사 착수

1. 공사 추진경과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기초하여 추진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은 1995년 3월 KEDO가 설립되면서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95년 12월 15일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고, 1997년 7월에 경수로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KEDO는 경수로 공사를 착공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KEDO 집행이사국간의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KEDO는 경수로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우선 부지준비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부지준비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은 우리 정부가 KEDO에 융자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부지준비공사는 경수로 건설부지를 정지하고, 숙소·사무실·식당·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도로·통신 관련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됨으로써 경수로사업은 협상단계에서 시행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1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부지준비공사는 재원분담협상 및 차관공여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KEDO-한전간 주계약(TKC)이 체결되지 않아 2000년 2월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부지준비공사에는 한국전력공사를 주계약자로 하여 합동시공단(현대건설, 대우, 동아건설, 한국중공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말 현재 남측 800여명, 북측 100여명 등 총 900여명의 남북한 근로자가 공동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불도저,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차량 등 315대의 장비도 공사에 투입되고 있다.

그 동안의 공사실적을 보면, 2000년말 현재 경수로발전소가 들어설 부지정지작업

은 약 90%가 완료되었다. 부지정지작업 이외에 본공사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로써 부지 인근 진입도로 27km를 개설·포장하였고, 남북한을 연결하는 전용통신망 10회선과 부지내 통신설비를 설치하였다. 또한 임시 동력설비, 중기수리고, 유류저장고, 건설사무소 등도 마련하였다.

특히 근로자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해 근로자 숙소 및 식당, 목욕탕, 의무실, 노래방, 독서실 등 편의시설과 테니스장, 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교회, 법당, 성당 등 종교시설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위성TV 수신장치를 설치하여 국내외의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등 22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한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 과정에서 초기에는 오랜 분단으로 인한 체제 및 이념의 차이, 상호이해 부족 등으로 다소간의 갈등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상대방의 체제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현재는 서로 협조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동작업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2. 주계약(TKC) 발효 및 본공사 착수

가. 주계약(TKC) 체결 및 발효

경수로건설 본공사가 착수되기 위해서는 KEDO와 한전간에 주계약(TKC : Turn-Key Contract)이 우선 체결되어야 한다. 주계약은 1996년 3월 KEDO에 의해 주계약자로 선정된 한전이 일괄도급방식(Turn-Key Basis)으로 한국표준형 경수로발전소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건들을 규정하는 기본계약이다.

KEDO와 한전은 1997년 10월부터 15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수차례의 비공식 실무접촉을 통해 방대한 주계약 조건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1999년 12월 15일 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천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한편, 주계약(TKC) 발효조건인 KEDO-한국수출입은행간 용자계약은 1999년 12

월 15일, KEDO-일본 국제협력은행간 용자계약은 2000년 1월 31일에 각각 서명됨에 따라 주계약이 2월 3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경수로건설 공사는 본공사에 진입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부지준비공사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6월에는 취수방파제, 물양장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착수하여 2000년 12월말까지 23%의 공정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계약(TKC)의 발효에 따라 경수로의 발전소 설계 및 건설기자재의 발주·제작에도 착수하였으며, 예비안전성 분석 평가, 환경영향평가, 규제·운영·정비요원의 훈련계획 등 건설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KEDO와 한전간에 체결된 주계약은 총 1,8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으로서 계약일반조건 38개 조항(150개 세부조항)과 22개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계약의 주요내용>

1. 의무사항

- 한 전
 - 가압경수로 1,000MW급 2기 건설, 각종 생활 및 기반시설 설치·운영, 부지운영 및 건설방법에 대한 책임
- KEDO
 - 부지제공,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부지내 질서유지, 통신수단 제공
- 북 한
 - 경수로 공급협정, 의정서 등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2. 공사기간

- KEDO-북한간 별도 의정서(인도 및 조치일정 의정서)에 따라 확정

3. 계약금액

- 1997년 1월 불변가격 기준으로 40.8억불(물가변동분 보상조건)

4. 주요 계약조건

- 원자력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의 재정적·법적 보호
 - KEDO는 한전 및 협력업체들을 원자력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재정적·법적 조치를 마련
- 분쟁 및 중재절차
 - 준거 : 국제상사중재규칙
 - 중재장소 및 사용언어 : 서울, 영어
- 교육훈련
 - KEDO는 KEDO-북한간 「훈련의정서」에 따라 충분한 수의 북한 훈련생을 공급
- 보 증
 - 전기출력 : 1,000MW(허용오차 : $\pm 3\%$)
 - 기간
 - 주요기자재 : 성능보증 시험 후 2년
 - 시공 : 성능보증시험 완료 후 2년
- 기술지원
 - 한전은 첫 호기 준공 후 1년 동안 운전·보수유지를 위한 기술 지원

5. 발효

- KEDO-한국수출입은행, KEDO-일본국제협력은행간 용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효

나. 사업관리체계 강화

우리 정부와 KEDO는 본공사 착수 이후 공사물량이 증가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투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경수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였다.

먼저 우리 근로자들이 북한 현지에 상주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는 동안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공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2000년 2월 본공사 착수 후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가 800명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능공 숙소 등 생활시설과 후생관 등 각종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경수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상통행로를 통한 객화선도 증편하여 2000년 10월부터는 속초-양화간에 월 2회 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인력을 수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KEDO는 경수로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자통신망 구축, 우편물 폐낭중계 등 각종 의정서상의 합의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남북한 근로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KEDO는 경수로 부지에 근무하는 KEDO 인원들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2000년 2월부터 우리 인원으로 구성된 「KEDO 질서유지대」 35명을 파견·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 근로자들의 현지생활을 안내하는 「경수로생활수첩」을 발간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 근로자들에게 「방북안내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근로자들이 의연한 태도로 사명감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수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남북한의 대규모 인적·물적·기술적 교류와 협력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이해를 증진

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재원조달

가. 재원분담결의

경수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수로건설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6년부터 예상사업비 산정과 함께 각 국가별로 분담할 금액을 정하는 재원분담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원분담협상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되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2년여에 걸친 재원분담협상 끝에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46억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 46억달러 기준 32.2억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일본은 10억달러(1,165억엔) 상당을 엔화로, 유럽연합(EU)는 KEDO 가입당시 약속한 7,500만 유로화(ECU)를 기여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중유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데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약속한 기여금액이 최대치(maximum)임을 명기함으로써 부족분 조달시의 추가적인 부담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나. 차관공여협정 및 용자계약 체결

KEDO 집행이사국간에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그 후속절차로써 KEDO는 한국 및 일본과의 「차관공여협정」을 체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한국과 일본

은 「차관공여협정」 문안을 각각 마련하여 KEDO 집행이사회 및 실무회의에서 KEDO 집행이사국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한·일 양자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1999년 4월 6일 KEDO 집행이사회에서 「차관공여협정」 문안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는 협정 체결에 필요한 정부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1999년 7월 2일 「차관공여협정」에 공식 서명하였다.

서명 직후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위해 「차관공여협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9년 8월 12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이를 KEDO에 통보함으로써 같은 해 8월 19일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이 발효되었다.

한편, 일본은 자국 의회의 정기회기가 6월말에 종료되고 그 이전에 「차관공여협정」에 대한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9년 5월 3일 일본 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에 서명하고, 6월 30일 의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7월 15일 일본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을 발효시켰다.

한국정부-KEDO간 「차관공여협정」이 발효된 후, 1999년 9월부터 「차관공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용자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용자계약」 협상이 KEDO와 한국수출입은행 및 일본의 국제협력은행간에 수 차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99년 12월 15일 KEDO와 한전이 주계약을 체결한 직후 KEDO와 한국수출입은행간의 용자계약이 체결되었으며, KEDO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간의 「용자계약」도 2000년 1월 31일 체결되었다. 이로써 본공사 착수 등 경수로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

다. 재원조달 및 공사비 분담

1998년 11월 9일 경수로사업비 「재원분담결의」가 채택된 이후 정부는 경수로사업비 분담분에 대한 국내재원조달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국내재원조달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형평성에 부합되는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정형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전기요금납부금제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전기요금납부금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1998년 11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월 3일 당정회의를 개최한 이래 1999년 5월까지 5차례의 당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갖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 설명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전기요금납부금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였다. 1999년 5월 7일 제5차 당정회의에서 사업비 조달방안으로 「전기요금납부금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7월 1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8월 4일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다. 당초에는 1999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국내재원조달방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심의회가 지연되고 있던 중 2000년 5월 30일 15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다. 16대 국회에 들어와 관계부처 및 당정간 협의를 통해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과 「전기요금납부금제도」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당분간 국채 발행을 통해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근본적인 재원조달방안은 경제상황, 재정여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키로 하였다.

한편, KEDO는 2000년 2월 3일 주계약(TKC)이 발효되고, 본공사가 착수됨에 따라 경수로건설공사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2000년 12월까지 2억 8,878만달러의 건설공사비를 부담하였으며, 일본은 1억 2,376만달러를 부담하여 총 4억 1,255만달러의 건설공사비가 주계약자인 한전에 지급되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은 근본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채를 발행하여 소요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바, 국채발행 규모는 총 4,050억원이다. 연도별 발행규모는 1999년 1,500억원이고, 2000년 2,550억원이다.

제2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간 협상

1. KEDO-북한간 협상경과

KEDO와 북한은 1995년 12월 15일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여 경수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1996년 4월에는 「경수로공급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의정서 협상을 시작하였다.

먼저 경수로사업 착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KEDO 인원에 대한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와 통행·통신 문제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여 1996년 7월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의정서」, 「통신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97년 1월에는 경수로 부지인수 및 북한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제반원칙을 정하는 「부지 의정서」와 「서비스 의정서」를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북한이 경수로 대금을 미상환할 경우에 대비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1997년까지 경수로건설 착공에 필수적인 6개 의정서가 체결되었고, 이후 기술적 사항에 관한 의정서 협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 10월에는 「훈련의정서」가 체결·발효되었다. 1997년부터 총 3차례 진행되었던 「품질보장의정서」 협상이 2000년 7월 재개되어 몇 가지 이견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였다.

「경수로 공급협정」 이행을 위해 2000년말까지 이미 체결된 의정서와 앞으로 협상을 통해 체결해야 할 의정서의 현황은 표와 같다.

〈후속의정서 협상 현황〉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 거 | 비 고 |
|-----------------|---|-----------------------|------------------|
|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 KEDO의 법적 지위, KEDO 인원 에 대한 신변보호 등 | 경수로 공급협정 제4조 6, 7항 | 1996.7.11 발효 |
| 통 행 | KEDO인원의 부지접근(자유로운 출입절차) 및 효율적 통행로 개설 |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3, 6항 | " |
| 통 신 | 부지내외로의 효율적인 통신수단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 |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5, 6항 | " |
| 부 지 | 부지인수 및 부지접근·사용에 관련된 세부사항 | 경수로 공급협정 제5조 3항 | 1997.1.8 발효 |
| 서비스 | 북한의 노무·물자·시설과 기타 서비스 공급조건 | 경수로 공급협정 제9조 4, 6항 | " |
| 미지급시 조 치 | 상환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 경수로 공급협정 제16조 3항 | 1997.6.24 발효 |
| 훈련 | 경수로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계획 | 경수로 공급협정 제7조 2항 | 2000.10.20 발효 |
| 품질보장 | 경수로 품질 및 성능 보장 | 경수로 공급협정 제6조 4항 | 협상중 |
| 인도일정 | 북한의 핵동결 및 해체조치와 경 수로 공급일정 | 경수로 공급협정 제3조 3항 | 미협의 |
| 상환조건 | 경수로 건설대금의 상환금액 및 조건 | 경수로 공급협정 제2조 4항 | " |
| 사용후 연료 | 사용후 연료의 안전한 보관·처리 및 제3국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 | 경수로 공급협정 제8조 4항 | " |
| 핵 안전 및 규제 | 경수로 완공후 정기 안전점검을 위한 절차와 일정 | 경수로 공급협정 제10조 5항 | " |
| 핵사고시 책 임 | 핵사고시 보장장치에 관한 세부 사항 | 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 2항 | " |

후속 의정서 협상과는 별도로 KEDO는 기 합의된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상을 북한측과 수시로 개최해 왔다. 1997년 4월부터 3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같은 해 7월 2일 북한출입, 통관, 해상수송 등 19개 분야의 세부절차에 합의하였으며, 1997년 8월에는 개별서비스계약(ISC) 문안에 합의한 바 있다.

1998년 KEDO는 북한측과 2차례의 고위전문가 협상이 개최되었다. 이 협상에서는 1997년 8월 부지준비공사 착공 이후 공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포함하여 효율적·경제적인 해로(海路) 이용, 북한 근로자 임금 수준, KEDO 인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현안들을 협의하였다.

1999년에도 2차례의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 협상이 개최되었다. 2월에 개최된 1차 협상에서 KEDO측은 인력과 장비가 대규모로 투입될 본공사에 대비하기 위해 객화선의 운항회수 및 승선인원 확대, KEDO인원의 인근휴양지 방문, 독자통신망 설치, 우편물 폐낭중계 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공사 진척도를 보아가면서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2차 협상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북한 향산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은 당초 본공사 착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반 현안들을 협의기로 하였으나, 북한측이 공사지연 책임을 KEDO측에 전가하고 북한 노동력 공급에 관해 상당한 이견이 노정되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만, 1999년 5월 실무전문가 협상에서 문안에 합의한 바 있는 「환경면책 양해각서」만 서명되었다.

2000년 2월 3일 주계약(TKC)이 발효되어 경수로사업이 본격화된 2월 하순에 개최된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 협상에서는 「훈련의정서」 등 후속의정서 협상 일정을 마련하였고, 본공사 추진에 따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북한측이 1999년 9월 고위전문가 협상에서 노무인력 임금을 현재의 110달러를 600달러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이래, 노무인력 임금문제는 KEDO-북한간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노무인력 임금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KEDO 사

무총장이 2000년 8월과 10월 2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협상을 하였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KEDO측은 2000년 12월 6일 도쿄에서 개최된 집행이사회에서 북한측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안정적인 노동인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000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KEDO-북한간 고위전문가 협상에서는 KEDO원전의 핵사고 책임문제, 옥외 개폐소 설치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경수로사업을 위해 운행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2000년 7월 해상수송전문가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는 양화무선국 설치를 위해 제공하는 「SSB통신장비 제공 및 운영에 관한 회의록(ROD)」이 서명되었다.

고위전문가 협상 이외에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KEDO-북한간 실무전문가 협상을 개최하여 협의하거나, 부지현장의 KEDO사무소,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대상사업국과 수시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2. 후속의정서 체결 추진

가. 훈련의정서 협상

1999년에는 경수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북한 인력의 훈련문제를 규정하는 「훈련의정서」 협상이 두 차례 개최되었다. 1차 협상은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북한의 향산에서 개최되었고, 2차 협상은 4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미국의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협상에서는 훈련인원 선발, 훈련종료 시기, 모의 제어반 제공, 훈련인원 보호문제 등이 협의되었으나, 훈련장소 등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KEDO-북한간 「훈련의정서」 체결협상이 북한 향산에서 재개되어 쌍방은 최종 문안에 합의하였다. 「훈련의정서」는 2000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KEDO 앤더슨(Anderson) 사무총장과 북한 원자력총국의 김희문

부총국장간에 서명되었다. 이에 따라 북측은 적절한 훈련후보생을 제공하고 KEDO는 KEDO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북측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훈련의정서 주요내용〉

| 항 목 | 주 요 내 용 |
|-----------------|---|
| 1. 일반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경수로발전소 운영과 유지를 위해 KEDO가 포괄적인 훈련계획을 수립·이행 ○ 북한은 충분한 수의 자격 있는 훈련후보자를 제공 |
| 2. 훈련계획의 수립·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의 훈련계획은 강의실 교육, 실험실훈련, 현장훈련 등을 포함하는 1단계 훈련과 부지에서의 현장경험훈련의 2단계 훈련으로 구분 ○ 훈련은 주계약(TKC) 발효후 18개월부터 개시 ○ 훈련계획에 참여할 북한 훈련생 수는 529명 ○ 훈련장소는 금호부지, 북한내 부지 이외의 장소, KEDO와 북한이 합의하는 여타 장소 및 KEDO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여타 국가 |
| 3. 훈련계획 검토 및 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와 북한 운영기관의 훈련계획이 원자력산업 표준관행과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독립된 훈련 전문가그룹이 훈련계획에 대해 검토 및 인증 시행 |
| 4. 상호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는 북한 운영기관의 훈련계획과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경수로 훈련전문가와 비상시에 대비한 자문관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 KEDO와 북한은 상호 협력 |

나. 품질보장의정서 협상

KEDO와 북한은 1997년 중에 두차례(1차:11.4-11 향산, 2차:12.3-23 뉴욕), 1998년 1차례(8.10-27, 뉴욕)의 「품질보장 의정서」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당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시운전 기간 중의 품질보증 활동의 주체, 품질보증 활동 참가인원에 대한 특권·면책, 전기출력 미달시 보상문제 등이었다.

2000년 7월 「품질보장의정서」 관련 4차 협상이 북한의 향산에서 개최되어 대체적인 문안이 합의되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타결을 짓지 못하고 있다.

제1절 통일교육 강화 및 지원체계 정립

1. 통일교육 지원체계 정립

가.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국회의장 추천 민간전문가 등 24인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000년 7월과 12월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통일교육 발전방안」과 「2001년 통일교육기본계획」, 「2001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심의·의결하였다.

그리고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7월과 11월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통일교육심의위원 명단>

2000. 12. 31. 현재

| 성명 | 소속 | 비고 |
|-----|----------------|----------|
| 박재규 | 통일부장관(위원장) | 당연직 |
| 김상권 | 교육부차관(부위원장) | |
| 양영식 | 통일부차관 | |
| 김경한 | 법무부차관 | |
| 문일섭 | 국방부차관 | |
| 김재영 | 행정자치부차관 | |
| 김순규 | 문화관광부차관 | |
| 김상남 | 노동부차관 | |
| 김병일 | 기획예산처차관 | |
| 김경애 |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 | |
| 김병호 |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 |
| 구본태 | 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 | 국회의장 추천 |
| 남주홍 | 경기대학교 교수 | |
| 라종일 | 경희대학교 교수 | |
| 백용호 | 중앙대학교 교수 | |
| 홍연숙 | 한양대학교 교수 | |
| 민병천 | 서경대학교 총장(부위원장) | 통일부장관 임명 |
| 곽병선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
| 김용제 | 건국대학교 교수 | |
| 김학준 | 명지대학교 교수 | |
| 박도순 | 교육과정평가원 원장 | |
| 이경숙 |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 |
| 이온죽 | 서울대학교 교수 | |
| 전인영 | 서울대학교 교수 | |

나. 2001년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에는 「2001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 2001년 통일교육의 3대 목표로 ①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②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③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을 설정하였다.

또한, 통일교육 5대 중점추진과제로는 ①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에 부합되는 교육내용 정립 ② 정부·민간·언론의 역할분담체제 강화 ③ 학교·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 지원 ④ 지식정보시대의 열린 통일교육 실시 ⑤ 수요자중심의 통일교육내용 및 기법 강화를 설정하였다.

한편, 이 기본계획에는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일부, 여성특별위원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41개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발간·보급

정부는 통일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통일의식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학교 및 사회의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왔다.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에 입각하여 1999년 12월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으며, 2000년 12월에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 지침서의 주요 특징은 ① 국민들이 북한사회의 단편적 모습이 아닌 기본운영원리를 이해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판단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②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모색하며 ③ 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 우리 사회내부의 계층별·세대별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④ 최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실상의 통일과 제도적 통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변화의 의미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으며, ⑤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민족공동체 교육, 평화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2001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교육기본지침서 구성 및 주요 내용>

| 구 성 | 주 요 내 용 |
|-----------------|--------------------|
| Ⅰ. 통일교육의 의미와 목표 | 1. 통일교육의 정의 |
| | 2. 통일교육의 목표 |
| | 3. 통일교육의 과제 |
| Ⅱ.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 1. 통일의 필요성 |
| | 2. 북한사회의 모습 |
| | 3. 북한의 변화 이해 |
| | 4. 통일환경의 변화 |
| | 5.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
| | 6.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
| | 7.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
| | 8. 통일국가의 실현 |
| | 9.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 Ⅲ.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
| | 2. 통일교육의 대상별 지도원칙 |

라.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 함양 및 학교·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단체의 통일교육관련 워크숍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총 5차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개최 현황>

| 주관단체 | 일 자 | 발표주제 |
|------------------|--------------|---|
| 한국정치학회 | 2000. 3.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의 방향과 제도 -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 통일교육의 내용, 범위, 제도 |
| 통일교육연구원 | 2000. 10.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조방안 - 화해협력시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과제 - 민간 통일교육관련단체 육성방안 |
|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 2000. 11.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기의 민간통일교육 - 전환기의 통일교육 내용과 구성 - 민간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
| 한국방송프로 듀서연합회 | 2000. 11. 2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통일의식 형성을 위한 방송의 역할 모색 - 남북정상회담 이후 방송프로그램과 교육현장의 변화 -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변화 |
| 한국여성개발원 | 2000. 12. 2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여성의 통일의식 및 교육요구조사에 기초한 여성통일교육의 방향 - 여성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 |

2. 통일교육 강화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발맞추어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보를 바탕으로 한 화해협력 지향」이라는 기존 교육방향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을 보다 강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 학교교사 등 지역사회 및 학교현장에서 통일문제 관련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상황, 북한 주민의 생활상, 균형잡힌 통일관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북한 방문 예정자들에 대한 방북안내교육을 내실화하여 방북활동

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남북화해협력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국민에게 바람직한 통일관과 건전한 안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교과과정을 새롭게 편성하고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다양한 교육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기존 통일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워크숍 개최 등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남북관계 상황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였다.

<통일교육 교과 내용>

| 구 분 | 교 과 내 용 |
|-----------------|---|
| 통일의 당위성 인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의미와 성격 ○ 분단의 배경과 폐해 ○ 평화통일의 필요성 |
|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체제의 특징 : 정치·경제·사회·문화 ○ 북한의 변화 가능성 ○ 북한의 대남전략·대외정책 |
| 평화통일환경의 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질서의 변화 ○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
|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포용정책과 국가안보 ○ 남북기본합의서의 의미와 남북관계 진전과정 ○ 남북관계의 현황 |
|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국 통일의 교훈 ○ 통일국가의 미래상 ○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 민주복지사회의 구현 |
| 체험·참여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땅굴 등 분단현장 시찰 ○ 주제별 토의·과제 연구, 대담토론 등 |

이 같은 정부의 통일교육 목표와 방침, 교과내용에 따라,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크게 정규교육과 국내외 출장교육으로 나눌 수 있으며, 2000년의 경우 정규교육 4개 과정 14,829명, 국내외 출장교육 16,021명 등 총 30,850명에 대해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가. 정규교육

정규교육은 통일교육전문과정, 통일업무 관련 공무원과정, 특별과정, 남북교류협력과정

등 4개 과정 19개 반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육인원은 14,829명이다.

통일교육전문과정은 각 지역사회나 학교 등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평통자문위원, 사회교육기관장사, 초·중등교사·교장·교감·장학사(관) 등 교육전문직, 대학교수, 관리직 공직자 등 6개 반을 대상으로 3,707명에 대해 3~5일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사회 및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통일업무 관련 공무원과정은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공무원반,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교사반 등 3개 반을 대상으로 762명에 대해 2주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 및 민족공동체 형성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였으며,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남북화해협력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과제 등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을 편성하였다.

특별과정은 전국 시·도 교육감, 초·중등학교 학부모, 사회단체간부, 통일단체간부, 대학생 등 8개 반 5,899명에 대해 1~3일 기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은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남북교류협력과정은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이나 경수로사업 추진인력 등 북한방문에 정자, 남북회담 및 왕래행사 참가자, 금강산관광도우미 등 3개 반 4,461명에 대해 1일 3~4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북예정자반은 남북관계 현황과 방북시 행동요령 등 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북한체류시 필요사항 등을 안내하는 차원에서 운영하였다. 2000년 6월부터는 남북정상회담, 장관급회담 등 남북당국간 회담대표단과 이산가족교환방문단 등 남북왕래행사 참가자에 대해서도 회담과 왕래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안내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금강산을 관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교육은 통일부가 총괄하되, 관광객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교육실시는 관광사업자에 위임하여 관광선상에서 비디오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관광객을 안내하는 도우미들에 대해서는 관광안내 요령 등 금강산 관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내용을 반기별로 교육하였다.

나. 국내외 출장교육

국내외 출장교육은 국내 지역사회 주민 및 해외동포 16,021명에 대하여 현지에서 실시되었다.

국내 출장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정규 통일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방의 여론 선도층 인사나 각급 사회 및 학교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강의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5,744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외 출장교육은 2000년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유럽 및 북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277명을 대상으로 본국의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문제의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교육 추진 실적>

| 과정 및 반 | | 대 상 | 기간 | 계 획(명) | 실적(명) | 비고(%) |
|-------------|-------------------|-------------------------|--------|--------|--------|-------|
| 통일 교육 전문 과정 | 통일교육전문위원반 | 통일교육전문위원(연찬) | 3일 | 250 | 201 | 80 |
| | | 통일교육전문위원(신규위원) | 5일 | 100 | 99 | 99 |
| | 평통자문위원반 | 민주평통자문위원(신규위원) | 1일 | 350 | 328 | 94 |
| | | 민주평통자문위원(홍보위원) | 3일 | 150 | 219 | 146 |
| | 사회교육반 | 사회교육기관 강사 | 3일 | 180 | 116 | 64 |
| | | 사회교육기관장 | 3일 | 45 | 24 | 53 |
| | | 민방위교육강사 | 3일 | 90 | 89 | 99 |
| | 학교교육반 | 학교교사 | 3일 | 1,170 | 1,661 | 142 |
| | |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 3일 | 270 | 251 | 130 |
| | | 대학교수 | 3일 | 180 | 179 | 99 |
| | 공직자반 | 관리직공무원(2-4급) | 3일 | 80 | 48 | 60 |
| | | 읍·면·동장 | 3일 | 270 | 206 | 74 |
| | | 정훈장교 | 3일 | 135 | 130 | 96 |
| | | 이탈주민보호담당관 | 3일 | 180 | 136 | 76 |
| | 통일직무반 | 통일부공무원 | 5일 | 50 | 20 | 40 |
| 소 계 | | 1-5일 | 3,500 | 3,707 | 106 | |
| 남북교류협력과정 | 방북예정자반 | 북한방문예정자 | 1일 | 4,560 | 3,550 | 79 |
| | 관광도우미반 | 금강산관광도우미(신규) | 1일 | 40 | 119 | 289 |
| | | 금강산관광도우미(연찬) | 1일 | 400 | 230 | 58 |
| | 회담대표단 및 왕래행사 참가자반 | 정상회담, 이산가족방북단, 언론사사장단 등 | 1일 | 0 | 562 | |
| | 소 계 | | 1일 | 5,000 | 4,461 | 90 |
| 통일요원과정 | 행정요원반 | 4-5급 공무원 | 2주 | 360 | 225 | 63 |
| | 교육요원반 | 중등교사, 교육전문직 | 2주 | 360 | 318 | 88 |
| | 통일요원교육이수자반 | '98년이전통일요원교육이수자(행정) | 3일 | 200 | 139 | 70 |
| | | '98년이전통일요원교육이수자(교육) | 3일 | 100 | 80 | 80 |
| | 소 계 | | 3일-2주 | 1,020 | 762 | 75 |
| 특별과정 | 정부관련기관간부반 | 정부관련기관간부 | 3일 | 45 | 38 | 84 |
| | 사회단체간부반 | 노동조합간부 | 3일 | 180 | 40 | 22 |
| | | 종교단체간부 | 2일 | 45 | 28 | 62 |
| | | 여성단체간부 | 2일 | 135 | 69 | 51 |
| | 통일단체간부반 | 통일관련단체간부 | 2일 | 200 | 135 | 68 |
| | 대학생반 | 북한학수강생, 학생회간부 | 3일 | 360 | 256 | 71 |
| | 방송국 PD·작가반 | 방송국 PD·작가 | 2일 | 45 | 0 | |
| | 자원교육반 | 자원(自願)교육자 | 1-2일 | 370 | 2,308 | 624 |
| | 학부모특별연찬반 | 서울시(초중고)학부모 | 1일 | 0 | 2,995 | |
| | 전국 시도 교육감 | 시도 교육감 및 교육국장 | 1일 | 0 | 30 | |
| 소 계 | | 1-3일 | 1,380 | 5,899 | 429 | |
| 합 계 | | 1일-2주 | 10,900 | 14,829 | 137 | |
| 출장교육 | 국내 대외출장 | 각급교육청(교사 등), 지방자치단체 | 1일 | 20,560 | 15,744 | 77 |
| | 해외 순회교육 | 해외거주 동포 | 1일 | 540 | 277 | 51 |
| | 합 계 | | | 21,100 | 16,021 | 76 |
| 총 계 | | 1일-2주 | 32,000 | 30,850 | 97 | |

3.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지원

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시범학교 23개교(초등학교 8, 중학교 9, 고등학교 6)를 지원하였다. 이들 시범학교에 대하여는 북한 및 통일관련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생에 대해서는 하계방학 중 초청교육을 통해 통일교육 관련 발표회, 판문점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

<2000년도 통일교육시범학교 현황>

2000. 12. 31. 현재

| 지정기관 | 학교명 | 주 소 | 기간 |
|---------|-------------|----------------|--------------------|
| 서울시교육청 | 신정초등학교 | 서울 강서구 화곡2동 | 2000.3.1-2002.2.28 |
| | 양서중학교 | 서울 양서구 신월3동 | 2000.3.1-2001.2.28 |
| | 서서울정보산업고등학교 | 서울 구로구 수궁동 | 2000.3.1-2001.2.28 |
| | 광남고등학교 | 서울 광진구 광장동 | 2000.3.1-2001.2.28 |
| 부산시교육청 | 재송여자중학교 | 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 2000.3.1-2001.2.28 |
| | 신금초등학교 | 부산 북구 금곡동 | 1999.3.1-2000.2.28 |
| 대구시교육청 | 경서중학교 |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 2000.3.1-2002.2.28 |
| 인천시교육청 | 제물포고등학교 | 인천 중구 전동 | 2000.3.1-2002.2.28 |
| 광주시 교육청 | 하남초등학교 | 광주 광산구 하남동 | 2000.3.1-2002.2.28 |
| | 광주무등중학교 | 광주 동구 소태동 | 2000.3.1-2002.2.28 |
| 대전시교육청 | 유성고등학교 | 대전 유성구 구암동 | 2000.3.1-2001.2.28 |
| 울산시교육청 | 명덕여자중학교 | 울산 동구 일산동 | 2000.3.1-2001.2.28 |

| 지정기관 | 학교명 | 주 소 | 기간 |
|--------|----------|-----------------|------------------------|
| 경기도교육청 | 파주갈현초등학교 |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 2000.3.1- 2002.2.28 |
| 강원도교육청 | 원통초등학교 |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1리 | 1999.3.1- 2001.2.28 |
| 충남교육청 | 금산고등학교 |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 2000.3.1- 2001.2.28 |
| 전북교육청 | 전주농업고등학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 1999.3.1- 2001.2.28 |
| | 부안영전초등학교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 2000.3.1- 2002.2.28 |
| 전남교육청 | 운남초등학교 |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 2000.3.1- 2002.2.28 |
| 경북교육청 | 상주합창초등학교 | 경북 상주시 합창읍 구향리 | 2000.3.1- 2002.2.28 |
| | 청도매전중학교 |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 2000.3.1- 2002.2.28 |
| 경남교육청 | 거제옥포중학교 | 경남 거제시 옥포2동 | 2000.3.1- 2001.2.28 |
| | 남해중학교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 2000.3.1- 2001.2.28 |
| 제주교육청 | 애월중학교 |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 2000.3.1- 2002.2.28 |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통일교육 장학자료인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를 각급 학교용(초·중·고)으로 발간하여 전국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자료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변화상과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학생의 마음가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00년 11월 17일에는 「전국교육감 통일교육 특별 연찬회」를 개최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12월 21일에는 「시·도 통일교육담당 장학관(사) 연찬회」를 통해 정부의 통일교육지침 설명 및 통일교육담당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나. 대학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1) 대학통일문제연구소 지원

정부는 대학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연구분위기를 조성·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대학통일문제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2000년 12월말 현재 전국 83개 대학

에 관련 연구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각 대학 통일문제연구소는 통일문제 학술 세미나 개최, 북한학 강좌 교재 개발, 학생들의 통일문제 관련 발표와 토론회 등을 주관하고 있다.

통일문제 학술세미나는 통일문제연구소의 기본사업으로 정착되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과 대학생들의 통일의식 함양 등 대학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한학과의 설치 확대를 위해 북한학 강좌 교재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학부에 북한학과의 설치된 대학은 고려대, 관동대, 동국대, 명지대, 선문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통일문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81년 16개 대학에 1,9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초로 하여 매년 지원을 계속해 왔다. 1999년에는 50개 대학에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0년에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지원 축소방침에 따라 규모가 대폭 축소된 44개 대학에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학생발표·토론회는 지도 교수 책임하에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대학사회내 건전한 통일의식의 함양과 참여도를 제고하여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소장들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남북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자료의 교환으로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주최하는 워크숍이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0년에는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관계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대 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 현황>

(2000. 12. 31. 현재)

| 대학 | 연구소명 | 소장 | 대학 | 연구소명 | 소장 |
|----------|---------|-----|-------|--------|-----|
| 강릉대 | 통일문제 | 김건석 | 동의대 | 법정 | 하철영 |
| 강원대 | 사회과학 | 홍성렬 | 명지대 | 사회과학 | 조병륜 |
| 건국대 | 민족통일 | 양병희 | 목포대 | 통일문제 | 서창호 |
| 경기대 | 민족문제 | 노태구 | 배재대 | 통일문제 | 김혁동 |
| 경남대 | 극동문제 | 서대숙 | 부산대 | 한국민족문화 | 채상식 |
| 경북대 | 평화문제 | 엄재호 | 부산외대 | 국제관계 | 김종현 |
| 경산대 | 평화전략 | 권기수 | 상명대 | 통일문제 | 조성대 |
| 경상대 | 통일문제 | 남궁근 | 상지대 | 사회과학 | 공재욱 |
| 경성대 | 사회과학 | 공보경 | 서강대 | 동아 | 정인재 |
| 경원대 | 사회과학 | 이화숙 | 서경대 | 통일문제 | 전신욱 |
| 경희대 | 국제평화 | 손재식 | 서울대 | 사회과학 | 권태환 |
| 고려대 | 평화 | 조정남 | 서울시립대 | 법률행정 | 박용찬 |
| 관동대 | 동북아평화 | 유삼열 | 서원대 | 사회과학 | 서규선 |
| 국민대 | 사회과학 | 문태운 | 선문대 | 평화사상 | 박홍순 |
| 군산대 | 현대이념 | 고용권 | 성균관대 | 사회과학 | 양종희 |
| 단국대 | 정책과학 | 김성윤 | 성신여대 | 사회과학 | 우명동 |
| 대구대 | 사회과학 | 김연기 | 세종대 | 통일문제 | 김영식 |
| 대구효성카톨릭대 | 통일문제 | 이학수 | 숙명여대 | 통일문제 | 이창신 |
| 대전대 | 동북아 | 지길홍 | 순천대 | 사회과학 | 김인선 |
| 동국대 | 사회과학연구원 | 강성윤 | 순천향대 | 사회과학 | 문제우 |
| 동신대 | 민족통일 | 최영표 | 숭실대 | 사회과학 | 서병훈 |
| 동아대 | 사회과학 | 박동국 | 신라대 | 국제지역 | 이병화 |

| 대학 | 연구소명 | 소장 | 대학 | 연구소명 | 소장 |
|-------|--------|-----|------|--------|-------|
| 아주대 | 사회과학 | 김영래 | 조선대 | 동북아문제 | 이창헌 |
| 안동대 | 사회과학 | 손진상 | 중부대 | 평화통일 | 이부훈 |
| 안양대 | 복지행정 | 송준호 | 중앙대 | 민족통일 | 이상만 |
| 여수대 | 통일문제 | 류명걸 | 진주교대 | 초등교육 | 조기제 |
| 연세대 | 통일 | 민성길 | 창원대 | 사회과학 | 주정연 |
| 영남대 | 통일문제 | 김태일 | 청주대 | 국제협력 | 윤만근 |
| 영산대 | 지역통상 | 홍성원 | 충남대 | 통일문제 | 조명현 |
| 용인대 | 인문사회과학 | 전도웅 | 충북대 | 사회과학 | 강형기 |
| 우석대 | 한국정치 | 김영선 | 한국외대 | 사회과학 | 김만기 |
| 울산대 | 사회과학 | 이은우 | 한남대 | 사회과학 | 이봉철 |
| 원광대 | 통일문제 | 김용욱 | 한림대 | 한림과학 | 현승중 |
| 이화여대 | 한국여성 | 장길화 | 한서대 | 인문사회과학 | 송광성 |
| 인제대 | 인문사회과학 | 이행 | 한성대 | 동아시아 | 이우관 |
| 인천대 | 평화통일 | 정광하 | 한세대 | 통일문제 | 강명희 |
| 인천교육대 | 통일교육 | 이근철 | 한신대 | 평화 | 김창락 |
| 인하대 | 국제관계 | 백광일 | 한양대 | 통일정책 | 최성철 |
| 전남대 | 아태 지역 | 임채운 | 호남대 | 인문사회과학 | 황오연 |
| 전북대 | 사회과학 | 박세영 | 호서대 | 통일문제 | 채경석 |
| 전주대 | 사회과학 | 박창수 | 홍익대 | 동서문화 | 전 웅 |
| 제주대 | 동아세아 | 김부찬 | | |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숍 개최 현황>

| 연도 | 일자 | 발표주제 | 참여교수 |
|------|---------------------------------|--|------|
| 1995 | 11.10-11.11 (경북 경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과 외교 · 세계화시대의 대학생 통일교육방향 · 세계화시대의 북한경제와 변화전망 · 북한문제강좌 교재개발 · 통일문제 교재개발 | 68명 |
| 1996 | 11.15-11.16 (통일교육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 김정일체제하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전망 ·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 북한연구의 방법 및 현황과 문제점 · 대학통일문제연구소와 협의회의 활성화방안 · 한반도 미래와 통일 | 60명 |
| 1997 | 8.25-8.26 (전북 무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통일정책의 회고와 전망 · 북한경제의 현실과 남북 경제협력 · 통일국가의 정부형태 · 미·중의 대남북한 정책 · 민족화합과 사회통합의 방향 · 통일한국의 영역과 위상 | 70명 |
| 1998 | 12.16 (서울 프레스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의 전략환경과 한반도 문제 · 북한의 대내외 정책 · 주변국 관계와 한국의 통일정책 · 북한의 남북한 통일정책 ·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과 통일 · 미국의 동아·태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 | 70명 |
| 1999 | 8.20~8.21 (전북 군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시대의 지방정부 · 통일을 위한 사회통합과 자치단체의 역할 · 남북 교류협력의 새 패턴 · 동서독, 남북예멘의 지자체 협력 사례 · 중국과 대만간의 지방정부 및 민간교류의 현황 · 서해안 지역개발과 한·중·북간의 지자체 협력 · 한반도 연안어업과 어장 및 양식여건 · 남북 지역단체간의 결연과 어업 협력방안 | 100명 |
| 2000 | 8.20~8.21 (금강산봉래호 선상 회의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정부의 통일방안 비교 · 정상회담후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 ·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방안 · 남북화해시대와 시민사회화 역할 | 41명 |

2)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정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응모논문은 내외전문가의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입상자에게는 통일부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선논문은 대학생 통일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도서관 및 통일문제연구소 등에 배포·활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상자에 대해 1987년부터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한 해외 연수를, 1998~1999년에는 판문점과 백령도 등 남북분단의 현장을, 그리고 2000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 현장인 금강산견학을 실시하였다.

<대 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현황>

| 연도 | 권장 주제 | 응모자 | 입상자 |
|------|---|-----------------------------|----------------------|
| 19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해 · 교류협력과 민족공동체 형성 · 북한의 변화와 개방화 여건 조성 · 분단국 통일이 우리의 통일에 주는 시사점 · 세계화와 통일대비교육 방안 · 주변4국과 통일문제 · 북한의 대미 · 일관계와 우리의 대응방안 | 54개 대학 100명 | 9명 |
| 199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세 변화가 남북관계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 · 북한 경제난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전망 ·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방향 ·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 | 56개 대학 109명 | 9명 |
| 199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정부의 대북정책 발전방향 · 남북화해 · 협력의 걸림돌과 그 제거방안 ·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 강구방안 ·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실천적 해결방안 · 사이버 세대의 의식구조 특성과 통일교육활성화 방안 ·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 · 남북한 관계분석과 관계 개선방안 | 64개 대학 121명 (대학원생 포함) | 9명 (2인공동 입상1편) |
| 199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북한의 관계개선과 남북관계 전망 · 남북한 신세대 의식구조 동질화 방안 · 정보화시대의 남북간 협력방안 · 대학생의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방향 · 남북한의 정치 · 군사부문 신뢰구축 방안 · 남북관계 개선과 정경분리 원칙 ·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한 남북농업 협력방안 | 49개 대학 87명 | 9명 (2인공동입상 1편) |
| 2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운송체제 구축방안 · 북한의 인터넷 구축과 남북한 사이버 공동체 건설 · 동북아 6개국의 한반도 통일지원 협의기구 · 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 정책에 관한 연구 · 사이버 통일교육의 추진방향 및 활성화 대책 · 탈북주민의 난민지위 획득에 관한 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하여 · 물리적 공간/사이버 공간의 매체로서 놀이성을 통한 북한 사회문화 통합 방안 · WBI를 활용한 초등학교 통일교육 추진방향 | 42개 대학 62명 | 11명 (6명공동입상) |

다. 사회통일교육의 지원

정부는 기존의 정부 주도적인 통일교육에서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소관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통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민간통일교육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설립준비과정을 거쳐 2000년 12월 22일 통일교육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법령에서 정해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통일교육의 지원 차원에서 전국의 11개 북한관의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부산, 광주, 인천, 청주, 창원, 제주, 고성, 양구, 철원, 임진각, 오두산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북한관의 통일교육장으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북한관련 전시자료 제공·유지·보수, 각종 이벤트행사 지원(학생통일글짓기대회, 각종 기획전시회 물품제공, 북한실상 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관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통일교육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주·인천 소재 북한관에는 북한관련 특수자료를 소장하고 노동신문 등 북한간행 시사자료를 비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북 한 관 현 황 >

(2000. 12. 31. 현재)

| 지역 | 위 치 | 개관일 | 운영기관 | 전시내역 | 휴관일 |
|-------|--|-----------|-----------------------|-----------------------|----------|
| 부산 |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 '89.1.30 |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 판넬: 105점 실물: 723점 | 연중 무휴 |
| 인천 |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내) | '94.12.15 |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 판넬: 48점 실물: 650점 | 월요일 |
| 광주 | 광주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내) | '89.3.10 | 통일교육 전문위원 광주협의회 | 판넬: 89점 실물: 742점 | 월요일 |
| 충북 청주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내) | '93.2.23 | 청주시 우암 어린이회관 | 판넬: 60점 실물: 727점 | 월요일 |
| 제주 |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68-2 (탐라자유회관내) | '93.12.18 |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 판넬: 37점 실물: 911점 | 연중 무휴 |
| 강원 고성 |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 '88.6.15 | 통일관광 (주) | 판넬: 42점 실물: 612점 | 연중 무휴 |
| 임진각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 '91.1.25 | (주) 임진각 | 판넬: 49점 실물: 543점 | 연중 무휴 |
| 강원 철원 |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내) | '90.12.15 | 철원군청 | 판넬: 44점 실물: 606점 | 화요일 |
| 강원 양구 |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편지볼지구) | '96.8.14 | 양구군청 | 판넬: 55점 실물: 804점 | 화요일 |
| 오두산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8 (통일전망대내) | '92.9.8 | 동화진흥 (주) | 판넬: 50점 실물: 1,197점 | 연중 무휴 |
| 경남 창원 |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회관내) | '98.4.29 |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 판넬: 133점 실물: 687점 | 월요일 |

4. 통일교육자료 개발

정부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남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통일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2000년도에 개발·보급된 주요자료를 보면, 첫째, 각급 사회교육기관과 강의자가 교육시간에 따라 강의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통일교육 표준강의전개안」을 발간(3,000부)하였다. 이 강의전개안은 국가·지방공무원교육원, 교원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민주평통협의회, 시민사회단체, 통일교육 강사 등에 배포하였다.

둘째,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알기 쉬운 소책자인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 보기」를 발간·배포(10,000부)하였다. 이 책은 북한 및 통일문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을 정리하고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주요한 흐름과 쟁점사항들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 포켓판의 북한방문 안내책자인 「북한방문 길라잡이」를 발간(5,000부)하여 북한 방문자가 북한에 대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남북한이 함께 펼쳐갈 미래상을 담은 영상자료인 「새천년 함께 가는 남과 북」을 제작하였다. 동 영상교재는 학교 및 여러 사회교육기관에 1,500개를 배포하였으며, 영어판으로도 제작하였다.

다섯째, 사회통일교육의 주요 내용과 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담은 「사회통일교육지침서」를 발간(2,000부)하여 각급 사회교육기관과 통일교육 강사요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 지침서는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을 강의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법과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각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기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5.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구축·운영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통일교육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3

일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를 개설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는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통일교육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의 특징과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통일·북한 관련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정규 통일교육과정으로 편입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N세대라 불리며 통일에 무관심하기 쉬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서비스를 위해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콘텐츠(웹 만화, 북한 애니메이션, 가상 북한여행 등)를 싣고 있다.

셋째, 특정어휘(Key Word)와 디렉토리(Directory)에 따라 외부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아주는 통일/북한 정보검색 포털서비스(Por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북한방문에 관한 체계화된 정보자료 제공으로 방북시 도움을 주기 위한 북한방문 종합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일선 통일교육 활성화에 유용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통일문제 연구소 등의 학술회의 일정 및 발표 논문 등 대학의 통일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그밖에도 통일교육 커뮤니티(Community) 형성공간 제공, 통일교육 이수자의 인적사항 및 통계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통일교육 이수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제2절 대북정책 홍보 적극 전개

1. 수요자 지향형 홍보 실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국민들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내용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대북정책 및 통일 추진과 관련, 홍보 대상자이자 수요자인 국민들이 계층·세대에 따라 그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발굴하고, 홍보방법과 매체활용에 있어서도 다각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가 아니라 국민들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PC통신, 인터넷, E-mail을 적극 활용하였다. 특히 사이버 상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특정 현안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일 수 있는 전자공청회 등을 개최하였다.

2000년 한해 동안 「전자공청회」는 PC통신과 인터넷에서 4차례 개최하였으며, 총 접속건수는 267,678건에 달했다.

전자공청회를 통해 인터넷과 PC통신의 주된 이용자층인 신세대들에게 대북정책 및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성과를 전달하고, 의견 교환 및 토론을 통해 정부와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PC통신 전자공청회 개최현황>

| 주 제 | 시 기 | 접속건수 |
|------------------------------|----------|---------|
|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간 평화·화해·협력 | 1998. 5 | 3,104 |
|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나요? | 1998. 7 | 6,466 |
| 남북교류협력과 금강산 관광사업 | 1998. 10 | 6,000 |
| 대북정책 및 경수로 재원부담 | 1998. 12 | 8,034 |
| 대북포용정책 어떤 성과가 있나요? | 1999. 3 | 10,612 |
| 내가 만약 북경당국회담 대표라면 | 1999. 7 | 18,530 |
| 쉬리와 페리 이야기 | 1999. 10 | 19,272 |
| 남북실상 바로 알기 | 2000. 2 | 20,848 |
| 남과 북, 제로섬? 플러스 섬? | 2000. 5 | 19,712 |
| 남북정상회담 | 2000. 9 | 111,011 |
| 남북관계 생각해 봅시다 | 2000. 12 | 116,107 |

한편, 대북정책 관련 각종 자료도 세대별·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제작되었다. 남북관계 전문가 대상으로는 상세한 정책해설자료집을, 일반국민 대상으로는 시각적·감성적 측면을 최대한 활용한 브로슈어 형식의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홍보 자료를 발간·배포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1999년에 만화 「점프」, 「빼리생각」을 발간한 데 이어, 2000년도 웹(web)만화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을 개발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급하였다. 웹만화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공간적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개발된 새로운 형식의 홍보·교육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교육홍보자료 발간 현황>

| 자 료 명 | 연도 | 발간부수 | 형태 |
|--------------------------------------|------|---------|----------|
|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 1998 | 442,000 | 팸플릿, 리플릿 |
|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 ” | 22,500 | 팸플릿 |
|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 | 5,000 | 팸플릿 |
| 「남북이산가족교류협력 실무안내」 | ” | 500 | 책 자 |
| 「남북이산가족교류협력 절차안내」 | ” | 10,000 | 리플릿 |
| 「국민의 정부-통일교육기본방향」 | ” | 6,500 | 책 자 |
| 「통일문답 100」 | ” | 16,000 | 책 자 |
| 「'98 통일문제 이해」 | ” | 11,000 | 책 자 |
| 「'98 북한 이해」 | ” | 11,000 | 책 자 |
| 「북한 어린이의 교육과 생활」 | ” | 100 | 책 자 |
| 「'99통일문답」 | 1999 | 20,000 | 책 자 |
| 「'98 통일백서」 | ” | 6,000 | 책 자 |
| 「통일부 30년사」 | ” | 1,200 | 책 자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 ” | 500 | 리플릿 |
| 「'99 통일문제 이해」 | ” | 20,000 | 책 자 |
| 「'99 북한문제 이해」 | ” | 20,000 | 책 자 |
| 「남북경제협력사업 실무안내」 | ” | 2,000 | 책 자 |
| 국민의 정부 출범 1주년 - 「대북정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 | 5,000 | 팸플릿 |
| 대북정책 홍보만화 「점프」 | ” | 20,000 | 책 자 |
| 대북정책 홍보만화 「뽀리생각」 | ” | 35,000 | 리플릿 |
| 대북정책 기본해설서 | ” | 8,600 | 책 자 |
| 포용정책 문답집 「포용정책은 안보와 협력입니다」 | ” | 44,000 | 책 자 |
| 「2000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 | 20,000 | 책 자 |

| 자 료 명 | 연도 | 발간부수 | 형태 |
|--|------|---------|------|
| 대북정책 2주년 실적자료 「대북정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00 | 11,500 | 팸플릿 |
| 대북정책 2주년 실적자료 「For the Future」 | ” | 25,000 | 브로슈어 |
| 「2000 통일백서」 | ” | 6,500 | 책 자 |
| 「2000 통일문제 이해」 | ” | 20,000 | 책 자 |
| 「2000 북한 이해」 | ” | 20,000 | 책 자 |
| 남북정상회담 해설자료 「우리 함께」 | ” | 29,500 | 책 자 |
| 남북정상회담 해설자료 「새날이 밝았다」 | ” | 40,000 | 브로슈어 |
|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 및 주요 현안 문제 관련 질의·응답 자료」 | ” | 30,000 | 책 자 |
| 「남북이산가족교류 어떻게 추진되나」 | ” | 30,000 | 브로슈어 |
|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 | ” | - | 웹만화 |
| 「새천년 통일문제 새로보기」 | ” | 10,000 | 책 자 |
| 「북한방문 길라잡이」 | ” | 5,000 | 책 자 |
| 「사회통일교육지침서」 | ” | 2,000 | 책 자 |
| 「사회통일교육 표준강의전개안」 | ” | 3,000 | 책 자 |
| 「2001 통일교육기본계획」 | ” | 1,500 | 책 자 |
|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 | ” | 29,000 | 책 자 |
| 「새천년 함께 가는 남과 북」 | ” | 1,500 | 영상자료 |
|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 ” | 100,000 | 책 자 |
|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 | 30,000 | 책 자 |

정부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진전과 더불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시청각자료 제작·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녹음해설 테이프를 제작하였고, 대북정책 추진성과와 남북관계 변화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한편, 1996년 12월 개통된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는 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 및 북한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국·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0년 말 현재까지 약 4년간의 이용객은 총 10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0년 한해 동안에만 77만여 건이 접속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2000년에 달라진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에 맞추어 통일부 홈페이지의 대북정책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과 국민 여론 수렴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코너가 신설되어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받음은 물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의견 개진이 가능해졌다.

또한 「주요질의」(주요 궁금사항에 대한 답변), 「인터넷 전자공청회」(특정 주제에 대한 토론), 「감사관 핫라인」(감사 관련 의견 제시) 등의 코너가 신설되어, 기존의 「통일대화방」(통일문제 관련 의견 제시 및 문의), 「장관과의 대화」(통일부장관에 직접 의견 제시 및 건의) 코너와 함께 국민과 정부간 대화 통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통일갤러리」 코너에는 2000년에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 및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주요 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며, 국민 누구나 자료로서 저장·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통일문제와 북한자료·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북한자료센터」(<http://unibook.unikorea.go.kr>)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북한자료와 통일문제관련 자료에 대한 목록 및 내용 검색이 가능하며, 북한자료센터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북한영화 상영회 및 북한실상설명회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1998년 12월 개통된 이래 지난 1년간 총이용자수는 45만7천여명에 이른다.

그리고 남북회담에 관한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인 「남북회담사료」(<http://dialogue.unikorea.go.kr>)도 운영하고 있다. 「남북회담사료」에는 1970년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남북간에 진행된 남북회담사, 남북합의서,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비교 등 각종 남북회담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국문과 영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한편, 2000년에는 전국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통일부 심볼로그(Symbol Logo)를 공모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통일부 심볼로그는 태극 모양이 변형된 형태로, 남북의 역동적 교류를 표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정부의 통일 의지에 대해 더욱 친근하게 느끼는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되고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 메뉴 구성>

| 새소식 | 남북관계현안 | 민원마당 |
|---|--|--|
| o 보도자료 o 공지사항 o 일일북한방송 o 주간북한동향 o 남북관계일일동향 o 남북교류협력동향 | o 대북포용정책 o 대북지원 o 북한이탈주민지원 o 남북교류협력 o 대북경수로지원 o 기타 | o 장관과의 대화 o 통일대화방 o 행정정보공개 o 감사관 Hot line o 사이버 통일포럼 o 주요 질의(FAQ) |
| 알기쉬운북한 | 자료실 | 남북정상회담 |
| o 정치, 군사, 대외관계, 변화가능성 o 경제, 주민생활 o 사회, 교육, 문화, 예술 o 달라진 남북의 언어 o 참고자료 | o 통일부 유관법규 o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o 남북관계주요문서 o 통일부 발간물 o 신진연구자 논문집 o 독일통일 자료목록 o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o 보도자료 o 국민의견수렴 |
| 통일갤러리 | 통일부 안내 | 북한자료센터 |
| o 기록사진 o 북한의 산하 o 북한주민의 생활 o 한민족의 삶 o 한민족의 애창가요 | o 조직 및 업무 o 전화번호 o 통일부 약도 o 통일부 허가법인현황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
| | | 통일교육센터 |
| | | 남북회담자료 |
| | | 검색 |
| | | 관련사이트 |

2. 대북정책 현안 설명 강화

2000년에는 대북정책 및 통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신속하게 제작하여 배포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대북정책 및 통일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었다.

먼저 남북관계 관련 중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통일속보」와 E-mail 자료를 발간하였다.

<2000년 통일속보 및 E-mail 자료 발간 현황 >

| 자료명 | 형식 | 시기 |
|--|--------|-----|
|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해설자료 | 속보 | 1월 |
|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관련 해설자료 | 속보 | 3월 |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 속보 | 4월 |
|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 해설 | 속보 | 5월 |
| 남북정상회담 결과 해설자료 | 속보 | 6월 |
|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해설자료 | 속보 | 7월 |
|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 및 주요 현안문제 관련 질의·응답 자료 | E-mail | 7월 |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결과 해설자료 | 속보 | 7월 |
| 평화와 도약의 한반도 시대 | E-mail | 8월 |
|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결과 해설자료 | 속보 | 9월 |
| 김용순 특사 서울방문 결과 해설 | E-mail | 9월 |
| 최근 남북관계 이렇습니다! | E-mail | 9월 |
| 제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결과 해설 | E-mail | 9월 |
| 대북 식량차관 및 WFP를 통한 지원 | E-mail | 9월 |
| 제3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해설자료 | E-mail | 9월 |
|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결과 해설 | E-mail | 10월 |
|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 관련 해설자료 | 속보 | 11월 |
|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 E-mail | 11월 |
|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결과 해설자료 | 속보 | 12월 |
|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E-mail | 12월 |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식의 우려감도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설명도 강화하였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질의응답자료집 「남북공동선언 조항별 해설 및 주요 현안문제 관련 질의·응답 자료」, 「대북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을 발간·배포하였다.

한편, 현안 설명 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배포하기 위한 일환으로 E-mail 배포시스템 구축에 주력하였다. 현안 설명 자료를 E-mail을 통해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2000년 말 현재 약 1만8천여명의 교사, 통일문제 전문가 등에게 E-mail로 자료를 수시 배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E-mail 배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PC통신에 「통일·북한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주간 북한동향,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보도자료, 북한영화 상영 안내, 통일정책관련 자료 및 최근 통일관련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 및 통일 관련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라디오와 TV 등 방송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2000년에는 정부 당국자가 각종 시사 프로그램 및 통일 관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며, KBS사회교육방송을 통해 북한주민 및 중·러지역 동포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노력도 계속해 왔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등 회담행사와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 현장에 프레스센터를 개설·운영하여 언론 보도 활동을 지원하였다.

3. 국제사회 및 해외동포 대상 홍보 활성화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환경 조성에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 힘써 왔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해설자료 등을 영·일·중·노어 등 주요 외국어로 발간하였으며,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국의 주요기관 및 여론 지도층에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1998년 7월

격월간으로 시작한 영문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을 1999년부터는 월간으로 발간 회수를 늘려 외국정부기관 및 저명학자, 해외공관 및 동포사회 지도층에게 배포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통일한국」과 「Korea and World Affairs」를 해외동포와 외국연구기관·여론지도층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 민간단체 해외홍보자료 발간 현황 >

2000. 12. 31 현재

| 기관명 | 연 도 | 간기 | 자 료 명 | 부 수 |
|-----------|---------|----|--------------------------|----------|
| 평화문제연구소 | 1989~현재 | 월간 | 통일한국 | 매호 7,000 |
| 남북평화통일연구소 | 1981~현재 | 계간 | Korean and World Affairs | 매호 1,800 |

< 국제사회 대상 홍보자료 발간 현황 >

2000. 12. 31 현재

| 구 분 | 연 도 | 형 태 | 자 료 명 | 부 수 | 비 고 |
|-----|-------|-----|--|---------|------|
| 정기 | 1998~ | 월간 | Korean Unification Bulletin | 매호2,000 | " |
| 부정기 | 1993 | 팸플릿 | Korea's Unification Policy | 15,000 | " |
| | | 리플릿 | Question of Korea Unification | 25,000 | 영·일 |
| | 1994 | 팸플릿 | A New Track for Unity | 2,000 | 영어 |
| | | 리플릿 | Coming Together as One | 25,000 | " |
| | 1995 | 단행본 | A New Track for Unity등 2종 | 1,500 | " |
| | 1997 | 팸플릿 | An Analysis of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 4,000 | " |
| | | | What We Shall Do for Our Unification | 6,000 | " |
| | 1998 | 팸플릿 |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 8,000 | " |
| | | | 韓國新政府の 對北韓政策 | 9,000 | 일어 |
| | | | 韓國新政府 對北韓政策 | 4,000 | 중어 |
| | | | Politica hacia Corea del Norte del Gobierno del Pueblo | 3,500 | 스페인어 |
| | 1999 | 단행본 | Kim Dae-jung's Policies on North Koea | 2,000 | 영어 |
| | | | Policy towards North Korea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3,000 | " |
| | | 팸플릿 | 平和と 和解・協力のための 對北韓政策 | 2,000 | 일어 |
| | 2000 | 단행본 | Together As One | 5,000 | 영어 |
| | | | 一つに なって | 2,000 | 일어 |
| | | | 携手并進 邁向統一 | 2,000 | 중어 |
| | | | ВМecTe как ОДИ | 1,000 | 노어 |
| | | 팸플릿 | The 1st South-North Ministerial Talks | 3,000 | 영어 |

나. 해외동포에 대한 통일홍보

560여만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해외동포 사회의 이해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15개국 47개 동포 신문사·방송사에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대북정책의 의미와 정당성 등을 동포사회에 알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미주지역 동포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미주지역 통일문제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00년에는 제10차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를 23개국 140여명의 해외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10주년을 맞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하였으며, 제8차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미국 중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카고, 밀워키에서 개최하였다.

<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개최 현황 >

2000. 12. 31 현재

| 구 분 | 개최일 | 장 소 | 참가인원 | 대 주 제 |
|------|---------------|--------------|--------------|----------------------------------|
| 제1차 | 1991.9.13 | 서 울 | 15개국 262명 |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
| 제2차 | 1992.8.18-19 | 러시아 사할린 | 11개국 154명 |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의 한반도 |
| 제3차 | 1993.9.20-23 | 서 울 | 17개국 336명 |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
| 제4차 | 1994.8.5-7 | 중국 연변 | 10개국 25명 |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
| 제5차 | 1995.8.16-17 | 서 울 | 14개국 650명 | 통일·번영의 한민족시대 전망 |
| 제6차 | 1996.11.21-23 | 일본 도쿄 | 13개국 250명 | 한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해 |
| 제7차 | 1997.9.5-6 | 서 울 | 16개국 300명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
| 제8차 | 1998.8.17-19 | 미국 샌프란시스코 | 10개국 120명 |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해외 동포사회의 역할 |
| 제9차 | 1999.10.1 | 서 울 | 6개국 100명 |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 |
| 제10차 | 2000.6.17 | 독일 베를린 | 23개국 140명 | 독일통일 10년과 한반도 통일 |

<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 개최 현황 >

2000. 12. 31 현재

| 구 분 | 개최일 | 장 소 | 참가인원 | 대 주 제 |
|-----|-----------------|----------------------|-------------|----------------------------|
| 제1차 | 1993.11.5-6 | 미국 L.A | 150명 | 새로운 국제정세하의 문민 정부의 통일과제 |
| 제2차 | 1994.12.1-2 | 미국 뉴욕 | 150명 | 동북아시아 신질서와 향후 남북한 관계 |
| 제3차 | 1995.12.7-8 | 미국 L.A | 200명 | 광복 50년, 통일과 한민족의 미래 |
| 제4차 | 1996.8.29 | 캐나다 토론토 | 120명 | 신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통일 |
| 제5차 | 1997.10.6-9 | 미국 시애틀, 캐나다 몬트리올 | 100명 85명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및 대책방향 |
| 제6차 | 1998.8.20-22 | 캐나다 밴쿠버 | 110명 | 남북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 |
| 제7차 | 1999.10.28-11.3 | 미국 달라스, 휴스턴, 호놀룰루 | 560명 |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현황 |
| 제8차 | 2000.12.5-7 | 미국 시카고, 밀워키 | 210명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 계 현황과 전망 |

제3절 국민의견 수렴 및 민간통일활동 지원

1. 여론조사 실시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주요 계기별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2000년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을 통일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 2주년, 베를린 선언, 남북정상회담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때를 기준으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도 여론조사 실시 결과>

2000. 12. 31 현재

| 구분 | 일자 | 대 상 | 주 요 내 용 |
|----|------|-------------|--|
| 1차 | 2.29 | 일반국민 1,50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지지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2%가 지지 ○ 현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 최대성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간 인적교류의 확대’를 선정(29.1%) ○ 대북정책 추진 후 전쟁위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1%가 ‘감소되었다’고 응답 |
| 2차 | 3.13 | 일반국민 1,00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지지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0%가 지지 ○ 베를린 선언 내용 평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3.5%가 공감 ○ 특사교환시 우선적 협의사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이산가족 상봉실현’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35.4%) |
| 3차 | 6.18 | 일반국민 1,50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지지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7%가 지지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향후 최우선 정책추진 과제로 선정(52.4%) ○ 남북정상회담 평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7%가 성과 인정 - ‘남북정상간 만남 자체’를 최대성적으로 선정(43.0%) ○ 김정일의 서울방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7%가 적극 찬성하며 환영 |
| 4차 | 9.23 | 일반국민 1,00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정책 지지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6%가 지지 ○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룬 가장 큰 성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이산가족문제의 본격적 해결’(70.2%) ○ 대북 식량차관 제공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3%가 긍정적 지지 ○ 국군포로 및 남북자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문제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입장에 대해 65.3%가 공감 |

| 구분 | 일자 | 대 상 | 주요 조사내용 |
|----|-------|-------------|---|
| 5차 | 12.18 | 일반국민 1,00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대북 정책 지지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6%가 긍정적으로 지지 o 2000년 남북관계 최대성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58.3%) o 대북지원 규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여야 한다’가 55.4% o 남북관계 추진속도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3%가 ‘빠르다’고 응답 o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9%가 찬성 o 2001년도 중점추진과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28.0%) |

2. 자문기구 운영

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 종합, 평화통일 의식의 고취, 그리고 효율적인 통일정책 협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자문기구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통일고문회의규정」을 개정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통일고문회의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통일고문회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하였다.(1998.11.28)

1999년 5월 19일 새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의장 : 강원룡)는 통일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듣고 이를 통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활발히 노력하였다.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대구지역(9.1~2) 및 마산지역(9.28~29)에서 여론 수렴활동을 전개하였다.

2000년 11월 20일 조영식 신임 의장 등 29명의 통일고문을 위촉하여 통일고문회의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통일고문 명단>

2000.12.31 현재

| 성명 | 직책 |
|---------|--------------------------|
| 조영식(의장) |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
| 강만길 | 고려대 명예교수, 전 민화협 상임의장 |
| 강문규 |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
| 권오기 | 21세기평화재단 이사장, 전 통일부총리 |
| 김근 | 연합뉴스 사장,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
| 김수환 | 추기경 |
| 김종하 | 고합그룹 상임고문, 전 대한체육회장 |
| 김창국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 박권상 | 한국방송협회 회장 |
| 박영숙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13대 국회의원 |
| 박용성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 박종화 |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경동교회 당회장 |
| 서병식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 안무혁 | 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 14대 국회의원 |
| 오재식 | 월드비전 회장 |
| 이경숙 | 숙명여대 총장 |
| 이기옥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 이만신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 이병형 | 성우회 자문위원, 전 2군사령관 |
| 이상훈 | 재향군인회 회장, 전 국방부장관 |
| 이성립 | 한국예총 회장 |
| 이어령 | 이화여대 석좌교수, 전 문화부장관 |
| 이우정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14대 국회의원 |
| 이홍구 |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
| 장상 | 이화여대 총장 |
| 정광모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 조완규 | 한국생물산업협회 회장, 전 교육부장관 |
| 최명헌 | 전 노동부장관, 11·12대 국회의원 |
| 최영철 | 통일번영연구원 회장, 전 국회부의장 |

나. 통일정책 평가회의

정부는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통일정책평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위원회는 2000년 말 현재 15명으로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고 있으며, 매년 3월 일부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있다.

<2000년도 통일정책 평가위원 명단>

위촉기간: 2000. 3~2001. 2

| 성 명 | 직 책 |
|-----|------------------|
| 구영록 | 서울대 명예교수 |
| 권영빈 | 중앙일보 논설주간 |
| 남인숙 | 대구효성카톨릭대 여성학과 교수 |
| 백종천 | 세종연구소 소장 |
| 손봉숙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 안병준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양 건 | 한양대 법학과 교수 |
| 유세희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이상만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 장청수 | 대한매일 논설위원 |
| 전인영 |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 |
| 정천구 | 영산대 총장 |
| 조 형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 하영선 |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
| 황의각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다.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대북·통일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000년 말 현재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회담, 통일교육 등 6개 분과위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8월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명단>

(위촉기간: 2000.8~2001.7)

|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 북한정보 분과위 (8명) | 교류협력 분과위 (8명) | 인도지원 분과위 (7명) | 남북회담 분과위 (8명) | 통일교육 분과위 (7명) |
|------------------------------------|---------------------------|--------------------------------|------------------------------|--------------------------|--------------------------------|
| 전득주 (위원장 : 숭실대 통일정책 대학원장) | 홍승길 (위원장 : 관동대 교수) | 이장춘 (위원장 : 한국관광학회 회장) | 한태선 (위원장 : 한양대 교수) | 장달중 (위원장 : 서울대 교수) | 박찬세 (위원장 : 배재대 초빙 교수) |
| 권민웅 (경북대 교수) | 강성운 (동국대 교수) | 김경량 (강원대 교수) | 김영수 (서강대 교수) | 고유환 (동국대 교수) | 고정식 (배재대 교수) |
| 남찬순 (동아 일 보 논설위원) | 고일동 (한국개 발 원 연구위원) | 김혜원 (코리아헤럴드 논설위원) | 김종희 (일천만이산가족 재추위 사무국장) | 김구섭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김형석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
|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김길선 (월간민족통일 편집장) | 박양호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계획실장) | 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김재홍 (동아 일 보 논설위원) | 오재림 (숙명여대 교수) |

|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 북한정보 분과위 (8명) | 교류협력 분과위 (8명) | 인도지원 분과위 (7명) | 남북회담 분과위 (8명) | 통일교육 분과위 (7명) |
|-----------------------|--------------------------------|-----------------------------|---------------------------------|----------------------------|---------------------|
| 장명봉 (국민대 교수) | 서주석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 팀장) | 정영화 (서경대 교수) | 이종훈 (국회입법조사 관실 교육담 당관) |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 이수훈 (경남대 교수) |
|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 류길재 (경남대 교수) | 정진성 (서울대 교수) | 정안숙 (좋은벗들 사무 국장) | 윤덕희 (명지대 교수) | 최해림 (서강대 교수) |
| 좌승희 (한국경제연구 원장)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조동호 (KDI 북한경제 연구팀장) | 최대석 (동국대 교수) |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 |
| 하용출 (서울대 교수) |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 조명철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 | 장공자 (충북대 교수) | |
|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 | | | | | |
| 현인택 (고려대 교수) | | | | | |

3. 다양한 여론수렴 활동

정부는 국민여론조사와 정책자문·평가기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다.

2000년에도 남북관계 관련 각종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토의된 내용들과 연구논문·언론기고 등을 통해 제기된 제안 내용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장관급회담 등 계기 발생시마다 통일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여론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의 남북관계 보도내용을 주간, 월간 등의 단위로 가감 없이 종합해 관련대책 수립시에 반영하고 있다.

4. 민간통일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다양한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의 정책제언을 수렴하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통일관련 민간단체는 1980년대까지는 민족통일협의회 등 몇몇 단체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 단체들도 다수 생겨남으로써 민간분야 통일운동이 전문화·다양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들 민간단체의 활동은 광복 50주년·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을 계기로 한층 활발해졌고, 통일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확산시켜 대북식량지원 모금운동, 남북어린이교류, 통일마라톤대회, 통일작품현상공모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1998년 진보·보수·중도 등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결성됨으로써 범국민적 기반 위에서 민간통일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민간통일운동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

통일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들 중 통일부 허가법인은 2000년 12월말 현재 총 82개이며,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 허가법인 현황>

(2000. 12. 31 현재)

| 단 체 명 | 대표자 | 단 체 명 | 대표자 |
|--------------|-----|----------------|-----|
| 민족통일협의회 | 한양수 | 대한민국팔각회 | 최경석 |
| 민족문화통일회 | 최창순 |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 김형주 |
| 평화문제연구소 | 현경대 |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 이무용 |
| 민주통일촉진회 | 강명희 | 한국미래연구학회 | 신윤표 |
| 한민족세계선교원 | 조준상 | 한민족통일교육연구소 | 윤상덕 |
| 통일기념사업회 | 김동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 우강호 |
| 21세기통일준비운동본부 | 허태유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한완상 |
| 민족통일복음화운동본부 | 김규병 | 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단 | 이수성 |
|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 고정명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이우정 |
| 세계한민족평화통일협의회 | 김재천 | 민족화합운동연합 | 박영하 |
| 민족통일불교협의회 | 김태완 | 세계평화여성연합 | 정대화 |
|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 조동진 | 통일맛이 | 이재정 |
| 한민족통일촉진협회 | 양순임 | 평화통일복지협의회 | 김태유 |
|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 김학옥 | 평화통일교육성국민중흥회 | 유재진 |
| 21세기통일봉사단 | 박종근 | 민족통일연합중앙회 | 안광양 |
| 통일건국민족회 | 권천문 | 한국통일교육연구회 | 서인규 |
| 국민정신중흥회 | 이명규 | 범민족화합통일운동본부 | 박영록 |
| 대한기독교자유연맹 | 박태남 | 민족통일촉진회 | 서정일 |
|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 유종관 | 북한연구소 | 김창순 |
| 평화연구원 | 방희 | 한국발전연구원 | 안무혁 |
| 한우리연구원 | 신창민 | 한민족통일연구중앙협의회 | 정성욱 |
| 통일시대연구소 | 이종률 | 다물민족연구소 | 박광순 |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이장희 | 우리연합 | 최민자 |
| 한국청년정책연구소 | 이경훈 | 통일경제연구협회 | 김기환 |
| 백천통일시대연구원 | 홍성률 | 한국사회문화연구원 | 홍사방 |
| 한국사회통일연구원 | 유도진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변형윤 |
|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 박관용 | 북방사회연구소 | 배명오 |
| 남북체육연구학회 | 이종영 | 21세기남북문화연구원 | 한태선 |
| 남북문화교류협회 | 이배영 | 민족통일선교협회 | 신현균 |

| 단 체 명 | 대표자 | 단 체 명 | 대표자 |
|---------------------|-----|---------------------|-----|
| 한겨레평화통일협회 | 장승학 | 남북코리아미술교류협의회 | 정주환 |
| 남북민간교류협의회 | 김승균 | 경실련통일협회 | 한완상 |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 권근술 |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 | 강도원 |
| 세계평화청년연합 | 김봉태 |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 김도현 |
| 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정성현 | 한민족한마음추진본부 | 김성택 |
| 남북소년통일교류회 | 정경석 | 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 송낙환 |
|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 조영식 | 북한동포의 생명과인권을지키는시민연합 | 윤 현 |
| 남북나눔 | 김성수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송현섭 |
|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 김연준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강성모 |
| 탈북자동지회 | 김덕홍 | 좋은 벗들 | 최석호 |
| 북한의민주주의와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 조 혁 | 보통사람들의통일운동시대본부 | 김경재 |
|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 이재정 |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 최승강 |

제4절 북한정보자료 개방 확대

1. 북한자료센터 활성화

정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북한자료센터」에서는 북한방송의 주요 내용을 매일 인터넷에 게재하고 북한영화를 지속적으로 상영하며, 북한실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왔다. 또한, 단계적으로 북한자료를 재분류·공개하였으며, 북한원전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북한자료센터」(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북한영화 상영은 1993년부터는 부산, 광주 등 지방으로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학 및 일반단체·기관이 별도의 상영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에 부응하여 수시 상영도 하고 있다. 2000년에는 인천 등 5개 지방도시 소재 북한관에 각 55편의 북한영화

를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한해동안 북한영화는 총 599회 상영되어 92,193명이 관람하였고 누적 총계는 1,120회 139,678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1989년부터 관련단체 회원과 대학생,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개최하여 북한정세 및 북한주민생활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2000년 한해 동안 설명회는 34회 열렸으며 총 2,355명이 참가하였다. 1989년 이후 2000년 12월말까지 총 237회가 개최되었고 16,412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자료 공개확대 방침에 따라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북한자료 중 비이념성 자료를 선별하여 이를 일반자료로 재분류, 공개하고 있다.

그 1단계로 1999년 3월에 북한 정기간행물 151종 2,694건을 재분류하여 이 중 61종 576건을 일반자료로 일반에 공개하고, 2단계로 1999년 12월에 북한간행 단행본 4,249권을 공개하였으며, 3단계로는 각종 그림 등 영상자료의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1998년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http://unibook.unikorea.go.kr>)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2000년 한해만도 총 404,436건의 접속건수에 질의·답변은 1,932건에 달하고 있다. 북한정보자료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 12월에는 홈페이지에 ‘북한영화 소개’와 ‘자료실’을 새로 설치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홈페이지의 기능 및 내용을 대폭 강화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주요 원문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함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해당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 원문자료 관리 프로그램을 2000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

2. 북한방송 단계적 개방

정부는 북한방송이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북한 바로 알기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의 단계적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1999년 7월 2일부터 태국의 ‘타이콧’ 위성을 이용하여 「조선중앙TV」 위성방송을 시험방송하고, 같은 해 10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9년 10월 22일 전향적인 입장에서 북한TV 위성방송에 대한 일반시청을 허용하였다. 각 라디오·TV 방송사가 북한위성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활용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일반국민들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에서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북한TV 위성방송 시청 허용조치는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방송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라디오와 TV의 대남 비방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종전의 대남 비방 대신 사실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으며, 우리의 라디오와 TV가 북한의 보도매체를 인용하여 북한관련 소식을 곧바로 소개하는 것과 같이 북한의 보도매체도 우리의 언론을 인용, 우리 사회의 일부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남북간에 방송교류가 진행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북한관련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풍부해진 것도 이러한 남북관계 발전에 기인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북한정보자료에 대한 접근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방송개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꾸준히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1) 2000년 대통령 신년사

2000.1.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나간 천년은 인간과 자연,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이 서로 대립하던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희망의 시대입니다. 새천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남녀평등의 실현 속에 평화와 인권과 정의 등이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새천년은 또한 지식혁명의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혁명과 인터넷혁명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식혁명의 시대는 영토국가 시대와는 달리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새 시대에는 지식혁명을 통해서 창의적·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말 것입니다.

새천년은 정부·시장·시민사회가 국가와 세계발전을 위한 3대 축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활성화되어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천년은 우리가 세계일류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인 시대입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렸다면 새 시대에는 세계의 선두대열에 서서 모든 나라와 같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속에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속에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터넷 신문고」를 창설하여 국민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새천년에는 더불어 잘사는 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서민의 복지가 가장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일류국가는 일등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새천년에는 계층·세대·남녀·지역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화해와 단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적 화합이 실현되어야만 우리가 세계적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새천년에는 또한 남북한간 평화를 정착시켜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아래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새해에 이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앞서가는 민주선진국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에도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중립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야당을 국정개혁의 파트너로 삼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여야간 소모적 대결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여야 모두의 국민적 지지 상실이라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새천년은 새천년답게 정치가 보다 전국민적이며 생산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당에서 벗어나 전국정당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산업, 문화, 과학기술, 사회간접시설, 그리고 문화나 교육의 측면에서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낙후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인사를 더 한층 공정하게 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의 모습을 갖추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기반의 시대입니다. 부존자원보다 지식과 정보에 의한 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빛의 속도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 일류국가가 되고, 못하면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조선왕조 말엽같이 한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기 어렵게 됩니다.

올해에는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 등 4대 개혁의 완성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탄탄한 경제체제를 확립해 나가야겠습니다.

IMF 등 세계의 권위있는 기관과 인사들이 경고하듯이 이러한 구조개혁이 완성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위기의 늪으로 후퇴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부문은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추어, 어떠한 외환위기에도 맞설 수 있는 튼튼한 힘을 배양하고 실물경제의 발전을 원활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물가안정의 기조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소득을 올해에 다시 1만달러 시대로 회복시키고 2002년에는 1만3천달러로 올리겠습니다. 세계 7대 순채권 국가의 위상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생산적 노사협력을 토대로 새천년의 新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키우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평하게 분배에 참여하며, 모든 교섭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공공부문개혁은 정부부터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가 금년 말까지 1,000억달러 수준까지 전망됨으로써 어떠한 외환유동성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없이 21세기의 지식기반시대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수교사를 적극 양성하고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등 교사의 위상과 사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졸업생의 취업능력과 연계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대학·생명과학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교생 40만명에게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

학생 30만명에게 장기 저리로 학자금의 융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좌우할 원천인 대학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총력을 다하여 노력함으로써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을 반드시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10년 목표의 초고속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겨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정보유통속도가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을 개발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와 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을 전화처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 목표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완결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의 꿈나무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사와 교실실에 개인용 컴퓨터 1대씩을 무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교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우수학생에게는 개인용 컴퓨터를 국비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들 모두의 인터넷 사용료도 5년 동안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정보생활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가계부 정리를 촉진하겠습니다. 전군의 컴퓨터 이용능력을 높이고 모든 장병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혁명적 개혁 없이는 지식기반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없이는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올해에 1조원 규모의 벤처자금으로 벤처기업을 현재의 5천개에서 1만개 수준으로 늘리고, 여

기서만 1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전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2003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전체예산의 5%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반도체·생명공학·영상·신소재·정보기술 등 첨단부문을 G-7 국가 수준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자와 기술자에 대하여 특별포상을 수여하는 등 획기적으로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일·중·러의 4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20세기와는 달리 이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물류·금융·무역·투자 등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는데 절호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물류 중심기지의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의 항만과 공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단지를 조성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향상을 위해서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펴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부터 빈곤계층의 생계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로 대폭 현실화됩니다. 이제 절대적 빈곤가구는 하나도 빠짐없이 보호될 것입니다.

근로자 복지의 근원적인 해결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저의 임기 내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관광산업 등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주택건설을 획기적으로 늘려 2002년까지는 모든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전세로 입주함으로써 불안한 셋방살이 시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에 주택 50만호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서민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집값의 1/3 수준, 전세금은 절반수준을 장기 저리 자금으로 확대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의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를 더 한층 내실화하여 국민들이 평생 동안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에 대한 지원조치로서 성과금 지급, 재산형성과 종업원 지주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를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봉급생활자의 세금을 크게 감면하여 700만 명의 근로계층이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출산·육아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경로연금 지급액도 상향조정하고, 「노인전문 인력은행」을 설치하여 노인의 취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새천년은 젊은이들의 세기입니다. 그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이 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학업과 연구의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문화·체육·레저·해외연수 등의 기회도 적극 제공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줄 책임이 정부와 기성세대에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115만 농어가에 대한 상호금융 부채 이자를 반으로 낮추고, 70만호가 지고 있는 연대보증 부담을 정부가 안고 농민의 보증은 해제해 주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힘쓸 것입니다. 문화예산 비중을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1%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생활체육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극 힘쓰겠습니다.

세계개혁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정을 더한층 철저히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차질없이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가전제품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간의 공정분배에 노력하여 중산층 안정과 서민생활 향상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국민생활수준을 외환위기 이전으로 되돌리고, 저의 임기 말까지는 소득분배구조에 있어서 OECD국가 중 상위권 국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새천년의 요구에 맞는 정부기구의 강화와 능률화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교육·훈련, 문화·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바꿔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여성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하도록 함으로써 21세기에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될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국정 효율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지만 인원이나 예산의 증가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부기구의 개편은 사전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봉사하는 공직사회에 대해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큼니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봉급을 임기 중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능력과 공로에 따른 보상제도도 적극 실현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공무원들의 기존권익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새천년의 시작과 더불어 뿌리뽑는다는 결심으로 철저히 이를 다스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남북한간 화해 및 협력관계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도움은 성의껏 제공하되 경제적인 교류는 상호이익이 되는 공존

공영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북한에 대해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간의 협의를 갖자고 제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북한 당국이 이처럼 정치적 목적을 떠나 우선 경제적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노력에 긍정적으로 응해올 것을 바랍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민족의 염원인 이산가족의 상봉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화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뜨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견지에서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취임사에서 천명한 대북 3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셋째, 남북은 서로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남북간의 긴장은 상당히 완화되었고 각종교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리에 남북교류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우리 국군의 노고가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연평해전'에서의 승리는 국군의 사기를 크게 양양시켰고 국민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국군장병에게 국민적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위헌판결에 대해서는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념과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새천년 민주당'이 창당되고 있습니다. 신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서는 국민적 개혁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많은 참신하고 전문적인 인재들이 신당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시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과 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과 세계일류 한국건설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의 신장된 국력과 경제적 발전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후발개도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한국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일류국가로 우뚝 서고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천년을 위해 저의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다같이 자랑스러운 조국, 살기 좋은 나라, 온 국민이 화합해 하나로 뭉친 한국이라는 훌륭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저도 이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꿈과 희망의 시대', '기회의 시대'로 나아갑시다. 새천년 새희망의 내일을 향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2)제 81주년 3.1절 기념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새천년에 들어서서 처음 맞이하는 뜻깊은 3.1절을 여러분과 다 함께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거룩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모든 선열들에 대해 깊이 머리 숙여 감사하고 그분들의 위대한 뜻을 같이 기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3.1운동은 남북한 전역에서 전 국민이 일어난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세계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가 을사국치 이래 40년 동안 이 나라를 강점할 때 국내에서 혹은 국외의 시베리아, 만주, 중국대륙에서 하루도 멈추지 않고 무장투쟁을 한 점입니다. 이는 세계 어느 식민지 독립투쟁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에 따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래 해방되어 귀국할 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간판을 지키며 상해로부터 중경까지 전전하면서도 끝내 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3.1운동은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불과 10년 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시 왕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3.1운동은 중국, 인도 등 세계의 많은 식민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차 대전 말기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정할 때에도 3.1운동과 선열들의 계속된 투쟁이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3.1정신은 바로 민주주의 정신이고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정신이며 모든 국민에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이는 3.1 독립선언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뜻과 일치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국민의 정부의 지난 2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2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 특히 인권의 신장이 괄목할 만큼 실현되었습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이면 어떠한 시위나 집회, 파업도 이제는 원천봉쇄 당하는 일이 없

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최루탄과 화염병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자유는 언론인 자신들과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하여 인정하듯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보장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은 놀랄 만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자유도 완벽하게 보장되어 민주노총이나 교원로조가 합법화되었고, 노동자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자금 모금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군과 경찰, 기타 공무원들도 이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여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등 여성의 권리가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의 30%를 여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의 혼란이 국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치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정치가 안정되어야겠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중단하면 우리는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경제개혁 성과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파탄 직전에 있던 국운을 되살리고 6.25전쟁 이래 최대의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98년 마이너스 5.8%의 성장으로 추락했던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는 10.2%의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물가는 사상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금리도 한자리 숫자입니다. 환율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대 선까지 내려갔던 주가도 크게 올라 이제 9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무역흑자도 건전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20억달러의 무역흑자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외환보유고는 저의 대통령 당선 당시 불과 39억달러에서 이제 800억달러가 되어 OECD 선진 29개국 중 일본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채권국가 중에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변화를 이룩한 것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2월 28일자에서 "한국을 보면 영화 타이타닉호의 비디오를 거꾸로 감상하는 것 같다. 대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다시 떠올라 더욱 행복한 미래를 향해 항해하는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한 평가처럼 이제 우리가 IMF의 위기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우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것뿐입니다. 21세기의 무한경쟁시대, 그리고 전혀 새로운 패턴의 새천년의 경제여건에 적응하려면 참으로 혁명적인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20세기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즉 자본·노동·토지 같은 하드웨어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즉, 지식·정보·문화창조력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조상들의 덕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기반이 튼튼한 민족이고 또 문화적 창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 해동불교로 발전시켰고 유교를 받아들이면 조선유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워서 270년을 통치하고도 중국문화를 자기 것으로 재창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중국인으로 동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천만이 넘는 대민족이 엄연히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3.1운동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민적 관심의 초점 중 하나인 빈부격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기업이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의 희생이 컸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줄기찬 노력의 덕택으로 우리는 다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회복했습니다.

IMF 사태 이후 2만3천개가 문을 닫았던 중소기업은 작년 말에 다시 3만개가 창업되었고 지금 매월 3천개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별로 없었던 벤처기업이 지난 2년 동안에 4천8백개가 늘어나고 금년 말까지는 1만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중산층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봉급생활자들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전자제품과 음료수 등 생필품에 대한 특소세도 감면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특히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 아궁이에 군불을 지펴서 아랫목에서 중앙까지는 온기가 있지만, 윗목에는 아직도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위 20%의 국민들의 소득이 국내 총생산의 9%선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에 재래시장을 찾아보니 너무도 썰렁하여 오히려 찾아간 것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을 튼튼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또한 그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구매력이 생겨서 경제도 더욱 좋아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 10조원을 들여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에 따라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약 100만원까지 그 수

입을 보장하여 생계와 의료, 교육을 뒷받침 해줄 것입니다. 약 40만명의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등록금을 정부가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30만명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융자를 하고 정부가 그 이자의 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의 교실과 마을회관 등에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만명의 가난한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컴퓨터 교육비를 면제해 줍니다. 100만명의 주부에 대해서도 아주 저렴한 강습료로 컴퓨터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인터넷 이용자가 약 1천만명인데 금년 중에 다시 1천만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임기 중에 전 국민이 컴퓨터를 갖고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신들린 사람처럼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지 않아 지식정보 10대 강국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창창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래산업에 대해서도 지식정보산업 못지 않게 중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래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지역주의를 악용해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러한 일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3.1정신을 거역한, 민족에 대한 죄악으로서 우리는 이를 단호히 심판해야 합니다.

자유당, 민주당 때까지도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전라도 출신이 경상도 지방에 가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에 와서 당선되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물을 뽑은 것이 우리 선거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16 군사정부 이래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남북한조차 화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남북분단도 통탄스러운데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지역을 가르다니 이렇고서 우리가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선열들을 대할 면목이 있겠습니까.

3.1 운동이 어떠한 운동입니까. 전 국민이 함경도에서 전라도까지, 평안도에서 경상도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투쟁한 민족독립운동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 민족이 하나같이 그 뜻을 기리고 교훈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을 진심으로 기념하는 길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저는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확고한 안보의 기반 위에 화해 협력을 추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냉전상태를 종식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대의 소원일 것입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미·일과의 합의 아래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나라들과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모두가 지지합니다.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 몽골, 베트남, 이집트까지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 이처럼 전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해서 그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회복을 도와주며 국제적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을 포기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서 양쪽이 다같이 이익을 얻는 소위 말하는 '윈-윈 정책'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햇볕정책이라 해서 결코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연평해전이 그 좋은 예입니다.

저는 연평해전이 일어났을 때 국방장관에게 네 가지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북방한계선은 꼭 지키시오, 우리가 먼저 발포하지 마시오, 북한이 발포하면 이를 단호히 분쇄하시오, 그러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하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군의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효과적이고도 충실하게 이행해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만일 승리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준 국군에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북한은 의미있는 두 가지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사일 제2차 발사를 중지한 것입니다. 이로써 전쟁의 위협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을 위시한 남북간의 문화·스포츠교류는 물론, 경제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0개가 넘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북한에 진출해 있고, 대기업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남북간의 교역은 3억3천만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인내와 일관성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면 저의 임기 중에 냉전종식이라는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일을 추구할 단계가 못됨

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그러한 힘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더라도 남북간에 전쟁을 하고 50년 이상 무장대결을 한 처지에서 정신적 갈등을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통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1300년 동안 통일국가를 이룩해온 이 민족이 어찌하여 50년 분단 때문에 통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3.1정신을 가슴에 되새기며 때가 오면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같이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19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당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개국하고 근대화를 했던들 우리는 일제침략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한 때 잘못으로 후손들은 일제통치, 국토분단, 한국전쟁, 냉전대결 등 100년 이상 양화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잘못하면 또다시 후손들에게 그러한 죄 많은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미 말한 5대 과업, 즉 민주국가의 완성, 지식정보국가의 건설, 생산적 복지의 실현, 국민적 대화합, 한반도 냉전의 종식을 반드시 실현하여 새천년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만듭시다. 그것을 기반으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킵시다. 7천만 민족이 열싸 안고 자유와 번영과 정의를 구가하는 그 날을 이룩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 전체의 행복을 실현시키고 후손에게 3.1선열과 같은 자랑스러운 조상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3) 베를린 자유대학 대통령 연설문

2000.3.9

존경하는 피터 케트겐스 총장, 존경하는 교수 및 내외귀빈, 그리고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나는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폐허와 분단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번영과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독일 국민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간직하면서 오늘 이 유서 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의 교수 및 학생 여러분과 더불어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주제아래 대화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정어린 환영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베를린 자유대학과 이 대학 출신들이 지난 48년 개교한 이래 동서독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독일통일을 앞장서 이끌어온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이 대학을 찾았습니다. 분단국인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독일 통일에의 교훈을 배운다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국 양국은 전쟁과 민족분단의 쓰라린 고통과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은 "라인강의 기적"을,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 동안 아시아 지역을 휩쓴 경제적 위기를 국민과 정부의 헌신,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습니다. 97연말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는 이제 8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98년도 마이너스 5.8%였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는 10.2%로 상승했습니다. 물가, 금리, 외환, 증시 등이 모두 전례없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률도 금년내에 4%까지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은 이러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공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국민은 비록 독일과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유사성 때문에 독일과 독일 국민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세계는 이제 대립과 갈등의 20세기를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뉴밀레니엄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세기말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50여년간 지속되어온 냉전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고수해온 중국, 베트남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한 경제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친구이자 가장 유망한 경제협력의 상대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의 완고한 폐쇄정책 때문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 한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를 위해서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먼저 성공적으로 이룩한 동서독 관계와 통일의 경험은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로부터 얻은 교훈은 첫째, 독일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온 서독 국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독의 대결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대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둘째, 서독은 「접촉을 통한 변화」로 요약되는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동서독간의 상호공존과 긴장완화의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동독 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이데올로기적 반목을 완화시켰습니다.

셋째, 서독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으로 통일 독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켰으며 놀랍게도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넷째, 서독 정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동서독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독의 대동독정책은 우리 한국의 햇볕정책 추진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년동안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의 가장 존경하는 친구인 빌리 브란트 전 총리,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그리고 겐서 전 외무장관같은 지도자들과도 여러 차례 귀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정책, 통일이후의 상황 모두가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교훈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은 독일 통일 이후에 동서독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와, 특히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심각하게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을 보고 한없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격도 컸습니다. 그것은 첫째, 엄청난 자금의 소요입니다. 2천억 마르크면 된다던 통일비용이 10배나 들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양독간의 경제적 격차의 해소는 아직도 남아 있는 숙제라고 합니다. 둘째, 구동서독인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 아직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독은 경제규모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더 크고 부유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독과 전쟁을 한 일도 없고, 통일 전에 많은 교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통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북한을 떠 안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극도의 무장대립 속에 있습니다. 동독 국민은 바이마르 공화국시대에서 만개했던 민주주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은 자유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고립으로 북한밖의 외부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통일을 서두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에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호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이 화해·협력하면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1995년에 「한반도 3단계 통일론」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일종의 독립국가연합의 단계이고, 2단계는 연방체제아래 남북이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요, 3단계는 완전통일의 단계인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통일방식은 앞서 말한 빌리 브란트 전 총리 등 독일의 지도자로부터도 많은 찬성과 격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아직까지도 개방과 변화를 망설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을 절대 용납치 않는다. 둘째, 우리도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이 화해협력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햇볕정책의 핵심이며 냉전종식을 위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확고한 안보를 유지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와 화해·협력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햇볕정책의 기조 위에서 우리는 북한에게 세 가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북한의 경제회복을 돕는다. 셋째, 북한의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 그 대신 북한도 세 가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남 무력도발을 절대 포기해야 한다. 둘째,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자고 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 방안입니다. 우리는 이를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WIN-WIN정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을 포함하여 전 세계가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북한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북한의 굶주린 동포들의 참상을 TV화면으로 보면서 눈물을 금치 못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북한이 피폐한 경제를 회복하여 굶주린 북한동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우리는 열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부로 비록 정부간의 대화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대북한 교류나 협력을 환영하며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경제·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18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있는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남북간의 교역도 작년에는 사상최고인 3.4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남한의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도 시작되거나 협상중입니다. 금년에는 서해공단의 건설, 전자제품공장과 자동차 조립공장 등이 남한의 대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문화·스포츠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작년에 여러분이 계신 이곳 베를린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갖고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머지 않아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북한과의 국교개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자신을 위한 경제개방에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교수 및 학생 여러분!

나는 오늘 뜻깊은 베를린 자유대학을 방문한 이 자리를 빌려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이루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에는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민간경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철도, 전력,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 정부 당국에 의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단순한 식량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

다. 비료, 농기구 개량, 관개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농업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민간경협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당국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참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미 2년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당국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성의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독일을 위시한 국제사회도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이 조속한 시일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및 학생 여러분!

한국에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연민의 정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의 분단이라는 크나큰 아픔을 같이 경험한 인간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 국민은 이러한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 통일의 위업을 먼저 이룩한 독일 국민에 대하여 깊은 존경심을 표시하며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배우고자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사독재자의 억압 속에 신음할 때 독일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우리를 성원해 주었습니다. 나는 독재자와 싸우다 다섯 번의 죽음의 고비와, 6년의 감옥살이, 30년의 망명·연금·감시하의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독일 국민과 독일의 지도자들은 내 일과 같이 나와 한국의 민주인사들을 적극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 깊은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의 민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성원은 계속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민은 언제까지나 가장 충실하고 우정이 넘친 친구로서 독일 국민과 베를린 자유대학 여러분들과 함께 새천년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대통령 방북성과 대국민 보고

2000.6.15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방북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밤잠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환호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새 날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남북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우리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데 첫걸음이 됐으면 더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은 제가 기대했던 이상의 환대를 저에게 베풀었습니다. 공항에 직접 출영하고, 오늘 돌아올 때 공항에도 환송을 나와 주었습니다. 회담과정에서는 때로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몇 번 있었지만 우리가 성의껏 노력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한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바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평양시에 들어갈 때 60만, 나올 때 30~40만, 모두 약 100만의 평양 시민이 열광적으로 저를 환영하고 환송해주었습니다. 평양 역사상 처음 있는 큰 군중의 환영이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양 시민의 환영에 대해서, 같은 혈육의 정으로서 환영해 준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감사의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세계 여론의 한결같은, 거의 한 나라의 예외도 없는 적극적인 성원,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평양에 있으면서 국내의 TV도 보고 신문도 봤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의 대대적인 보도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제가 그렇게 보도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다시 없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언론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얼마나 열망하는가 하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양 정상은 민족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공을 못 했을

때 그 엄청난 파장,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을 때 가져올 세계사적 큰 발전과 전환,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온갖 성의와 지혜를 다하자 이렇게 다짐을 몇 번했었습니다. 저를 수행한 우리 보좌진이나 또 특별 수행한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북측 사람들과 만나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저의 일을 지원하는데 측면 지원의 역할을 많이 해 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데 바입니다.

만난 것이 중요합니다. 평양도 가보니까 우리 땅이었습시다. 평양에 사는 사람도 우리하고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었습시다. 그들도 걸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살아왔건 마음 속으로는 남쪽 동포들에 대해서 그리움과 사랑의 정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을 조금 말해 보면 알 수 있었습시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서 살아왔습시다. 통일을 이룩한지도 1300년이 되었습시다. 그런 민족이 타의에 의한 불과 55년의 분단 때문에 영원히 서로 외면하거나 정신적으로 남남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번에 가서 현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화해도 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하고 얘기했습니다. 과거 조선왕조 말엽에 국민이 단합하고 근대화를 서둘러야 할 때 내부가 산산히 분열되고 근대화를 외면하다가 결국 망국의 설움을 얻고 일제 35년 8.15의 분단, 6.25의 전쟁, 지금까지의 철조망을 사이에 놓고 대립, 100년의 양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지금 세계가 지식 정보화 시대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명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고 경제적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같은 민족끼리 내부에서 힘을 탕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당장의 통일은 안 되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하늘도 트고, 길도 트고, 항구도 트고, 서로 왕래하고 협력하고 같이 경제 발전시키고 문화 교류, 체육 교류 이렇게 해 나간다면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높은 교육적 전통, 문화 창조력 이것이 21세기의 지식기반시대에 가장 적합한 우리의 자산이 아니겠는가. 이제 4대국이 우리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라 4대국이 우리 시장으로서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 때 우리가 정신차려서 남북이 협력하지 않고 우리끼리 싸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적화 통일도 안 되고 흡수 통일도 안 되고 남북이 서로 공존공영을 하면서 차츰 통일의 길로 나가자. 민족을 이 21세기의 절호의 시대에 세계 인류의 그러한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북한측에 역설하고 그분들도 동감을 표시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됐고 아무 걱정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가능성을 보고 왔다는 것뿐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또 성의가 필요합니다. 역지사지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보, 대한민국의 주체성, 여기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되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협력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중국에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저는 이번에 북측에 대해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자고 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핵 이야기도 했고 미사일 이야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나왔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왔습니다. 얘기한 가운데 그 대화가 매우 유익했으며 그 중에는 아주 좋은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국민에게 발표한 남북공동선언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이것은 7.4공동성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7.4공동성명 발표한 것이 28년인데 아무 것도 되지 않았느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얘기했는데 아무 것도 안되지 않았느냐. 또 92년 2월에 남북이 합의서를 발표해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비핵화 선언 등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원칙을 주장하던 7.4공동성명, 구체적인 방안을 주장하던 남북합의서 다 효과를 못 봤다면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쥔 것부터 실천을 우리가 보여주자. 이 정상회담은 바로 실천을 보여주는 회담이다. 옛날하고 똑같이 민족 자주, 통일, 평화 이런 듣기 좋은 말만해서는 이제는 세계도 우리 민족도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항 이하에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에 합의를 봤습니다. 실천을 곧 할 수 있는 일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 2항은 우리가 주장해 온 남북연합입니다. 즉 2체제 2정부를 현재대로 놔두고 남북 양쪽에서 수뇌회의를 구성하고 장관 각료급 회의를 구성하고 국회회의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합의기관을 만들어서 차츰차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합제입니다.

그에 비해 1980년 북한은 연방제를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중앙정부가 외교권, 군대통솔권을 다 가져야 한다. 남북 양쪽의 지방정부는 내정권만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전연 이행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북한은 이 점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중앙 연방이 갖겠다는 외교와 군사권을 지방정부가 그대로 가져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주장한 대로입니다. 이것은 상통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 대표가 한번 같이 문제를 토론해 보자, 학자들도 오고 전문가들도 와서 한 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통일운동 사상에서 아주 구체적인 합의점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셋째는 남과 북은 오는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얘기할 것은 이 문장 해석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실향민, 흩어진 이산 가족들의 문제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항에 나오면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다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이번 8.15까지 북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통크게 한 번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말한 장기수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내가 국민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소. 먼저 잘 하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6월 달부터 적십자사가 곧 가동을 합니다. 이것도 오늘 합의를 해서 내가 서울 돌아가는 즉시로 적십자에 요청해서 북하고 접촉하라고 하겠다고 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는 앞으로 그 범위가 얼마만큼 갈지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규모에서 이 문제가 시작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렇게 북한하고 합의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증대시키기로 했습니다. 경제 협력 문제를 말씀드리면,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철도를 깔고,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항만·통신 등을 해 나갈 때, 또 북한에다가 공단을 만들어서 진출할 때 지금

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남한 내부에서의 경제가 한반도 전체의 경제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고 그런 가운데 북도 남도 다같이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기차가 왜 런던을 못 가고 왜 파리를 못 잡니까? 경의선, 경원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못 잡니다. 만주에서는 기차들이 자유롭게 가지 않습니까? 경인선은 불과 25킬로 정도밖에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으면 곧 갈 수 있습니다. 운송비가 30%가 절감이 되고, 수송 날짜가 훨씬 줄어듭니다. 북한하고만 해결되면 우리는 유럽까지 승승장구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천년의 실크로드가 생겨나서 남북 양측이 크게 경제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 북한의 노동력이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은 신문에 여러 번 났습니다. 노임도 훨씬 저렴합니다. 남한에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도 북한에 가면 충분히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다 도움이 됩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철칙으로 뒤편 할 것은 남만 좋아도 안되고 북만 좋아도 안되고 양쪽이 다 좋아야 오래 가고 그래야 화해가 있고 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윈윈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류 협력을 경제뿐 아니라 문화, 체육 모든 분야에서 해가기로 김정일 위원장과 확실히 합의를 봤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인 실천을 처리하기 위해서 남북에서 임명한 당국자들이 곧 북한하고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는 이것을 합의하는데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하고 합의된 시일 중에 택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김정일 위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서울을 와야 우리 민족이나 세계 사람들이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나만 왔다가 김 위원장은 안 오면 저거 일회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를 잘 아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김 위원장보다도 10여 살 위인데 당신보다 더 나이 먹은 노인이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안 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다같은 우리 강산이고, 다같은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고, 다같은 한국 사람의 생각과 인정과 모든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하고 아주 상이한 사상적 토양에서, 그런 정치체제 아래서, 그런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가 한국 사람 특유의 급한 성격을 가지고 풀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만 해놓고 7.4 공동선언이 28년간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도 우리 동포다, 그들도 우리하고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일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당연히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일치합니다. 그런 토대만 닦아놓고 내가 물러난다면 또 뒤에 오는 분이 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적화통일도 용납하지 않지만 우리도 북한을 해치지 않겠다. 반드시 같이 공존공영해서 우리 한민족이 한번 새로운 21세기에 같이 손잡고 크게 세계 속에서 일류 국가로 웅비해 보자. 주변 4대국이 이제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전부 우리 시장이다.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적 기반,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지식기반시대에 이런 거대한 시장을 개척해나가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북한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는 철통같이 하되, 그러나 전쟁을 막기 위한 안보, 그리고 결국은 남북이 화해 협력하기 위한 안보, 이런 방향으로 나갈 때 나는 우리 조상들이 도와서 하늘이 도와서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한반도 전체의 조국을, 번영된 조국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동안의 성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에게 있는 능력껏 힘을 다해서 국민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오늘은 적당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건승을 빌고 성원에 감사하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제55주년 광복절 경축사

2000.8.15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광복 55주년이 되는 날이자 새천년 21세기에 처음 맞는 8.15 경축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먼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존해 계시는 독립유공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산가족의 남북간 동시상호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찌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년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다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비극과 시련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국토의 분단,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경제의 황폐화가 이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적대와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안보태세 아래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나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 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독재체제의 삼엄한 탄압과 횡포 아래서도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97년 마침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에 의해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대업을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의 힘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련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IMF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경제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대표된 바와 같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 세계는 또 한번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과 불굴의 의지를 확인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위대한 우리 국민에 대하여 한없는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55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는 조상들과 선열들의 열이 깃들어 있는 이 독립기념관에서 그 어느 때보다 땀뻑한 심정으로 그분들의 영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대업을 우리가 지금 이룩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달전 우리는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7천만 민족과 세계 앞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6.15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오늘의 광복절에 대한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남과 북은 지금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 회담 등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2년반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되어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가 최대한 보장되고 있습니다. 시위·집회·결사의 자유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이 합법화되었고 노동자의 정치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최루탄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차별 금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등 여성의 권리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어 국정과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인권국가의 반열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도 우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급박했던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38억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90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금리·환율·물가가 크게 안정되었습니다. 무역수지와 경제성장도 견실한 기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OECD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몇차례씩 제기했던 경제대란설의 우려도 모두 극복해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바꾸기 위해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4대 개혁과 병행해서 지식정보화 혁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정보 인프라 스톱트럭처의 구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의 확대,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보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저소득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인 가족기준으로 월 92만원까지 생계비가 보장됩니다.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진 복지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도 국민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만, 국민 여러분과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정책인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안보협력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이 국정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는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대 개혁의 미완성, 도덕적 해이, 개혁피로 증후군과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정치의 불안정 등 나라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개각의 단행과 더불어 국정 제2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굳은 개혁의지와 투명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통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미 설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앞으로의 임기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5대 목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국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몸바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법」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 위에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입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부정

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확고한 법질서의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집단이기주의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관계의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외적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내적 체질개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취임 직후에 1년반 안에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취임 3년이 됩니다. 저는 그 취임 3년이 되는 날까지 4대 개혁을 마무리지어 새천년 우리 경제의 탄탄한 발전의 터전을 닦아 놓겠습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다른 분야의 개혁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개혁이야말로 국민과 시대가 국민의 정부에게 부여한 역사적 소임이라고 믿고 저는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4대 개혁에 성공하려면 지식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데 국가차원의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입국을 통하여 지식정보강국을 이룩했을 때 한국은 세계 일류국가 대열에 당당히 등

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 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하고 돈이 있건 없건 정보화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평생학습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수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확대해서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쌍두마차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산업은 물론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생명산업을 포함하여 국가산업 전체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 일류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생산적 복지의 정착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여 저소득층도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획기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우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기초생활은 이미 말한대로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력으로 고소득과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생과 농어민, 주부, 군인,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교도소의 재소자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레저의 확충과 환경의 개선과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넷째는 국민의 대화합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남북의 화해협력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내부에서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화합을 위해 무엇보다 여야간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국민을 실망과 분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야간의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각 정당의 대표와 만나 국사를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국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해 나가되 여

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몰아내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민족 상생의 시대를 반드시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7천만 겨레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평화공존, 평화교류를 확립하는 통일의 제1단계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관급 회담을 통하여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3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간의 군사직통전화의 설치, 국방장관급 회담 등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협력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남북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이룩하는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도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공산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유럽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NATO와 미군이 존속하고 있듯이 한반도와 일본에서의 미군의 존속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21세기의 벽두에서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역사적 소명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소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5대 과제 중에서 두 가지를 특별히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남북

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장차에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합니다.

100년전인 19세기말, 우리 민족은 세계사의 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망국의 한을 초래했습니다.

당시의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으로는 국민이 단합하고 밖으로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명을 도외시한 채 우리는 내부분열로 국력을 소진했고, 쇄국주의를 고집하며 근대화를 거부하다 시대에 뒤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방이 되어서도 민족의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과 총칼에 의한 반세기 동안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한때의 잘못이 100년간의 양화를 후손에게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는 지식정보화의 혁명입니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입니다. 그 격변의 중심에는 지식정보화의 대혁명을 이루라는 역사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지난 세기에는 자본과 토지, 인간의 노동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요소가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창조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창의적인 두뇌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민족, 어느 국민보다도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지적기반, 그리고 탁월한 문화창조의 전통과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새로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가 금년 말이면 2천만명에 이르고, 2002년이면 3천만명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장점을 살려 세계 일류의 지식정보강국을 건설해 낼 자신이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또 하나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평화와 번영을 기약하는데 절대 필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전쟁과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공존, 평화교류 속에 남북이 손잡고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자원이 합쳐진다면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과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한만의 무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손을 잡으면 한반도 전체로 무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으로 우리의 활동영역이 뻗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이미 경의선 철도를 다시 잇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경원선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두 길을 통해 유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줄의 「철의 실크로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이 되고,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아가는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주변국가가 이제 당당히 세계의 한 중심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는 내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역사가 제시하는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평화와 도약을 통한 자랑스러운 한반도 시대를 이룩하는 데 총력을 다합시다. 오늘 우리의 행복은 물론 내일의 후손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역사의 소명을 충실히 받들고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한강의 기적, 외환위기의 극복에 이어 다시 한번 세 번째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일어섭시

다. 저는 국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유엔 천년정상회의 대통령 기조연설문

2000.9.6

존경하는 각국정상,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천년의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55년 동안 남북간을 가로막아 온 냉전의 빙벽에 따뜻한 햇볕이 비치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6월 15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8월 15일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은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은 물론 유엔과 전세계 지도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유엔천년정상회의의 공동의장이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를 결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큰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년반 전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부터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엔을 위시한 세계 각국이 빠짐없이 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다같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추구하되 당장의 과제로는 남북한이 평화정착과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야하며 남북 모두가 더불어 성공하는 통일을 이룩하기로 남북

정상간에 합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정상간의 교환방문, 각료급 회담 등을 계속하여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의 증대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발전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선두에 유엔이 있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여러분이 있는 한 한반도에서 일어난 새천년의 기적은 성공의 역사로 발전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지도자 여러분!

유엔은 지난 20세기에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하여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만일 유엔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인권이 유린되고 전쟁과 재난이 인류를 괴롭혔겠습니까. 유엔의 창설이야말로 20세기에 있어서 인류 최대의 위업이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에서 유엔이 해결해야 할 임무는 더욱 막중합니다. 세계적 평화의 실현,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적 발전지원, 인권의 신장, 빈곤의 퇴치, 테러의 방지, 지구환경의 보존 등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야 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21세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가장 희망에 찬 세기로 만들도록 힘써 나가자고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국은 앞으로도 유엔의 고귀한 역할에 대해서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북교류협력관련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 | |
|----|------------|--------------------------------------|
| 제정 | 1990. 8. 1 | 법률 제4239호 |
| 개정 | 1990.12.27 |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
| | 1992.12. 8 | 법률 제4522호(출입국관리법) |
| | 1994.12.31 | 법률 제4850호(대외무역법) |
| | 1996.12.30 | 법률 제5211호(대외무역법) |
| | 1997.12.13 | 법률 제5454호(정부명칭등의변경에 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과 그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라 함은 북한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남한의 항구·비행장 기타 장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은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허가·승인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3. 교역대상품목의 범위 결정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조추진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준비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

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해외동포등의 출입보장)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동포가 남한에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제11조(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 출입장소에서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교역당사자)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하되,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통일부장관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하여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물품의 반출·반입에 관한 승인을 요하는 품목 또는 금지품목의 구분 2.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관한 제한내용 및 승인절차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 ①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승인취소사유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의 범위·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수송장비등의 출입관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과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2.12.8> 제22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자·종류·요금·취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검역등) ① 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6조 내지 제28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 또는 가검역증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다른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 외국환관리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감면규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벌 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9조제3항, 제13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을 운행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9조(형의 감경등)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부칙 생략>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 제정 | 1990. 8. 9 | 대통령령 제13071호 |
| 개정 | 1991. 2. 1 |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
| | 1991.12.31 | 대통령령 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 | 1993. 3. 6 | 대통령령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 | 1993. 3.30 | 대통령령 제13872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
| | 1993.12.31 | 대통령령 제14078호(교통세법시행령) |
| | 1994.12.23 |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 | 1994.12.23 | 대통령령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 | 1995.12. 6 | 대통령령 제14819호(병역법시행령) |
| | 1996. 5.31 | 대통령령 제15006호(외국환관리법시행령) |
| | 1996. 8. 8 |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 | 1997.12.15 | 대통령령 제15539호(우편법시행령) |
| | 1998.10.23 | 대통령령 제15920호 |
| | 1998.12.31 | 대통령령 제15985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판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개항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준용규정등) ①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제'9'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 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③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4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4면
- ④ 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3년의 유효기간 범위안에서 횡수의 제한없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의 면수는 10면으로 한다.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다만, 60일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신청) ① 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 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일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기간) ①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등) ①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 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삭 제>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

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의 확인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심사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심사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출국금지자로 확인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교역

제25조 <삭제>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

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10%이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제27조 <삭 제>

제28조 <삭 제>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 승인을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 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② 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 2(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의 동시승인)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 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수당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삭 제>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⑤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정한 사항 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생략>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1998. 6. 1 통일부령 제3호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재외국민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북한방문신고서등) ①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등) ①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신고서등) 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부칙 및 별표·별지 생략>

(4) 남북협력기금법

| | | |
|-----|----------------|---|
| 改 正 | 1990 · 12 · 27 | 法律第4268號(政府組織法) |
| | 1993 · 12 · 31 | 法律第4675號(國債法) |
| | 1996 · 12 · 12 | 法律第5170號(財政融資特別會計法) |
| | 1997 · 12 · 13 |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 整備에관한法律) |
| | 1999 · 5 · 24 | 法律第5982號(政府組織法) |
| | 1999 · 12 · 31 | 法律第6075호(國債法) |

第1條(目的) 이 법은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에 의한 南北間의 相互交流和 協力を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交易” 및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第3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이 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4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3·12·31>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の 出捐金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
3.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改正 99·12·31>

4. 基金의 運用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第5條(長期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 金融機關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6·12·12>

②統一院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7·12·13>

第6條 削除 <93·12·31>

第7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統一院長官이 運用·管理한다. <改正 90·12·27, 99·5·24>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③統一院長官이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金運用計劃중 經濟 및 財政·金融政策과 관련되는 重要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7·12·13, 99·5·24>

④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0·12·27>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改正 93·12·31>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 往來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文化・學術・體育分野 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交易 및 經濟分野 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의 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融資
4. 南北交流・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등 代金決濟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資金을 融資해 주는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損失補填과 金融機關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
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力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力を 增進하기 위한 事業의 지원
6. 借入金 및 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의 元利金 償還<改正 99・12・31>
7.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第9條(基金의 會計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改正 90・12・27>

②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統一院長官은 委託받은 銀行의 理事중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각각 수행한다. <改正 90・12・27>

③會計關係職員等の 責任에 關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10條(一時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11條(보고 및 還收) ①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 및 使用結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②統一院長官은 基金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金支出目的외에 사용한 때에는 支出된 基金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 <改正 90・12・2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還收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한다.

第12條(餘裕資金의 運用) 統一院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6・12・12>

1. 國債・公債의 買入
2. 財政融資特別會計에의 預託
3. 金融機關에의 短期預置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第13條(이익 및 缺損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14條(監督 및 命令) 統一院長官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附 則<99・5・2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9・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國債管理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 以下省略”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 | |
|----|------------|-----------------------------|
| 제정 | 1990.12.31 | 대통령령 제13237호 |
| 개정 | 1991. 2. 1 |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부과그소속기관직제) |
| | 1993. 3. 6 | 대통령령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 | 1994.12.23 |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 | 1999. 5.23 | 대통령령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목 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채권의 발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4'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지원금, 용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 통일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처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처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생략>

(5)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개 정 1998·6·1 통일부령 제3호(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등 기본적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예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 칙<1998.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북한이탈주민관련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 | | |
|-----|------------|------------------|
| 제 정 | 1997. 1.13 | 법률제5259호 |
| 개 정 | 1999. 1.21 | 법률제5681호(국가정보원법) |
| | 1999.12.28 | 법률제6056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기준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개정 99.12.28>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12.28>제'6'조(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신청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본적·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자격인정) 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취업보호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냈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제17조의3(영농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취적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적을 정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취적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호적의 기재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취적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취적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취적허가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적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편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취적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호적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정착금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거주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료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다.

제26조의3(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의 부담) ①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 ② 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33조(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99.12.28>

①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취업보호에 관한 소급적용)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12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국민연금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2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제8조에 의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도 적용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 제 정 | 1997. 7.14 | 대통령령 제15436호 |
| 개 정 | 1998.12.31 | 대통령령 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
| | 1998.12.31 | 대통령령 제15984호 |
| | 1999. 3.31 | 대통령령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중 개정령) |
| | 1999. 5.24 | 대통령령 제16326호(기획예산처 직제) |
| | 2000. 1.28 | 대통령령 제16695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세대별지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지원은 부부와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단위로 한다. 다만, 세대구성원간의 보호결정시기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8>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소속 1급 내지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3.31>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6'조(의견청취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개정 99.12.31>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제12조(임시보호등의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조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 및 기간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99.3.31>제13조(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자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제15조(보호결정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제5호에서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보호결정시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의무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내입국교섭등) ①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방법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언행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98.12.31>

제24조(협조요청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6조(등록대장)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통보내용과 등록대장을 따로 이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자격인정절차)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수교육등의 기회제공)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데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사회적응교육)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교과 과정을 마련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영농정착지원) <조 이양 제35조의3, 2000.1.28> 제32조(직업훈련신청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98.12.3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훈련수당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 가계보조수당·가족수당·교통비·식비 등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98.12.31>제33조(직업지도)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②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제34조(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등을 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초 급여일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매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③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1.28>제34조의3(우선구매) 법 제17조제4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신설 2000.1.28>1. 연간 평균 10인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제35조(취업알선)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노동부장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송부받은 노동부장관등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

정도과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개정 2000.1.28>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0.1.28>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호 또는 동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② 법 제1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신설 2000.1.28>제35조의3(영농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

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개정 2000.1.28>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자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 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98.12.31>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④ 행정자치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동 주택의 임대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주거지원을 함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가” 지역 : 특별시지역

2. “나” 지역 : 광역시 및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지역3. “다” 지역 : “가” 지역 및 “나” 지역 이외의 지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1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98.12.31>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8.12.31>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 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3. 전차·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기관총·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실태조사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3조(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입학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1.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2.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미만의 자3. 국내의 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사립의 경우에는 육성회비)를 지원한다.

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4년(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삭제 <98.12.31>

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31>제47조의2(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00.1.28>1. 장애인

2. 모자(母子)가정

3.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보호대상자가 5급이상 공무원·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신설 2000.1.28>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안의 직업훈련을 제외한다)의 실시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알선

제50조(이의신청)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부 칙<2000.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통일교육관련

(1)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57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과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임무) ①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②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여성특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노동부·기획예산처·여성특별위원회·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

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북정상회담 관련

(1) 남북공동선언

2000.6.1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

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 | | | | | | | |
|---|---|---|---|-------------|---|---|---|
| 대 | 한 | 민 | 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 | |
| 대 | 통 | 령 | 국 | 방 | 위 | 원 | 장 |
| 김 | 대 | 중 | 김 | 정 | 일 | | |

(2)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서

2000.4.8

남북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중에 절차문제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00년 4월 8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3) 남북합의서 개최 실무절차 합의서

2000. 5. 18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4월8일 합의서에 따라 4월 22일부터 5월18일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지고 실무절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30명으로 한다.
-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2. 상봉 및 회담 형식과 횟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3회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3. 상봉 및 회담 의제

상봉 및 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한다.

4. 체류일정

-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0년 6월12일부터 6월14일까지 2박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0일 전에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5. 선발대 파견

① 남측은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12일전에 북측지역에 파견한다. 남측 선발대는 필요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여 왕래할 수 있다.

② 남측 선발대의 체류일정과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는 남측 선발대의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왕래절차

① 남측 대표단의 왕래는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되 항공로로 하는 경우에는 남측 비행기로 하며 육로로 하는 경우에는 북측 자동차로 한다.

② 남측 선발대는 북측 자동차를 이용하며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③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넘겨주며 선발대의 경우에는 방문 4일 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며 그 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7. 편의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관문점을 통하여 1일 2회의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8. 신변안전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관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침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9.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10. 상봉 및 회담장 표지 및 시설

①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 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② 상봉 및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의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 북측은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 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11. 상봉 및 회담 기록

쌍방은 상봉 및 회담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12. 상봉 및 회담 보도

① 상봉 및 회담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할 수 있다.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치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③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를 위하여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

13. 기자의 취재활동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한다.

14. 기타 실무절차 문제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회선과 함께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다.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5.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5월 18일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준비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 양영식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준비접촉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참사 김령성

◆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0.7.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한다.

첫째, 남북장관급회담은 쌍방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둘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셋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민족 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한다.

4. 남과 북은 총련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부터 8월 31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0년 7월 31일

서울

(2)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0.9.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8월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 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올해 안에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 사업을 두차례 더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 적십자 단체들이 곧 토의하며 이와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쌍방 전문가들의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진다. 그리고 남측은 북측이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4.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남과 북은 백두산, 한라산 관광단을 각기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오는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에 보낸다.

7. 남과 북은 제 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라산에서 개최한다.

장관급회담 대표단의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2000년 9월 1일

평 양

(3)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0.9.3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9월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후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여러 차례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적인 사업들을 계속 폭넓고 깊이 있게 협의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금년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평가하고 투자보장과 이중과제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해결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협의·설치한다.

5. 남과 북은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바탕위에서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정기적으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시범적으로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등의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는 문제를 제의하였고, 북측도 위의 제안을 포함하여 교류 협력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하기로 한다.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2000년 9월 30일
제주도

(4)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0.12.16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이 위원회는 각기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단장)로 하여 5-7명으로 구성하며, 2000년 12월 26일경에 첫 접촉을 평양에서 하되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2. 남과 북은 어업부분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금강산 지역에서 접촉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과 서신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확인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

6. 북측은 한라산관광단을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7. 남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방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0년 12월 16일

평 양

◆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2000.9.26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회담이 9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남측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대한민국 조성태 국방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들과 북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차수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당면 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 9. 26

제 주 도

2000. 9. 14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가 2000년 9월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다.

남과 북은 이번 방문기간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지고 현재 남북간에 제기되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두 분 정상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시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데 대해서 환영하였다.
3.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치기로 하였으며, 이들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을 교환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을 9.20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올해 2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4.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25 서울에서 개최하며, 빠른 시일 내 이를 타결기로 하였다.

5. 남북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기공식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6. 북측은 15명 정도 규모의 경제시찰단을 10월중 남측에 파견하기로 하였다.
7.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금년 내 남북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0년 9월 14일

◆ 남북경제협력 관련

(1)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2000.9.26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2000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경제협력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실무접촉에서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키로 하였다.

쌍방은 투자보장 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 대한 토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였으며, 합의서 초안에서 나타난 차이점들을 제2차 접촉에서 합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사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데 따라 앞으로 실무접촉에서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2차 접촉은 10월 18일 평양에서 갖기로 하였다.

2000년 9월 26일

서 울

(2)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2000. 12. 16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 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청산결제의 대상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 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거래상품과 한도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당해 연도의 상품거래 시작 전 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은행 선정과 청산계정 개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 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제4조 신용한도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제5조 결제통화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제6조 청산기간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 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 결제기간 다음해 3월31일까지 청산한다.

제7조 결제절차와 방법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일반결제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제9조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해결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방측에 통보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
|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
|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 북 측 대 표 단 단 장 |
| 대 한 민 국 |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
|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 |
|-------------|--------------|
| 2000년 | 주체 89(2000)년 |
|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 력사적인 공동선언 |
| 용역거래대금 | 봉사거래대금 |
| 당해 연도 | 해당 년도 |
| 청산계정 | 청산돈자리 |
| 미달러화 | 미달러 |
| 청산결제기간 | 청산결제주기 |
| 자본의 이동 | 자금이동 |
| 장관급회담 | 상급회담 |
| 서명 | 수표 |
| 발효 | 효력발생 |
| 문본 | 문건 |
| 효력을 발생한다 | 효력을 가진다 |

(3)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투자자산"이란 남과 북의 투자자가 상대방의 법령에 따라 그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동산,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재산권

나. 재투자된 수익금, 대부금을 비롯한 화폐재산과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청구권

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의장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지적재산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
라. 지분, 주식, 회사채, 국공채 등과 같은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리

마. 천연자원의 탐사, 채취 또는 개발을 위한 허가를 비롯하여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바. 이 밖에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자산 투자 또는 재투자된 자산의 형태상 변화는 투자를 받아들인 일방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한다.

2. "투자자"란 일방의 지역에 투자하는 상대방의 법인 또는 개인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가. 일방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회사, 협회, 단체 같은 법인

나. 일방에 적을 두고 있는 자연인

3. "수익금"이란 이윤, 이자, 재산양도소득, 배당금, 저작권 또는 기술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투자의 결과로 생기는 금액을 의미한다.

4. "기업활동"이란 투자재산과 수익금의 관리, 기업의 청산 등을 포함한 활동을 의미한다.

5. "지역"이란 남과 북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6. "자유태환성 통화"란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제2조 허가 및 보호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

이 경우 투자의 실현,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

2.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한다.

3. 남과 북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투자를 승인한 경우 투자승인을 거친 계약과 정관에 의한 상대방 투자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한다.

제3조 대우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방 투자자와 그의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에 대하여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주는 것과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준다.

2. 남과 북은 관세동맹, 경제동맹, 공동시장과 관련한 협정, 지역 및 준지역적 협정, 2중과 세방지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대우나 특전, 특혜를 상대방 투자자에게 줄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

제4조 수용 및 보상

1.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고 한다)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부터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와 차별하지 않는 조건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속하고 충분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해준다.

2. 남과 북은 수용조치를 취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일반 상업이자율에 기초하여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보상금을 보상받을 자에게 지체없이 지불한다.

보상금의 크기는 수용과 관련한 결정이 공포되기 직전 투자자산의 국제시장가치와 같다.

3. 남과 북은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상대방 투자자의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보상함에 있어서 자기측 투자자나 다른 나라 투자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제5조 송금

1.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자유태환성통화로 자기 지역 안이나 밖으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보장한다.

가. 초기 투자자금과 투자기업의 유지, 확대에 필요한 추가자금

나. 이윤, 이자, 배당금을 비롯한 투자의 결과로 생긴 소득

다. 대부상환금과 그 이자

라. 투자자산의 양도나 청산을 통한 소득

마.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지역의 기업에 채용된 상대방 인원들이 받은 임금과 기타 합법적 소득

바. 제4조, 제7조 제1항에 따르는 보상금

사. 제6조에 따라 어느 일방 또는 그가 지정한 기관에 지급되는 자금

아. 이 밖에 투자와 관련된 자금

2. 송금시의 환율은 투자가 이루어진 일방의 외환시장에서 당일에 적용되는 시세에 따른다.

3. 송금은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있는 일방의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대위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자기측 투자자에게 제공한 비상업적위험에 대한 재정적 담보에 따라 해당한 보상을 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 혹은 그가 지정한 기관이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하며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세금납부의무를 비롯한 투자와 관련된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분쟁해결

1. 이 합의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로 상대방 투자자와 일방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는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하여 구성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남과 북의 당국은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2.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분쟁은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해결한다.

제8조 다른 법, 협정 및 계약과의 관계

투자과 관련하여 이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일방의 법령이나 남과 북이 당사자로 되는 국제협정 또는 일방과 투자자 사이에 맺은 계약은 그 법령, 협정 및 계약에서 유리하게 규정된 조항에 한하여 이 합의서보다 우위에 놓인다.

제9조 정보제공

1. 남과 북은 투자와 관련하여 제정 또는 수정·보충되는 법령을 상호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투자자료와 관련하여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0조 적용범위

합의서는 효력발생 이전 혹은 이후에 쌍방의 투자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한 모든 투자에 적용한다.

그러나 합의서의 발효 이전에 생긴 분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정 및 보충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2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발생 및 폐기

-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3. 합의서의 효력기간 안에 투자된 자산은 이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진 날부터 10년간 제1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보호와 대우를 받는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
|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
|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 북 측 대 표 단 단 장 |
| 대 한 민 국 |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
|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보장(제목에서) | 보호(제목에서) |
|-----------------|----------|
| 투자자산 | 투자재산 |
| 지분 | 출자몫 |
| 의장권 | 공업도안권 |
| 천연자원 | 자연부원 |
|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권 | 기업리권 |
| 국공채 | 공채 |
| 법령 | 법 |
| 법인 | 실체 |
| 자연인 | 개별적인 사람 |
| 수용 | 몰수 |
| 외환시장 | 외국환자시장 |
| 자유태환성통화 | 전환성화폐 |
| 정관 | 규약 |
| 서명 | 수표 |

(4)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0. 12. 16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분쟁해결의 원칙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남과 북은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 중재위원회의 기능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남과 북의 당사자 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 사이에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기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으로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한 사무 처리

3.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정 및 수정·보충

4. 제5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5. 제10조 제3항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

6. 이 밖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기능

제4조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 형식

중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5조 중재인명부의 작성과 교환

1. 중재위원회에서 쌍방은 각각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상호 교환한다.
2. 쌍방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의 중재인 가운데서 변동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도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6조 중재인의 자격

중재인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중재인의 활동 보장

남과 북은 선정된 중재인이 자기에게 부과되는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8조 중재위원회의 분쟁사건 관할

중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분쟁사건을 관할한다.

1.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생긴 상사분쟁 가운데서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분쟁사건 중재합의는 어느 당사자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분쟁사건

제9조 중재신청

1. 중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자기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중재사건이 접수된 날로 한다.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자기측 기관을 지정한다.
2. 중재신청을 접수한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자기측 당사자가 피신청자로 되는 경우 중재신청 제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명으로 구성한다.
2.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중재인의 선정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선정된 2명의 중재인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한다.
3.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

사자의 요청에 따라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쌍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중재인명부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순번추첨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중재인 선정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일방의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중재장소의 결정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재장소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제12조 중재판정의 준거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령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라 중재판정을 한다.

제13조 중재판정의 방법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에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중재판정문에는 중재심리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사건해결과 관련한 주문, 준거법,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하며, 중재인이 서명·날인한다.

제14조 중재기간

중재판정은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중재판정의 비공개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중재판정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중재판정의 이행, 승인 및 집행

1.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 지역의 재판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 조정

1. 중재신청이 접수된 후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절차를 중지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2.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조정인 1명 또는 3명을 선정하며 조정절차와 방법은 조정인이 정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의 결과는 중재판정의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재판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조정인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절차는 종결되며 중재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 및 수정·보충

1.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9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9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합의서의 효력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제1조부터 제17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4.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
|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
|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 북 측 대 표 단 단 장 |
| 대 한 민 국 |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
|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 |
|---------------|-----------------|
| 중재판정 | 재결 |
| 중재인 | 재결원 |
| 의장중재인 | 책임재결원 |
| 중재판정부 | 재결원협의회 |
| 중재인명부 | 재결원명단 |
| 법령 | 법 |
| 활동 보장 | 사업 보장 |
| 국제법의 일반원칙 | 공인된 국제법의 기본원칙 |
| 구성하다 | 내오다 |
|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 |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 |
| 서명 | 수표 |
| 문본 | 문건 |
|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 집행제도에 따라 집행을 보장 |

(5)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2000. 12. 16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 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1. "개인"이란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별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법인"이란 기업 및 회사, 과세목적상 법인과 같이 취급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3. "기업"이란 법인자격을 가진 실체 또는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4.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이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5. "고정시설"이란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6. "수송"이란 남과 북사이에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등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 일방 지역안에서만 운영되는 자동차, 열차, 배 또는 비행기에 의한 수송은 제외한다.
7. "권한있는 당국"이란 남측에서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북측에서는 재정성 또는 그의 전권대표를 의미한다.
8. 이 합의서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방의 세금관계법령이 규정한 대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합의서는 일방 또는 쌍방의 거주자인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세금의 종류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남측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나. 북측에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소득에 대한 지방세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세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 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4조 거주자 판정

1. 거주자에는 주소, 거소, 관리장소, 등록지,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금납부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방에 있는 원천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납부의무를 지니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쌍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개인을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이 일방에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가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나. 개인이 항시적으로 생활하는 주거를 쌍방에 가지고 있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많은 일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그는 일상적으로 체류하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3. 법인이 쌍방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일방의 거주자로 인정한다.
4.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판정

1.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소, 농장과 탄광, 광산, 채석장, 유전을 비롯한 천연자원채취장소를 포함한다. 6개월 이상 진행하는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치 또는 조립공사와 그와 연관된 설계 및 감리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한다.
2.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보관, 전시, 인도인수, 임가공과 광고, 정보수집 같은 보조적 및 예비적 성격의 활동에 이용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일방에서 상대방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일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제2항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한다고 하여 그 기업이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개인 또는 위탁판매인이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 기업은 상대방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5. 일방의 기업과 상대방의 기업이 지배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다.

제6조 부동산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속된 재산, 토지 및 산림이용권,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천연자원채취권, 농업과 임업에 이용하는 가축과 설비는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배와 비행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합의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동산항목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규정한다.
3. 제1항은 부동산을 직접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이용하여 얻은 소득에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3항은 기업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소득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일방의 기업과 같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같은 업종의 활동을 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분리된 기업이라면 일방의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윤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이 얻은 이윤의 계산은 총수입에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고정사업장 운영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4.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이 제공한 지적소유권 및 자문용역제공의 대가로 주는 사용료, 수수료,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불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고정사업장이 자기가 속한 기업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얻은 이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의 이윤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6.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계산은 충분한 변경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
7. 기업이윤에 대하여 다른 조항들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 수송소득

1.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같은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도 법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50%를 감면한다.
3. 수송소득에는 컨테이너를 포함한 수송수단의 이용 또는 임대로 얻은 소득도 포함한다.
4. 제1항과 제2항은 공동경영, 공동출자, 국제적인 경영체에 참가하여 얻은 이윤에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이윤

1. 다음의 특수한 조건으로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가 다른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어느 한 기업에 생기는 이윤에 대한 세금은 그러한 조건들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이윤을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가.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의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나. 쌍방의 기업이 공동으로 일방 또는 상대방에 있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경영관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2. 상대방의 기업이 상대방에서 세금을 납부한 이윤을 일방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일방은 이 두 기업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기업들 사이의 관계와 같으면 그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서의 다른 조항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들이 협의한다.

제10조 배 당 금

1.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배당금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금을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세금은 배당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납부한 이윤에 대한 세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배당금에는 주식 또는 채권청구가 아닌 이윤분배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일방의 법령에 따라 그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합병, 합작을 비롯한 공동기업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분배하는 소득이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이 발생하는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일방의 거주자인 법인이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분배하지 않거나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윤을 얻은 경우 그것이 상대방에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분배하지 않은 이윤과 배당금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1조 이자소득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이자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이자에는 국채, 공채, 사채를 비롯한 채권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포함된다.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덧붙는 금액, 장려금과 같은 소득도 이자에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이자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이자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자지불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자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이자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긴 이자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이자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에 의한다.
7.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에서 발생하여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사용료가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법에 따라 그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받을 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세금은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사용료에는 영화필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를 비롯한 과학, 문학, 예술분야의 저작권과 특허, 상표, 도안, 발명, 설계도면, 비밀 공식 및 공정의 이용 또는 그 이용권, 산업, 상업, 과학분야의 설비 사용 또는 그 사용권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으로 받은 대가가 포함된다.
4. 일방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것이 발생하는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받은 사용료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를 적용한다.
5. 사용료 지불자가 일방의 거주자이면 사용료는 일방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지불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니고 그것을 지불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불자의 거주지에는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료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한다.
6. 사용료 지불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 또는 그들과 다른 개인 또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수관계로 생기는 사용료가 그러한 관계가 없이 이루어진 사용료 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에 대한 세금의 부과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과 일방의 법령에 의한다.

제13조 재산양도소득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있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롯한 권리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하거나 그곳에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일방의 거주자가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와 그것에 이용되는 재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5. 앞 항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자가 거주한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곳에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183일 이상 체류하면서 독립적 인적용역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에는 과학, 교육, 문화, 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의사, 변호사, 기술사, 건축가, 회계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의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다음의 경우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가. 수취인이 12개월중 한번 또는 여러번에 걸쳐 상대방에 183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나. 보수가 상대방에 거주하지 않는 고용주나 그를 대신하여 지불되는 경우

다. 보수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지불되지 않는 경우

3. 제1항과 제2항에 관계없이 일방의 기업이 남북사이에 운영하는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에 의한 수송에 종사하여 얻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4.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일방의 당국을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의 거주자가 상대방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받은 보수와 기타 지불금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예술인과 체육인의 소득

1. 일방의 거주자인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상대방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2. 예술인 또는 체육인이 얻은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제7조, 제14조, 제15조에 관계없이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예술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쌍방 당국의 합의 또는 승인에 따라 수행된 경우에는 그들의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서 세금을 면제한다.

제18조 연금

일방의 거주자가 과거의 고용과 관련하여 받은 연금과 기타 보수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제19조 학생과 실습생의 보조금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학생 및 실습생이 일방에 체류하면서 생활보장, 교육, 실습을 위해 받는 보조금 또는 장학금, 일방의 밖으로부터 보내온 금액에 대한 세금은 일방에서 면제한다.

제20조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1. 상대방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학술연구기관, 대학,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일방에 체류하면서 학술연구용역, 교수용역을 수행하여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은 그가 도착한 날부터 2년간 일방에서 면제한다.
2. 학술연구 및 교수용역이 공적이익이 아니라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

1. 앞 조항들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득을 일방의 거주자가 얻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된 지역에 관계없이 일방에서만 부과한다.
2. 일방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에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하거나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얻은 소득이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7조 또는 제14조에 의해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3조 차별금지

1. 일방은 같은 조건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에게 자기 지역의 거주자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일방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기업에게 그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는 자기의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일방이 자기의 거주자처럼 상대방의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공제, 감면, 면제하여 줄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3. 일방의 기업이 자기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와 이와 유사한 지급금을 그 기업의 이윤계산에서 공제하면 상대방 거주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제9조제1항,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대방의 한명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경우 일방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일방의 다른 기업보다 더 불리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제3조에 규정된 세금들에만 해당된다.

제24조 합의절차

1. 개인 또는 법인은 합의서와 어긋나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거주한 지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의 제기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안으로 하여야 한다.
2. 의견을 제기받은 권한있는 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의 권한있는 당국과 합의하여 해결한다.
3. 합의서의 해석과 적용, 이중과세방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남북장관급회담과 그가 정한 기구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25조 정보교환

1. 쌍방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 관련되는 세금관계법령을 비롯한 기타 정보들을 상호 제공한다.
2. 입수한 정보는 이 합의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만 이용한다.
3. 일방은 법률적 및 행정적 조치와 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상대방에 요구하지 않는다.

제26조 수정·보충

필요한 경우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27조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제27조 효력발생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제28조 유효기간

1. 합의서는 일방이 폐기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합의서를 폐기하려는 일방은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임의의 해의 6개월전에 효력을 중지한다는 것을 상대방에 통지할수 있다.

2. 합의서가 폐기되면 다음의 사항들은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기타의 세금에 관하여는, 합의서의 종료 통고가 있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이 합의서는 2000년 월 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
| 남측을 대표하여 남북장관급회담 | 북측을 대표하여 북남상급회담 |
|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 북 측 대 표 단 단 장 |
| 대 한 민 국 |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
| 통 일 부 장 관 박 재 규 | 내 각 책 임 참 사 전 금 진 |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 |
|----------|----------|
| 고정사업장 | 고정영업장 |
| 사업활동 | 경영활동 |
| 영위 | 진행 |
| 인적용역을 제공 | 봉사활동을 진행 |
| 권한있는 당국 | 해당기관 |
| 거주자 판정 | 거주자 확정 |

| | |
|--------------------|----------------|
| 주소, 거소, 관리장소 | 거류지, 거주지, 운영지 |
| 생활하는 주거 | 생활하는 살림집 |
| 실질적인 관리장소 | 실제적인 경영지 |
| 건축장소, 건설, 설치, 조립공사 | 건설장, 설치, 조립장 |
| 재화 | 물품 |
| 지배관계 | 종속관계 |
|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이용 | 독자적인 개인봉사활동 리용 |
| 컨테이너 | 짐함 |
| 국제적인 경영체 | 국제적인 운영체 |
| 조정 | 조절 |
| 발생 | 조성 |
| 수익적 소유자 | 수익자 |
| 국채 | 정부유가증권 |
| 사용료 | 지적소유권사용료 |
| 대가 | 료금 |
| 독립적 인적용역 | 전문봉사활동 |
| 변호사, 기술사, 회계사 | 법률가, 공학가, 부기원 |
| 급여 | 로임 |
| 지급받은 보수 | 로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 |
| 수취인 | 수납인 |
| 귀속 | 이전 |
| 교원과 연구원의 소득 | 교원과 연구사의 소득 |
| 학술연구기관 | 과학연구기관 |
| 학술연구용역 | 학술연구사업 |
| 지배 | 관리 |

◆ 남북적십자회담 관련

(1)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2000. 7. 3

남북적십자단체대표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① 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한다.
- ②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 ④ 쌍방은 방문단 후보자 명단을 방문 30일전에 각기 200명씩 교환하며, 그 중 생사·소재를 확인한 후 확정된 방문자 명단을 방문 20일전에 통보한다.
- ⑤ 쌍방은 지원인원, 취재기자를 포함한 방문단 최종 명단을 방문 7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⑥ 방문단 교환 절차는 1985년 방문단 교환 관례에 따르며, 교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2.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 ② 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협의·확정한다.

3. 비전향장기수 송환

- ①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한다.

②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③ 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명단을 넘겨받은 다음 확인한 데 따라 송환 10일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한다.

④ 비전향장기수 송환 절차는 1993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대 한 적 십 자 사
사 무 총 장 박 기 룬

「북남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북 남 적 십 자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적 십 자 회 중 앙 위 원 회
상 무 위 원 최 승 철

(2)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2000.9.23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의 세부 이행절차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교환

① 제2차 방문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박 3일간씩 동시 교환한다

②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2. 생사·주소확인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며, 그 이후부터는 교환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② 쌍방은 상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 명단에 대해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즉시 개시하고, 그 결과는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상대측에 통보한다.

③ 명단 및 결과통보 양식은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르되, 명단에는 신청자의 현주소를 포함시키고, 결과 통보서에는 대상자의 현주소 및 사망일자(사망시)등을 포함한다.

3. 서신 교환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 데 따라 그들 사이의 서신 교환을 진행한다.

② 쌍방은 시범적으로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그 구체적 문제는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한다.

4.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쌍방은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5.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6.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9월 23일

남북적십자회담
남 측 대 표 단
수석대표 박기륜

북남적십자회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최승철

※ 7·4 남북공동성명

1972.7.4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장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1972년 7월 4일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1992.2.19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관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

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 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

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4. 남북관계 주요일지(1998~2000)

1998년

- 1. 7 북적 위원장대리 이성호, 정원식 한적 총재 앞으로 보낸 방송편지를 통해 비전향장 기수 송환 요구
- 1.17 북한, KBS의 「진달래꽃 필때까지」 방영 보복 경고
- 1.20~24 KEDO-북한 고위전문가회의(북한 향산호텔)
- 1.22 한·미차관보급 정책협의회 개최
- 2.5 KEDO, 북한 신포지구 해양환경영향 조사 실시
- 2.5 미국, '98년분 대북 식량지원 20만톤 지원 발표
- 2. 5~6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뉴욕)
- 2.12 유엔, 4억불 규모의 제4차 대북지원 계획 발표
- 2.15 북한 사회안전부, 이산가족 주소안내소 설치 발표
- 2.17 인공위성(ASIASAT II) 이용 남북한간 관제 통신망 개통(1회선)
- 2.18 북한, 정당·단체 연합회의 개최
- 2.19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조선 정당 단체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달 관련 연락관 접촉 제의
- 2.19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북측의 편지접수 수락
- 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제의
- 3. 1 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사
 - 남북특사교환 촉구,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실현 촉구
- 3. 9 정부, WFP를 통한 옥수수기준 5만톤 식량지원 발표
- 3.10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대북지원 관련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제의
- 3.11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 제의 관련 수정 제의

- 3.13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수락 통보
- 3.14 4자회담 제2차 준비회의 개최(제네바)
- 3.16~21 4자회담 제2차 본회담 개최(제네바)
- 3.18 정부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 발표
 - 대북지원관련 방북, 이벤트성 모금행사, 언론·기업의 협찬,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 지원 허용
- 3.19~20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 3.25~27 대북구호물자 지원절차 협의를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 개최(북경)
 -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4. 4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비료지원 요청 관련 남북 당국대표회담 제의
- 4. 6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북한의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제의 수락 및 수정 제의
- 4. 7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장소 북경 고집
- 4. 8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북경 개최 동의 및 대표단 명단 통보
- 4.10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대리, 대남서한 발송
 - 남북당국대표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
- 4.11~17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북경)
- 4.23 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FIR) 통과 항로 이용개시
 -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 개최(뉴욕)
- 4.30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시행
 - 대기업·경제단체의 수시방북제도 확대
 - 승인을 요하는 품목 축소 및 생산설비 반출제한 완화
 - 투자업종·규모제한의 완화
- 5. 2~12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 공연

- 5. 5~9 KEDO-북한간 제5차 고위전문가 회의 개최(묘향산)
- 5. 8 KEDO, 북한 실폴지구 해양환경영향 조사 실시
- 5. 8 EU, 북한 농업실태 조사단 파견
- 6. 1~2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 6.15 북한, 8·15 대축전 관련 대남 편지 전달을 위한 연락관 접촉 제의
- 6.15 8.15 대축전 관련 북측 편지 접수
- 6.16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한우 500두 대북지원(판문점 경유)
- 6.22 강인덕 통일부장관, 8·15경축행사 관련 실무접촉 제의
- 6.22 합동참모본부, 북한 잠수정 1척 동해안에서 예인 발표
- 6.23 판문점 장성급 회담
- 6.28~29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브라셀)
- 6.30 판문점 장성급 회담
- 7. 9 자유의 집 준공
- 7.12 묵호에서 북한 무장간첩 시신 발견
- 7.15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서 통해 잠수정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한 시인·사과, 재발방지 등 촉구
- 7.27~28 경수로 재원분담관련 KEDO집행이사회(뉴욕, 가서명)
- 7.29 통일부, 남북기본합의서 유효입장 재확인 발표
- 8.15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
 - 대북정책 3대원칙 견지, 모든 경제협력 지원 권장,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 촉구, 장·차관급의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 제안, 대통령 특사 평양 파견 용의
- 8.18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설립
- 8.20 북한 조평통, 8·15 경축사 대북제안에 대해 공개질문장을 통해 사실상 거부

- 8.21~9. 5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뉴욕)
- 8.31 일본, 북한의 로켓 발사사건에 대응하여 「재원분담결의안」 동의 유보
- 9. 1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
- 9. 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결성
- 9. 5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개막
- 9. 7 「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 협력사업 승인
- 9.10 미·북, 제네바합의 이행 관련 합의
 - 중유공급 9월 하반기 재개, 연말까지 공급 완료
 - 연변 폐연료봉의 봉인작업 재개
- 9.10 대구 비행정보구역 통과 일본-북한간 직항로 운영 개시
- 9.18 정부,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 지원 허용
- 9.20 북한 평양방송,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한국정부의 의도적 불순물 투여 주장
- 9.23 제8기 제2차 「통일자문회의」 회의 개최(서울올림픽 제1경기장)
- 9.2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개소(이북5도위)
- 9.30 국군포로 장무환씨 귀환
- 10.16 북한, 정주영 지원 한우 폐사 관련 현대측에 아·태평화위 서기장 명의 해명문건 통보
- 10.21~10.24 4자회담 제3차 본회담 개최(제네바)
- 10.27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기탁2차분 한우 501두 대북지원
- 10.31~11. 7 윤이상 통일음악회 개최(평양)
- 11. 9 KEDO집행이사회(뉴욕)
 - 재원분담결의안 채택
- 11.17 금강산 관광지원을 위한 통신망 개통(6회선)
- 11.18 현대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 12. 1 제198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북결의안 채택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촉구
 -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사찰수용 촉구 결의안
- 12.13 통일부 대변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7주년 관련 논평 발표
 -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촉구
- 12.14 국회결의안 대북서한 발송
 -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 촉구

1999년

- 1. 1 김대중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방과 공조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겠지만,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용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
- 1. 4 김대중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통일안보관련 3대 목표와 기본방향 결정
 -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② 남북 화해·협력 지속 추진, ③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 강화
- 1.15 정부, 현대의 금강산개발계획 승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 한반도 문제의 남북당사자 해결 및 4자회담의 성공적 진전이 긴요함을 재확인
 - 북한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 허용 재강조
- 1.16~24 미·북 금창리핵의혹시설 관련 제3차 협상(제네바)
 - * 미국 : 카트만 한반도평화회담 특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북한은 보상의 다른 형식으로 ‘정치·경제적 혜택’을 언급
 - 미국은 보상은 불가하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용의가 있음을 표명
- 1.19~22 제4차 4자회담(제네바)
 - 평화체제 및 긴장완화분과위 개최
- 1.30~2.6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교수 방북
 - 북한 1천여개 마을에 개량 옥수수 재배키로 북측과 합의 발표
- 2. 3 북한,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고위급정치회담 제의
 - 선행 실천조건으로 ① 외세와의 공조 파기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 ② 국가보안법 철폐 ③ 통일애국단체·인사들의 활동 보장 제시
- 2. 9 한·미·일 대북정책협의회 개최(서울)
 - 미·북간 금창리협상 조기타결 희망, 북한의 대포동 2호 추가실험이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표명
- 2.10 정부,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발표
- 2.11 판문점 제4차 장성급회담 개최
- 2.22~3.11 현대그룹 서해안 공단 실무협의단 23명 방북

- 2.27 미·북 금창리핵의혹시설 관련 제4차 협상 개시(뉴욕)
- 2.28 금강산 휴게소 및 공연장 준공
 - * 분단후 최초로 설립된 남북공동 민간 건축물
- 3. 9~11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판문점 통과 방북
- 3. 9 판문점 제5차 장성급회담 개최
- 3.11 대한적십자사, 대북비료지원을 위한 모금 계획 발표
 - 3.15 부터 6.15 까지 모금활동 전개 방침
- 3.16 미·북 금창리핵의혹시설 관련 제4차 협상 타결(뉴욕)
 - * 미국 : 카트만 특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북한은 '99년 5월 미국 조사단의 금창리 시설 최초 방문 및 추가 방문을 허용
 -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을 지원
 - 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
- 3.17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 촉구 국회결의안 및 국회의장 서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통해 북측에 전달
- 3.25 외교통상부장관,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내 인권문제 제기
- 3.29~30 제4차 미·북 미사일 협상(평양)
 - * 미국 :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 북한 : 한창언 외무성 북미국장
- 3.30 대한적십자사, 대북비료 5,000톤 지원 계획 발표
- 3.31 남북한 화물선, 스리랑카 해안에서 충돌
- 4.10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관련 남북 수목전문가 접촉(금강산)
- 4.23 남북 비공개접촉 개시(북경)
- 4.24~27 제5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 4.26 김대중대통령, 남북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6자회담 성사를 찬성한다고 언급
 - * 겐나디 셀레즈노프 러시아 하원의장 면담
- 4.28~5.4 민주노총 대표단 방북
 -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등 논의

- 5. 5 김대통령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과제’ 제시
 - * CNN 주최 제10회 세계언론인 국제회의 위성회견
 - ①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 ② 남북간 화해·협력, ③ 북한의 대외개방 환경조성, ④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⑤ 정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로의 전환
- 5.14~15 미 카트만 특사 방북, 금창리 현장조사 협의
- 5.18~24 금창리 현장조사를 위한 조사단(단장 : 미 국무부 조엘위트 과장) 방북
- 5.25~28 페리 대북조정관 방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
 - * 김영남, 최태복, 김계관 등 면담
- 5.28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 북한 금창리의 지하핵의혹시설 건설기록에 대한 조사결과 북한이 '94년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
- 5.31 통일부,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 신청 절차 간소화 발표
- 6. 3 남북 비공개 접촉에서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 등 합의(북경)
- 6.3~6.7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중국 공식 방문
 - 장쩌민 국가 주석 면담, 상해 등 지방도시 방문
- 6.8~6.15 북측 경비정 6척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 6.10 정부, 대북비료 20만톤 지원에 필요한 자금중 민간모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결정
- 6.15 북측과 우리측 해군 서해상에서 교전 사태 발생
 - 판문점 제6차 장성급회담 개최
- 6.16 북 조평통 대변인, 남한측 인사 평양방문 제한 발표
- 6.20 북한, 금강산 관광객 1명 억류, 6.25 석방
 - * 6.22부터 금강산 관광 중단, 8.5 재개
- 6.22~26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북경)
 - * 남 : 양영식 통일부 차관, 북 : 박영수 내각 참사
- 6.23~24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베이징)
 - * 미 : 카트만 특사, 북 : 김계관 외교부 부상
- 6.25 정부, 금강산 관광관련 ‘선(先) 안전보장 후(後) 관광재개’ 방침 발표

- 6.28 현대, 아·태측과 금강산관광객 안전보장협의 착수(북경)
- 7.1~3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북경)
 - * 남 : 양영식 통일부 차관, 북 : 박영수 내각 참사
- 7. 2 판문점 제8차 장성급회담 개최
 - 한국 정부, KEDO에 32억 달러 차관 공여 서명
- 7. 4 민화협, 남북 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제의 발표
- 7. 8 탈북주민 정착지원시설 「하나원」 개원
- 7. 9 현대 장전항 건설 인력 108명 방북
- 7.21 판문점 제9차 장성급회담 개최
- 7.25~29 남북청년학생 통일세미나 개최(북경)
- 8. 1 통일부, 금강산 관광 8월 5일부터 재개 허용 발표
- 8.3~9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제네바)
 - * 미 : 카트만 특사, 북 : 김계관 외교부 부상
 - 북측의 미사일 발사 문제 협의
- 8.5~9 제6차 4자회담 개최(제네바)
- 8.9~8.14 민주노총 축구선수단,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참가차 방북
 - 남북노동자축구대회(8.12~13, 평양)
- 8.11 정부, 한적 총재 명의 대북서한을 통해 임진강 수계의 남북공동수해방지 추진을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 제의
- 8.12 정원식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28주년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키로 한 '6.3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
- 8.15 김대중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안보와 화해가 같이 정착되어야 하며,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 「'99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겨레 손잡기 대회」 개최(서울 서대문~경기도 파주군 통일대교 : 53km)
 - 북,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개최
- 8.16 경수로기획단, KEDO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수로부지공사를 12월 15일까지 4개

월 연장기로 했다고 발표

- 8.17 판문점 제10차 장성급회담 개최
- 8.18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과 미사일협상 용의 표명
- 8.20 캐서린 버티니 WFP 사무국장,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기근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정상적인 상황에는 훨씬 못미친다'고 언급
- 8.23 한·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 군사사절단 정례 교환 방문 합의한·일 외무장관회담 개최
 - 북한 미사일 관련 한·미·일 공조 확인
- 8.31 북한적십자회, 비전향 장기수 송환 요구 서한 발송
- 8.31~9.7 원로화가 10명, 북녘 산하기행차 방북
- 9. 1 판문점 제11차 장성급회담 개최
- 9. 2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서해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
 - '서해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러 국방장관회담 개최
 -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의 안정에 저해된다는 인식 확인
- 9. 3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발표
 - 우리 정부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고수방침 재확인
- 9.7~12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 및 타결(베를린)
 -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미국은 대북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
- 9.14 북한 외무상 백남순 일행, 제54차 유엔 총회 참가차 뉴욕 방문
- 9.15 미 페리 조정관, 의회에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 보고
 - 향후 대북정책은 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 유도과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단기) ②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보장(중기) ③ 한반도 냉전 종식(장기) 등 3단계로 추진
 - 당면한 5개 정책 ①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의 대북 정책 ② 미 정부의 대북 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인사의 조정관 임명 ③ 한·미·일 공조를 위한 고위정책조정그룹(TCOG) 유지 ④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⑤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에 대비 제시
- 9.17 미 클린턴 대통령, 대북경제제재 해제 발표

- 적성국 교역법,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등 3개 법안에 의해 규정된 ① 물자수출입 ② 금융거래 ③ 투자 ④ 북·미간 항공기·선박 운항 분야의 제재조치 해제
- 그러나 테러국 지정, 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인 ① 무기·방산 물자 수출 금지 ② 원조 금지 ③ 최혜국 대우·일반 특혜관세(GSP)·수출입은행 보증 금지는 제외

- 9.18 국가안전보장상임위원회 발표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지지
- 9.20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국회 비준
- 9.20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핵 안전이행 촉구문 채택(빈)
- 9.22~24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한·일 방문
- 9.22 남북 임업전문가 회의 개최(북경)
 - 북한의 산림 복구문제 논의
- 9.24 일본 오부치 수상, 페리보고서 지지 표명
 - 북 외무성 대변인,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
- 9.25 북한 백남순 외상,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북회담 기간동안에는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언급
- 9.27 북한 백남순 외상, 기자회견에서 통일3대원칙과 북한의 협상제의에 남측이 응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언급
- 9.27~10.1 현대 농구대표단 남북통일농구대회 참가차 방북
 - 남북통일농구대회(9.28~29, 평양)
- 9.27~10.2 북한-KEDO간 고위급회담 개최(묘향산)
- 9.28~10.2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방북
 - 김정일 면담(10.1)에서 서해공단 개발문제 협의
- 9.29 현대그룹,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착공
- 10. 1 국제원자력기구(IAEA) 북에 핵안전협정이행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빈)
- 10. 3 김종필 국무총리, 개천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성실이행과 화해협력에 북한의 동참을 촉구

- 10. 4 4자회담 수석대표 교체(박건우 본부 대사→ 장재룡 차관보)
- 10.5~9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 북·중관계 수립 50주년 기념차 방북
* 백남순 외상 등과 회담
- 10. 8 미·북, 미군유해 평양에서 직접 인도·인수 합의
- 판문점을 통해 유엔사가 인수하던 관례 변경
- 10.14~17 한국수목보호연구회 방북, 금강산지역 솔잎혹파리 방제약 효과 조사
- 10.19 김대중대통령,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남북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피력
- 10.20~26 미 국무부 관리와 국제개발처 요원 방북
- 북한 식량분배 투명성 검증
- 10.21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침 개정
- 대북교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민간인 인도적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일
본, 경수로사업 재원분담금 협정 서명
- 10.22 통일부, 북한 위성TV 방송 시청 허용
- 통일교육원, 북한자료센터에서 시청 가능
- 10.23 주한외국인 대상 금강산 시범관광 실시
- 10.25 미국, 미군유해 4구 평양에서 직접 송환
- 10.26~27 남북한 해외학자 통일회의 5차회의 개최(북경)
- 10.29 담배인삼공사-광명성총회사, 담배 공동생산·판매 합의 발표
- 11.1~20 서해공단 후보지 조사단 16명 방북
- 신의주, 해주, 남포지역 시찰
- 11. 2 일본, 일·북간 전세기운항 동결조치 해제 발표
- 11.3~4 북, 제2의 천리마대진군 선구자대회 개최
- 11. 6 미국, 대북 중유 50만톤 지원 완료
- 11.6~13 김경재의원, 방북
- 통일음악회 개최 협의
- 11.9~16 김정배 고려대 총장 방북

- 2000년 개천절에 평양에서 단군학술토론회 개최 합의
- 11.15~19 미·북 고위급회담 개최(베를린)
 - * 미국 : 카트만 특사, 북한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11.15~19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겸 국제축구연맹(FIFA) 부위원장 방북
 - 월드컵을 비롯한 국제축구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 원칙적 합의, 그러나 월드컵 분산 개최는 곤란 확인
- 11.24 정원식 한적 총재, 북적 위원장에 편지 발송
 - 남북간 인도적 문제를 서로 공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의
- 12.1~3 일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등 초당파 의원대표단 방북
 - 김용순 당비서와 회담 및 오부치게이조 일본 총리의 친서 전달
- 12. 5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개최(평양)
 - 로저 클린턴과 한국가수들 참여
- 12.14 일본, ’ 98 미사일발사 이후 취했던 대북 제재조치 해제
- 12.15 KEDO, 한전과 경수로 주계약 체결
 - 한전은 1백만 Kw급 한국형 경수로 2기를 일괄도급 방식으로 제공
- 12.15~17 미·북 미군 유해 발굴 협상(베를린)
 - * 미국 : 앨런리오타 국방부 부과장, 북한 : 박임수 판문점 대표부 대좌
- 12.16 민화협, 판문점 남북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남북정당사회단체 공동회의」 개최 제의 서한 전달
- 12.19~20 일·북 적십자회담 개최(북경)
 - 대북 식량지원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 협의
- 12.20 「민족통일음악회」 개최(평양)
 - 남북예술인 공연 및 녹화중계 실시
- 12.21~22 일·북 수교 예비회담 개최(북경)
 - * 일본 : 아나미 고레스게 아시아 국장, 북한 : 오을록 제14국장
- 12.22~25 아·태평화위 농구대표단 62명(단장: 송호경) 서울 방문
 - 남북통일농구대회 개최(12.23~24, 서울)
 - 조선중앙TV 녹화중계(12.25~26)

2000년

- 1. 3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제의
- 1. 5 국가안전보장회의, 2000년 대북정책 3대 방향 결정
 - ①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②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③냉전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1. 12 한국담배인삼공사, 남북합작담배 '한마음' 남북 동시판매(3. 1) 발표

- 2. 1 한·미·일, 3자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회의 개최(서울)
- 2. 17 정부, 「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지침」 제정·시행
- 2. 22~25 KEDO-북, 고위 전문가회의 개최(평북 향산)
-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발표
 - 북한경제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추구,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당국간 대화 및 특사교환 촉구
- 3. 9 금강산 유람선(풍악호), 부산 다대포항 출항 시작
- 3. 17~4.8 남북 특사접촉(중국 상해, 북경)
 -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남) - 송호경 아·태 평화위 부위원장(북)
 -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 3. 23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획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6개항의 「5개섬 통항질서」 발표
- 4.10 남북 정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서울, 평양)
- 4.22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1차 회담(판문점)
 - 양영식 통일부 차관(남) - 김령성 최고인민회의 참사(북)
- 4.27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2차 회담(판문점)
- 5. 3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3차 회담(판문점)
- 5. 7 이헌재 재경부장관, ADB총회에서 회원국에 북한의 가입 협조 요청
- 5. 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4차 회담(판문점)
 - 5. 9~17 「문서교환 방식」을 통한 협의
- 5.13 남북정상회담 제1차 통신·보도 실무자 접촉(판문점)
- 5.16 남북정상회담 의전·경호 실무자 접촉(판문점)
- 5.17 남북정상회담 제2차 통신·보도 실무자 접촉(판문점)

- 5. 18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제5차 회담(판문점)
 - 남북합의서(2000.4.8)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합의서 타결
- 5.24~30 북한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 방문, 공연
- 5.29~31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 5. 29~6. 10 북한 평양교예단 서울 방문, 공연
- 5.31 남북정상회담 선발대(30명) 방북
- 6.13~15 남북정상회담 개최(평양),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 6.27~30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금강산)
- 7.26 남북 외무장관회담(태국 방콕)
- 7.29~31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서울)
 - 박재규 통일부 장관(남) -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북)
- 8.5~12 언론사 사장단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남북언론사들간 언론 교류 등 공동합의문 발표
- 8.8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장, 소 500마리와 함께 방북
- 8.14 남북 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 8.15~18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8.18~24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서울방문, 합동공연
- 8.22 현대·북한, 개성공단 개발관련 합의서에 서명
- 8.29~9.1 제2차 장관급 회담 개최(평양)
- 9. 2 비전향 장기수 63명 송환
- 9. 4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석 취소

- 9.6~8 김대중 대통령,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참가
- 9.6 한·중 정상회담 개최(뉴욕)
- 9.8 한·러 정상회담 개최(뉴욕)
- 9.11~14 북한 김용순 특사 남한 방문
- 9.15 남북선수단,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 공동입장
- 9.18 경의선 기공식(임진각)
- 9.20~23 제2차 남북적십자 회담(금강산)
- 9.22~27 조총련 동포(50명) 남측 고향방문
- 9.22~28 백두산 관광단(109명) 방북
- 9.25~26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제주도)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서울)
- 9.27~30 제3차 남북 장관급 회담(제주도)
- 9.28 정부, 대북식량차관제공 발표
- 10. 4 우리측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 조선무역은행간 「차관계약서」 체결
- 10.9~12 북한 조명록 특사, 방미
 - * 미·북 공동선언 발표(10.12)
- 10.9~14 남측 방문단,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관
- 10.15 현대아산, 북한 금강산 여관 30년 임대계약 체결
- 10.18 한·중 정상회담(서울)
- 10.20 아셈(ASEM) 정상회의,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서울)
- 10.23~25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차례 회담, 미사일 문제 등 협의

- 11.2 NS21,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필름 북측에 전달
- 11.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북한 현대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손수레 1만대 북에 보냄
- 11.8~11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평양)
 -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 가서명
- 11.11~19 영화인 11명 방북
- 11.16 북-유엔사 장군급회담(판문점)
 - 비무장지대(DMZ) 관리권 한국에 이양 합의
- 11.17~22 조총련동포(119명), 제2차 남측 고향방문
- 11.21 현대-북한, 서울-평양 민간 직통전화 개설
- 11.28 제1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경의선·도로연결공사 협의
- 11.30~12.2 제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서울, 평양)
- 12.5 제2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12.7 서울 가정법원, 북한 주민에 대해 남한 호적등재 승인
- 12.8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 12.11~14, 민주노총, 남북노동자 통일토론회 개최(금강산)
- 12.12~16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 개최(평양)
- 12.21 제3차 남북군사실무회담(판문점)
- 12.22 한국전력 공사, 현대건설 등과 북 경수로 주설비공사 계약체결 발표
- 12.27~30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개최(평양)

5. 남북관계 관련 웹사이트(Website)

◆ 남북관계 관련 웹사이트(Website)

| 분 류 | | 기 관 | s i t e |
|----------------|--|-----------------------|--|
| 국 내 | 정 부 | 통일부 | www.unikorea.go.kr |
| | | 통일교육원 | www.uniedu.go.kr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www.acdpu.go.kr |
| | | 남북회담사료 | dialogue.unikorea.go.kr |
| | | 북한자료센터 | unibook.unikorea.go.kr |
| |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 reunion.unikorea.go.kr |
| | | 청와대 | www.cwd.go.kr |
| | | 국가정보원 | www.nis.go.kr |
| | |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
| | | 국방부 | www.mnd.go.kr |
| | 연 구 소 · 대 학 | 통일학연구소 | www.onekorea.org |
| | | 세종연구소 | www.sejong.org |
| | | 통일연구원 | www.kinu.or.kr |
| | | 한국발전연구원 | www.hanbal.com |
| | | 남북통일문제연구소 | user.chollian.net/~yeoinsub |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www.kiep.go.kr |
| | | 평화문제연구소 | www.ipa.re.kr |
| | | 아태평화재단 | www.kdjpf.or.kr |
| | | 통일시대연구소 | www.rink.or.kr |
| | | 한국개발연구원 | www.kdi.re.kr |
| | | KOTRA | www.kotra.or.kr |
| | | 연세대 통일연구원 | suny.yonsei.ac.kr/~ikus |
| | | 고려대 북한학과 | welove.korea.ac.kr/~nokor |
| | | 명지대 북한학과 | unikorea.net/myongji |
| | | 동국대 북한학과 | uni21.dongguk.ac.kr |
| | | 관동대 북한학과 | www.kwandong.ac.kr/ ~unikorea/main.html |
| | | 이화여대 북한연구협동과정 | mm.ewha.ac.kr/~nk21 |
| | |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 www.kyonggi.ac.kr/~gsreunif |
| | | 경남대 북한대학원, 극동문제연구소 | ifes.kyungnam.ac.kr |
| | | 한양대 통일정책연구소 | www.dsr.hanyang.ac.kr/ lab/lab39.html |

| |
|--|
| 국 < |
|--|

| | | |
|---|----------------|---|
| 해 | 백악관 | www.whitehouse.gov |
| | 미국 CIA | www.odci.gov |
| | 미 의회 | www.house.gov |
| | 미 국방부 | www.dtic.mil/def/index.html |
| | 미 국무성 | www.hri.org/docs/usa.html |
| | 노틸러스 | www.nautilus.org/napsnet |
| | CSIS(국제전략연구소) | www.csis.org/index.html |
| | CCFR | www.ccf.org |
| | HOOVER | www.hoover.stanford.org |
| | RAND연구소 | www.rand.org |
| | HERITAGE재단 | www.heritage.org |
| | RIIA | www.riia.org |
| 외 | SIPRI(국제평화연구소) | www.sipri.se |
| |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www.fas.harvard.edu/~hoffman/dprk.html |
| | 오레곤대학 북한정보서비스 | darkwing.uoregon.edu/~felsing/ceal/welcome.html |